



도민과 함께 미래를
열어가는

충청남도 의회소식

VOL.
78



충청남도의회
CHUNGCHONGNAM-DO COUNCIL

도민과 함께 미래를 열어가는

충청남도 의회소식

78

CONTENTS



개회사	2
본회의	3
의정활동	4
하트이슈	6
의원논단	9
도정 · 교육행정 질문	10
5분 발언	38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47
주요안건 처리현황	56
연구 및 토론	66
포토의정	78
2018년도 의회운영 기본계획	82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입동을 하루 앞둔 오늘, 금년도 마지막 회기인 제300회 정례회를 맞아, 활기차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도민의 뜻을 대변하며 지역 발전을 위해 바쁜 의정활동을 수행해 오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고마운 인사를 드리면서, 금년에도 도정과 교육 행정을 이끌어 오신 지사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2017금산세계인삼엑스포'의 성공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주신 김석곤 위원장님과 김복만 의원님, 그리고 조직위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따뜻한 격려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국정감사 수감'과 '행정사무감사 준비'등으로 애써주신 많은 의원님들과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 수고 많으셨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에도 의원님들의 열정적인 모습을 기대하면서, 지방의회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다양하고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안희정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금년 한 해, 대내외적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서해안 시대의 중심을 꿈꾸는 우리 도가 착실히 앞으로 나아가는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 도시인 내포신도시도 아직 더디기는 하지만 조금씩 발전하는 모습을 보인 한 해였습니다.

특히, 환경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면서 쾌적한 대기질 속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고자 하는 도민의 염원이 커지는 시기였습니다.

아울러,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교육환경에 적극 대응하면서, 미래인재를 양성하고 교육 여건을 개선해 나가고자 매진해 온 시간이었다고 봅니다.

앞으로 적극적인 인구유입 정책 추진은 물론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여러분!

오늘부터 다음달 15일까지 40일간 진행되는 이번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과 '2018년도 예산안 및 2017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의·의결', 그리고 '각종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는 매우 중요하고도 바쁜 회기가 될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는 민생현장 중심의 의정경험을 바탕으로 도민의 입장에서 도정과 교육행정 전반을 살펴봐주시고, 합리적인 지적과 함께 앞으로의 발전방향과 대안도 함께 제시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추진 중인 정책과 시책에 대해 알찬 마무리를 해주시고,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도민의 관점에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며 안전하고 행복한 도민생활에 필요한 사업인지 심층적으로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모쪼록, 이번 정례회가 도의회와 집행부간 미래지향적인 조화 속에서 금년 한 해를 알차게 마무리하고, 희망찬 새해를 준비하는 소중한 회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겨울로 접어드는 길목입니다.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길 바라며, 도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7. 11. 6.

충청남도의회 의장

윤 석 우



충남도의회, 제300회 정례회 폐회... 49개 안건 처리

도민 삶과 밀접한 조례 35건 등 내년도 도정과 교육행정 살림살이 최종 의결
행정사무감사 통해 도정과 교육행정 정책 추진 성과 총체적 점검... 시정과 처리 요구

충남도의회는 12월 15일 제300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내년도 도정과 교육행정 살림살이를 확정하고 폐회했다고 밝혔다. 도의회는 특히 도민의 삶과 밀접한 조례 32건 등 총 49개 안건에 대해서도 처리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의 척도인 조례안 심의와 충남의 목은 현안 문제를 진단, 정책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무엇보다 민선 6기가 6개월여 남은 시점에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는 성과와 향후 발전 가능성 등을 총체적으로 점검했다.

도의회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총 359건의 현안 문제를 조목조목 짚으며 시정(57건)과 제언(136건), 처리(166건) 등을 요구했다.

실제 송덕빈 의원은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AI) 예방적 살처분 문제에 대한 시스템 개선을 촉구했고, 유병국 의원은 도 농어촌기금 운용 실적이 유명무실한 점을 질타했다.

김명선 의원은 농사랑 매출 실정이 편향된 점에 대해 개선을 요구했고, 유찬중 의원의 경우 폭행피해 구급대원에 대한 강제 휴무제를 제안했다.

도의회는 내년도 도정과 교육행정 살림살이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심의를 벌였다.

충남도도 도교육청 예산 총 9조9114억원(도 6조 6477억원, 도교육청 3조 2637억원)을 심의한 결과, 각각 93억 941만원, 157억 872만원을 삭감했다.

구체적으로 ▲행정자치위 소관 36억 6000만원(26건) ▲문복위 " 11억 7000만원(13건) ▲농경환위 " 24억 6000만원(5건) ▲안전해소위 " 20억 1800만원(5건) ▲교육위원회 " 157억 872만원(94건) 등이다.

윤석우 의장은 "올해 마지막 정례회는 민선 6기 결실을 점검하고 이를 도민에게 알리는 계기가 됐다"며 "민선 6기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도의회가 감시와 견제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2017년도 의정활동 결산

충남도의회, 지난 1년 간 도민의 대변 등 공부하는 의정상 정립

총 119일 회기 동안 184건의 안건 의결 등 각종 현안 해결 앞장... 의원발의 조례 58건
1395건의 자료 수집... 368건의 현안 문제 짚는 등 감시와 견제 대안 제시 '잘했다'

충남도의회는 26일 도의회에서 송년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년간 도민 복리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여론에 적극적으로 대변했다고 밝혔다.

특히 활발한 입법 활동과 선진 의정 실현, 공부하는 의정상 정립 등을 통한 지역균형발전에도 앞장섰다고 평가했다.

성과와 보람

지난 1년간 40명의 도의원 의정활동에는 언제나 지역 균형발전과 도민 삶의 질 향상이라는 단어가 따라 다녔다.

총 119일 회기 동안 184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는 등 각종 현안 해결에 앞장섰다. 구체적으로 '충남도 교육청 진로직업체험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지역 발전과 주민 복지 증진에 부합한 의원 발의 조례 58건이 제정됐다. 이는 지난해 의원발의 건수가 48건인 점을 고려할 때 약 21% 이상이 증가한 것이다.

지역 핵심 현안 문제를 파헤치기 위해서도 '다양한 수산작물제 신설 및 확대 촉구 결의안' 등 11건의 건의·결의안을 채택, 국회와 정부에 건의했다.

'의회의 꽃' 행정사무감사

도의회는 지난달 8일부터 21일까지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민선 6기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정책 추진 성과를 총체적으로 점검했다.

도의회는 행감을 앞두고 피감사기관에 총 1395건의 자료를 수집, 도민 제보를 접목해 현안 해결의 물꼬를 튼다는 계획을 세웠다.

그 결과, 총 368건의 현안 문제를 조목조목 짚으며 시정과 조속한 처리를 요구했다.



연구하는 의회상 정립

도의회는 지난 1년간 토론회 및 연구모임 활성화를 통해 지역 현안을 해결하는 등 도민 욕구를 충족하기에 여념이 없었다.

각 상임위는 행정·자치, 문화·복지, 농업·경제, 안전·건설, 교육 등 분야별 맞춤 현안을 선정했다. 총 16회에 걸친 의정토론회를 열고 전문가들로부터 정책을 조언 받는 등 현안 해결의 물꼬를 트는 데 일조했다.

이와 별개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지원을 위한 연구모임 등 6개 연구모임 활동을 통해 현안의 실태를 파는 등 지역 민의를 대변했다.

이밖에 석탄화력발전소 배출 등 미세먼지 저감 특별위원회를 비롯한 백제문화유적 세계유산 확장 등재 및 문화관광 활성화 특위, 내포문화권 발전 특위, 금산인삼엑스포 지원 특위 등 4개의 특위를 구성, 보다 나은 삶, 건강한 충남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아쉬운 점

도의회는 지방의회 정책보좌관제 도입 및 인사권 독립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것을 가장 큰 아쉬움으로 꼽았다. 지방자치사무의 증대와 함께 다양하고 전문적인 집행부 사무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윤석우 의장은 “도정과 교육행정의 1년 예산은 10조 원에 육박한다”며 “40명의 의원이 이 예산을 심사하는데 필요한 시간은 너무나도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방자치 발전에 있어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통해 주민의 뜻을 대변하겠다”며 “도민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지역의 생산성을 높이는 데 도의회가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충남도의회, 일본 시즈오카현 의회와 상호협력 방안 논의

아이사카 세츠지 단장 비롯한 시즈오카현 의회 의원 7명 충남도 방문



충남도의회 윤석우 의장은 11월 14일 충남도를 방문한 일본 시즈오카현 자민개혁회의현의단(이하 자민당) 의원들을 만나 양 의회 간 상호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도의회에는 아이사카 세츠지 단장을 비롯한 토리사와 요시카츠 부단장 등 7명의 자민당 의원들이 방문했다.

이들은 도청사 및 내포신도시를 견학하고, 향후 양 도·현의 농업, 문화·관광 분야 등 지속 가능한 교류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행정과 민간교류는 물론 양 도·현 의회 간 교류를 확대할 대안을 모색했다.

윤 의장은 이 자리에서 “국가와 별개로 지방정부

간 교류는 별도로 지속돼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지방 정부 간 교류가 한일 간의 오래된 우호와 미래 발전에 중요한 초석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양 도와 현 의회의 작은 교류들을 더욱 왕성하게 하는 과정이 한일관계에 더욱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장개척 및 투자유치 등 다양한 경제교류 분야에 중장기적 발전 방안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한편 충남도와 시즈오카현은 2013년 우호교류협정을 체결, 경제와 농업교류 협력 사업을 발굴 추진하고 있다.



충남도의회, 백제문화단지 현장방문... 민간위탁 추진 상황 점검

윤석우 의장 비롯한 의장단, 향후 발전 가능성 및 관람객 증진 방안 논의



충남도의회가 11월 30일 충남의 대표 문화시설인 백제문화단지를 찾아 관광 활성화를 위한 대책 등을 점검했다.

윤석우 의장을 비롯한 신재원·조치연 부의장, 강용일 농업경제환경위원장, 유찬중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등은 이날 백제문화단지를 찾아 민간위탁 진행 상황과 향후 발전 가능성, 관람객 증진 방안 등을 논의했다.

앞서 충남도는 지난 9월 '백제문화단지 공공시설 관리 운영 위·수탁 계약'을 체결했다. 호텔롯데가 내년부터 2037년까지 20년간 백제문화단지를 맡아 위탁 운영하는 것이 골자다.

위탁 시설은 백제문화단지 내 사비궁 및 능사 등 백제역사 재현 시설과 역사문화관 등 161개 건물, 주차장, 조경시설, 백제 숲 부지 내 기반시설이다.

도의회는 수년 동안 적자 상태인 백제문화단지를 각종 노하우가 있는 호텔롯데가 운영함에 따라 관람객 증가 등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윤 의장은 이 자리에서 "롯데 측의 경영 악화 등 위탁 운영 지연으로 도는 2013년부터 매년 40억원에 달하는 손실금을 도민 세금으로 충당했다"며 "어렵게 민간 위탁을 체결한 만큼 새로운 과제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충남도의회, 지방의회 청렴도 평가 2등급 최상위 쾌거

10점 만점에 6.63점 기록, 전국 평균 6.13점인 점 고려할 때 우수한 성적표



충남도의회가 권익위원회 ‘2017 지방의회 청렴도 평가’에서 2등급을 받으며 최상위권에 랭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6위에 그쳤던 평가에서 4단계가 꺾인 성적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1일 17개 광역의회와 인구 50만명 이상 기초의회 30곳을 대상으로 지난 9~11월 실시한 ‘2017년도 지방의회 청렴도 측정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충남도의회 종합 청렴도는 10점 만점에 6.63점을 기록, 경남도의회(6.76점)에 이어 2위로 평가됐다. 전국 평균이 6.13점인 점을 고려할 때 우수한 성적표를 받은 셈이다.

구체적으로 도의회는 사무처와 도 공무원 등 직무관계자, 경제사회단체 및 전문가, 지역민으로부터

골고루 높은 점수를 받았다.

실제 직무 관계자들이 매긴 도의회 청렴도는 7.17점으로 2등급을 유지했다. 이어 경제사회단체 및 전문가에게는 6.87점(2위)을, 지역민에게는 5.71점(2위)의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처럼 도의회 청렴도가 최상위권 평가를 받기까지는 부패 사례가 없었던 이유도 있지만, 온정주의를 배격하고 원칙을 존중했기 때문이라는 게 중론이다.

윤석우 의장은 “청렴도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는 것은 모든 문제를 처리할 때 공정하고, 투명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며 “사소한 일에도 최선을 경주하여 내년에는 더욱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의원논단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차질없이 준비하자

맹정호 의원

문재인 대통령의 충남공약 중에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조성이 있습니다. 충남도가 제안한 사업으로 2천 5백억원의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많은 도민들에게 아직은 잘 알려지지 않은 생소한 공약인 것도 사실입니다.

가로림만은 우리나라의 얼마 남지 않은 우수한 갯벌과 다양한 해양생태계가 보존되어 있는 곳입니다. 어촌계 주민들과 함께 가끔 바지락을 캐고 어장을 청소하러 가로림만을 다녔습니다. 가로림만의 생명력은 주민들의 생존력 못지않게 대단합니다.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아쉬움이 남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 훌륭한 가치를 지닌 가로림만을 국민과 함께 공유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봄과 가을이 되면 서산에서도 많은 주민들이 순천만 국가정원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순천만이 갖고 있는 갯벌을 이용해 탐방로를 조성했고, 세계 각국의 아름다운 정원을 조성해 놓았습니다. 자연도 살아나고 사람도 모이는 곳이 되었습니다. 자연과 사람의 아름다운 만남이 이루어지는 순천만, 부러웠습니다.

그러나 부러워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도 이제 곧 더 멋진 국가해양정원을 갖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는 자연공원, 수목원, 정원, 국민의 숲은 있지만 국가해양정원은 없습니다. 새롭게 개념을 정리하고 그림을 그려야 합니다. 처음으로 가는 길이 됩니다. 국가해양정원은 말 그대로 국가에서 해양을 중심으로, 해양을 주제로, 해양과 인접하여 정원을 조성하는 사업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국가해양정원은 오는 2023년까지 해양갯벌 체험시설, 해양생태공원, 생태탐방벚길, 둘레길, 해양치유시설, 생태자원관, 점박이물범센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타당성 조사도 필요하고 기본계획도 수립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예산이 확보

되어야 합니다. 갈 길이 멀고 험난합니다.

특히 가로림만 조력발전소를 찬성했던 주민들이 내세웠던 주장 중의 하나가 관광어촌에 대한 기대였던 점, 그리고 조력을 반대했던 주민들이 천연기념물인 점박이물범의 보호를 들었던 점을 상기할 때 국가해양정원은 이 두 진영의 갈등과 반목을 치유하는 역할도 톡톡히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리 충남도는, 서산은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첫째, 이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이 필요합니다. 국민이 무관심한 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할 정부는 없습니다. 다음으로, 가로림만은 서산의 것만이 아니라는 사실도 알아야 합니다. 태안과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상생할 것은 상생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산이 국가해양정원의 거점, 중심지가 되어야 합니다. 용이한 접근성, 갯벌의 다양성, 주민들의 적극성, 그리고 이용을 위한 준비 정도가 앞서고 있습니다. 이 논리를 더 공감할 수 있는 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셋째, 국가해양정원 사업기간이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와 거의 일치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임기에 맞춰 사업기간을 정한 것은 공약이 공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국가해양정원에 기대가 큰 것도 대통령 임기 중에 사업이 가시화되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정부와의 소통과 협력이 매우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현재 충남도에서는 ‘가로림만권역 지속가능 발전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학술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막바지입니다. 가로림만 종합개발과 국가해양정원사업이 두 트랙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기회가 없습니다. 관심이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가로림만이 국민의 가로림만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습니다.



장기승 의원

Q¹ 2018년 예산에 사립유치원 식자재 지원하는 것과 관련해서 도청과 도교육청이 50%씩 해서 도청은 물론 시·군에서 61억원을 식자재를 지원한다고 함. 2017년 9월 1일 자 기준으로 보면 유치원의 원아 수는 2만 8,575명이 되고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은 6만 8,290명 정도 되고 있음. 9만 6,000여 명의 아이들이 모두 우리도에 있는 아이들인데 요즘 유치원 가기가 어려움. 그리고 유치원이 어린이집보다는 더 많은 지원을 하고 있음. 그런데 유치원에 식자재 지원을 또 해줄 계획임. 그러면 어린이집 다니는 아이들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여기에 대한 계획은 있으신지 답변 바람.

A¹ 현재 공보육 시스템이 그렇게 민간과 유치원으로 나뉘어져 있어서 계속해서 재정지원 형평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되고 있음. 그래서 형평성 문제는 공보육 체계로 넘어가야 되고 공보육 체계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제도적인 장치를 앞으로도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야 함.

Q² 교육감께서 출발점이 동일한 아이들 교육이라고

제300회 정례회 도정·교육행정 질문

했는데 출발점이 다른 것 같음.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은 많이 주고 어린이집 다니는 아이는 조금 덜 주고 이걸 맞지 않음. 돈이 없으면 소득수준에 의해서 지원을 한다든가 해야 할 것임. 소득수준이라든가 농촌지역을 먼저 한다든가 했어야 되는데 교육청에서 돈 달라고 해서 도청은 그냥 주는 꼴이 되었다는 것임. 그래서 그것은 좀 맞지 않음.

A² 어린이집도 형평의 문제에 너무 어긋나지 않도록 챙겨보겠음.

Q³ 식자재 지원을 급식지원센터를 통해서 하고 있음. 그런데 농민들은 농사지어서 급식지원센터에 농산물을 납품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또 급식지원센터가 학교 영양사들에게도 갑의 위치에서 납품하다보니 영세 소상공인들에게도 어려움을 줄 수 있음. 형평성 문제를 넘어서 위화감까지 조성할 수 있으니까 꼭 지사님께서 살펴 보시고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이나 어린이집 다니는 아이들 이나 다 같이 우리 충남의 아이들이라는것을 염두에 두시고 정책을 펼치시기를 바람.

A³ 어린이집 원생들에 대해서 현재 우리가 전혀 지원을 안 하는 것은 아님.

Q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의회에서 부결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위탁을 전제로 교육청으로 2억의 예산을 편성해서 넘겨주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도인지? 예산서를 보면 분명히 도에서는 민간위탁을 전제로 예산편성 2억을 했고 교육청에서는 3억을 했음. 그래서 이것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대법원 판례에 어긋나기 때문에 도에서 수정예산을 편성해야 된다고 보는데 수정예산을 편성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 바람.

A⁴ 수정예산을 편성할 만한 사항은 아닌 것 같고 감액 사항인거 같음.

Q⁵ 충남교육청이 그동안 3년간 평가 및 부패방지 시책 평가에서 상위권에 있었음. 하지만 부패보다도 더 심각한 불공정과 불평등이 있음. 충청남도교육청 전체를 보면 장학사가 약 210명 정도, 장학관이 약 70명 정도 있음. 장학사에서 장학관이 되려면 보통 3명 중에 1명 정도만 장학관이 되는데 충남교육청은 그렇지 못한 인사가 있었음. 요즘 충남교육청에 측근인사가 만연돼 있다는 소문이 있음. 구체적인 예를 제시하면 법의 허점을 이용해서 상식파괴 인사를 하고 측근을 빼고는 아무도 못 믿겠다는 불신인사의 단적인 예임. 측근인사는 공개적인 비리라고 본인은 생각함. 또한 충청남도교육청이 학교폭력 교직원 비리 행위가 감소하지 않고 있음. 2014년에 912건, 2015년에 925건, 2016년에 955건으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개최한 바가 있음. 이것은 학교폭력이 줄어들지 않는다는 얘기임. 그리고 교직원들의 음주 비리 행위도 감소하지 않고 있음. 이것은 공직의 기강해이와

교육감의 생활지도 방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니까 다시 한 번 검토하셨으면 좋겠음.

A⁵ 본 교육청은 교육부에서 발표한 2017우수교육청 평가에서 학교폭력 제로환경 조성영역 우수교육청으로 선정되었고, 청렴부문에서 3년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음. 향후 최선을 다해서 미흡한 부분을 살펴보겠음.

Q⁶ 충청남도교육청의 학생들의 기초학력 미달자가 감소추세를 보이지 않고 있음. 학부모들이 학교나 학생들에게 바라는 것은 우리 아이가 건강하게 공부를 잘해 좋은 학교에 가고 좋은 데 취직하는 것임.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맞춰주지 못하고 있음. 그래서 애들이 공부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최소 기본 중의 기본인 기초학력 미달자 만큼은 없어야 하는 것임. 그런데 그 기본 중의 기본을 충남교육청에서 못하고 있음. 이것은 교육감의 교육정책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함.

A⁶ 기초학력 미달비율이 타시도와 비교해서 도 단위에서는 저희가 높지 않다 이런 말씀을 올리겠음.

Q⁷ 충청남도교육청의 행정에 문제가 있음. 이것은 공직자들에게 문제가 있음. 간부공직자 그리고 장학관, 장학사, 행정직에도 문제가 있음. 본 의원과 김용필 의원이 기간제 교사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했음. 똑같은 날 같은 사람이 자료를 제출했음. 그런데 270명이 차이 나고 있어 믿을 수가 없음. 그래서 해당과에 기간제교사 급여 준 숫자를 다 파악해 달라고 했더니 2,038명으로 334명이나 차이가 나고 있음. 행정사무감사에 자료를 제출했는데 이렇게 다르게 제출하고 있음. 허위자료를 제출했든지 아니면 충청남도

교육청에 있는 직원들의 행정능력이 이것밖에 안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임.

A⁷ 앞으로 잘 챙겨서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음.

Q⁸ 기간제교사가 올해 학교 전체 교사 선생님들의 약 10.7%임. 그런데 그 10.7% 중의 약 63%가 담임을 맡고 있음. 학교 정규교사가 부족해서 담임을 맡았다면 이해가 가는데 정규교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간제교사가 담임을 하고 있음. 이것도 문제가 있음. 또한 기간제교사 중에서 명예퇴직을 하고 기간제교사를 하시는 분이 77명임. 명예퇴직하신 분들은 명예수당과 퇴직수당, 연금을 받음. 그리고 기간제 가면 호봉수도 높아서 다른 기간제 선생님보다 월급도 더 많이 받음. 또 요즘 기간제교사 자리 하나 받아 보려고 청년들, 젊은 사람들 많은 고생을 하고 있음. 시골 지역에 기간제교사 하실 분이 없어서 당장 급한데 퇴직 선생님들이라도 모셔다 한 거 이해함. 그런데 시·군 지역교육청에 다니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니까 대도시인 천안·아산 지역이 더 많음. 교원수급 정책의 문제점도 교육감께서 살펴주시기 바람.

A⁸ 청년일자리 창출에 관해서 큰 관심으로 말씀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Q⁹ 충청남도의회에서는 교직원들의 단체활동 지원을 위해서 우리 도의회 의장님을 제외한 39명 전 의원이 찬성 서명을 해서 충청남도의회 사상 최초로 서른아홉 분이 찬성 서명을 했음. 그렇게 해서 충청남도교육청 교직원 단체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바가 있음. 법이 인정하는 단체에 대해서 예산지원을 한다는 얘기임. 그런데 법이 인정하지 않는 법외노조에 예산을 쥐가지고 그 예산을 아직도 충남

교육청에서 회수하지 않았음. 그게 3억원임. 법외노조로 판결됨과 동시에 교육청에서 그 돈을 회수했어야 함. 3억을 회수해서 세입예산에 편성시켜야 함.

A⁹ 법외노조 지원에 대해서 9월 달에 계약만료 기간이 되어서 건물주에게 그 돈을 돌려 달라고 공문 시행을 했으며 최고장을 보내든가 이런 노력들을 다각도로 하겠음.



정광섭 의원

Q¹ 우리 지역의 학생들에게 역사의식을 고취하고 책으로만 보던 일제의 만행을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게 현장체험 학습이나 또는 부교재로 활용하고자 하는 생각인데 교육감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A¹ 저도 똑같이 이 부분에 관해서 문제의식과 민족적 감정을 공유하고 있음. 따라서 그에 맞게 현재 태안의 지역 교과서, 초등학교 3학년 때에는 시·군 교육청에서 지역 교과서를 만들고 있음. 각 시·군에 다 있는데 태안 것을 급히 의원님 말씀 듣고 조사해 보니까 이것이 담겨져 있지 않음. 따라서 의원님 말씀대로 초등학교 3학년용 지역 교과서와 충남교육연구정보원에서 만드는 4학년 지역 교과서에 충남 전체 지역을 조사해서 지역 교과서에 싣고 그리고 체험

활동과 탐구학습을 할 때 그 인근 지역들은 휴양림, 정말 깊게 패인 주름처럼 패인 소나무들을 직접 보고 지나간 역사를 다시 잘 공부하고 미래를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도록 교육자료로 적극 활용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Q² 가을에 보면 어제 오늘 일도 아닌 것 같고 수년 전부터 벼 수확철이 끝나면 흔히 볼 수 있는 것으로 벼를 수확하면 벼짚을 논에 넣어가지고 거름으로 사용해야 되는데 사실 벼짚이 영양 가치는 별로 없다고 함. 그런데 벼짚을 싹쓸이로 거둬서 공룡알로 만들어 보관해서 소먹이로 활용하고 있음. 그러다 보니 거름 부족으로 과다 비료사용 그래서 토양이 산성화되고 있음. 그런데 충남도내 상황을 확인해 보니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벼짚 환원은 한 10% 이하일 거라고 추정을 하던데 맞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A² 17% 정도가 환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음.

Q³ 벼짚 수거 시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A³ 벼짚을 논에 환원하지 않게 되면 첫째는 지력 저하에 따른 토양의 산성화가 심화되는 문제점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그에 따라서 병충해 발생이 많고, 병충해 발생이 많음으로 인해서 미질 저하와 생산량 감소 이런 문제점이 있다고 알고 있음.

Q⁴ 그러니까 토양과 유기물 규산함량 저하로 토양 산성화가 돼서 문제이고 토양 비옥도 감퇴로 인해서 쌀 생산도 문제가 되고 있음. 그런데 다른 시·군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태안군은 공룡알 한 알에 보통 5만 원을 하고 있음. 5만원씩 하는데 2만 5,000원은 군에서 보조를 하고 2만 5,000원은 축산농가에서 부담을 하고 있음. 그런데 이것도 자세히 들여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음. 200평한 마지기에 보통 1.5롤이 나오며 1.5롤이면 7만 5,000원이 되는데 실제 농가에는 1만 5,000원이나 1만 원을 주고 경영체라고 하는 기계, 벼짚을 논에 깔아놓으면 저걸 말아가지고 하얗게 랩을 씌우는 기계주가 6만원 정도를 가져가고 판다는 것임. 그러면 실제적으로 농업인은 별게 아닌 거임. 처음에 이렇게 되기까지 농사짓는 사람들이 벼를 깔아놓으면 2만 5,000원을 받고 축산농가가 감아서 저렇게 작업해서 가져가면 그래도 마지기당 어느 정도 단 삼사만원 정도, 반타작은 하지 않나 싶었는데 그게 안 되는 것임.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A⁴ 운송비 문제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음.

Q⁵ 안희정 지사님도 연설에서 그동안 생산구조를 친환경적으로 개선하고 있다고 했음. 그런데 주로 비료로만 사용하다 보니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임. 특히 충남 쌀이 다른 시·도보다 제일 싸다는 것도 아시는지?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A⁵ 그건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됨. 첫째는 그동안에는 수확기에 흉수 출하한 것이 하나의 원인이 있었고 두 번째는 질소질 시비가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쌀값을 낮게 평가 받는 것으로 알고 있음.

Q⁶ 첫 번째보다는 두 번째가 크다고 함. 농사를 짓는 각 단체들도 잘 알고 있음. 비료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쌀값 떨어지는 부분도 다 알고 있는 현실임. 이것이 쉽게

이루어질 사항은 아님. 임대인들도 어떻게든지 소득을 뽑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전부 다 벚짚 같은 것 거둬들여서 팔고 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축산농가에서도 그걸 필요로 하니까 그런 부분도 있다고 생각됨. 그래서 지속적으로 계속 사업을 하셔야 될 부분 중에 벚짚을 논에 환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A⁶ 벚짚을 환원하기 위해서는 첫째, 농가들의 벚짚 일시적인 판매로 인한 소득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고 판단 됨. 왜냐하면 저희들이 분석한 거로는 10a당 농가의 소득이 7만 5,000원 정도의 판매소득이 있는 반면에 벚짚을 논으로 환원했을 경우에는 10a당 10만원 정도의 부수적인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분석한 내용이 있었음. 그리고 우리 도에서 시책적으로 2015년부터 벚짚 환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그래서 여기에 동참을 하는 농가의 경우에는 ha당 50만원씩 지원금을 주고 있음. 그래서 이 사업을 본격적으로 확대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됨.

Q⁷ 농사를 어렸을 때 지어보면 콤바인 작업하면서 한 줄은 까서 넣고 한 줄은 걷고 그랬음. 그러니까 반 정도는 걷어내고 논에다 넣는 거는 많다고 했었는데 매년 이 사람들한테만 주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봄. 우리 지역에도 삼광 벼를 재배하는 농가가 많이 있음. 그런데 실제 다수확 품종 보다는 수확이 떨어지니까 이걸 기피하고 있음. 그리고 도복이 심하니까 삼광벼 선택을 안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안을 드리는 것임. 삼광벼 브랜드 청풍명월 단지 조성한 곳을 격년제로 ha당 50만원 지원해 주고 삼광벼 집단시설로 하는 곳도 파악해 보니까 있음. 그래서 그런 곳을 지원해 줬으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을 했음. 확인서를 받는다면 그것도 어느 정도 그분들한테 혜택이 골고루 갈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겠는지?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논에 벚짚 환원화를 꼭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A⁷ 벚짚을 환원하는 측면에서는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음.

Q⁸ 올해 안면도·남면·소원·이원 쪽의 벼 재배하는 농가들이 염해 피해를 입었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비가 안 온다면 내년 농사가 또 걱정이 됨. 이 부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 답변해주시기 바람.

A⁸ 지금 현재 우리 도내의 저수율을 보면 평년 대비 6~7% 정도 더 상회하는 저수율을 보이기 때문에 아직은 괜찮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걱정되는 것은 보령댐 저수율이 32%로 낮은 게 걱정되기도 함.

Q⁹ 11월 10일 날 중앙일보에 '4대강 14개 보 수문 연다'라고 기사가 나왔고 공주보 일부 수문 개방과 관련해서 도정질문을 한 적이 있었음. 그때 공주보 수문 개방과 관련하여 아주 강하게 반대하였음. 공주보 수문 개방과 관련해서 중앙부처에서 협의가 왔는지? 그럼 우리 도의 의견은 안 듣고 일방적으로 저희들끼리 협의해 가지고 통보만 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A⁹ 지난 11월 9일 날 수계별로 댐보연계운영협의회라고 해서 국가기관, 해당 지방정부, 물 관련 기관끼리 협의하는 절차가 있음. 그래서 그쪽에서 협의가 된 상태에서 추가개방 이런 것들을 결정한 것은 맞음. 수리시설, 물 관리상의 어려움은 없어야 된다 이런 의견을 저희도 냈음.

Q¹⁰ 하느님도 아니고 부처님도 아니고 앞일을 모르는 것임. 지금 가을가뭄이 이렇게 심한데 앞으로 가뭄이 계속

된다면 문제가 되는 것임. 다른 시·도는 산이 많고 강이 많아서 물 걱정 별로 안 함. 우리가 문제임. 농사를 어렵게 지어서 판매하는 것까지는 모르지만 농업용수만큼은 걱정 않고 농사를 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함. 물만 있으면 몇 백리 길을 끌어서라도 쓸 수가 있음. 물이 부족해서 농사를 망치게 됐고 보상도 없음. 만약에 물을 끌어다 쓸 수 있었으면 저렇게 안 됐음. 물을 빼는 게 문제가 아님. 결론을 말씀드리면 공주보 수문 개방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임. 중앙정부에서 일방적으로 개방을 한다면 여기 계신 안희정 지사님 또 신동훈 국장님, 농업용수 관련한 농정국장님! 몸으로라도 수문 막으시기 바람. 세 분이 가서 부족하면 저도 같이 가겠음.

A¹⁰ 용수 수급에 문제가 없도록 전달도 하고 의사결정에 참여하도록 하겠으며 열심히 관리해 나가겠음.

Q¹¹ 수십 년간 안면도 국제관광지 개발한다고 충남도가 안면도 주민과 충남 21만 도민들을 늘 속여 왔음. 그런데 우리 안면도 주민들이 지금 안면도 꽃지해수욕장 내에 있는 주차장에서 우리 농업인들이 순수 농사지는 농산물을 좀 판매하고자 함. 큰 요구도 아님. 있는 땅에 부스 한두 개 설치해 달라는 것임. 거기에다가 건물을 지어 달라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정말 소박한 부탁일 수도 있음. 그래서 안면도 주민의 의견을 담아서 전달하는 것임. 여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람.

A¹¹ 조성계획상 주차장 용도로 되어 있어서 지금 불법 영업하시는 분들을 단속을 하고 있는데 종합적으로 잘 검토를 해보겠음. 의원님 말씀하신 게 필요하고 맞는 것 같은데 어느 곳에 하는 것이 좋을지 검토를 해 보겠음.



송덕빈 의원

Q¹ 손가락 끝이 육신육신 쑤시고 붓고 당기듯이 아프다가 손톱 밑이 굼아터지거나 심하면 손톱이 모두 빠지는 증상을 생인손이라고 함. 2000년 홍성과 보령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이후 금년까지 거의 매년 발생하는 구제역과 고병원성 시가 축산업계의 생인손이 아니고 무엇이라 하겠는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우리 도에서 시 발생으로 130 농가 741만 수를 살처분하여 보상금액만 570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음. 이와 관련해서 지휘본부에서도 중앙, 도, 시·군을 연계한 영상회의를 매일 참석하는 등 방역에 동참하신 것으로 알고 있음. 이 자리를 빌려 수고가 많으셨다는 인사의 말씀을 드림. 그러나 무엇보다 방역업무 직접 담당자인 수의직들의 스트레스가 어떠했을까라는 생각도 충분히 해 봤음. 그런데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타 직렬에 비해 수의직들의 이직이나 퇴직자가 매우 많은 것으로 알고 있음. 요즘 같이 공무원 경쟁률이 치열한 상황에서 무시험 경력 경쟁으로 채용공고를 내도 미달되고 특히 홍성·예산 같이 축산세가 크고 근무여건이 열악한 시·군은 지원자조차 없다고 함. 일은 사람이 하는 일이고 모든 것은 알아서 할 일이라고 생각함. 홍성군은 정원 5명에 현원 1명, 예산은 정원 4명 중 현원은 1명도 없다고 함. 다른 시·군도 결원된 시·군이 많다고 하니 기본적으로 인력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좋은 결과를 바라는 것은 축사도 짓지 아니하고 가축을 키우겠다는 것과 다를 게 없음. 이러한 인력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람에 본

의원의 대안으로는 도는 지원자가 넘치고 시·군은 지원자가 부족함에 따라서 도에서 일괄모집 후 시·군 일괄배치 방안 그리고 채용 이후 퇴직률을 낮추기 위한 유인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음. 현행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시·군에서 조례를 개정하면 수의직 수당을 25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지급이 가능하고 그렇게 되면 퇴직률을 조금은 낮출 수 있다고 생각하며 대안으로 제시해 봄. 지사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람.

A¹ 우리 도 시·구제역 발생은 2010년부터 금년까지 시 및 구제역이 11개 시·군에 559건이 발생하여 1,100여만 두의 살처분 등 손실이 있었음. 또한 이로 인하여 축산·수의직 공무원 등 반복되는 방역업무로 격무에 시달리는 실정으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게 사실임. 수의직공무원의 중도 이·퇴직률이 높은 원인은 수의직은 전문직으로서 공직임용 후 공직사회 분위기 부적응으로 4~5년 근무 후 퇴직과 타 기관 전출 등이 7~8%에 해당이 됨. 이는 일반직 공무원의 1.8%보다는 높은 수준이라고 파악되고 있음. 이는 공직 임용 전 안정된 직장이라는 인식보다는 시·구제역 발생에 따른 잦은 야근과 효율 불문 비상근무가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시·군 수의직공무원 미충원 원인은 지난 7월 수의직공무원 44명 증원 승인으로 공개 채용한 결과 우리 도는 13명 모집에 35명이 응시하여 2.7 대 1의 경쟁률을 보인 반면에 홍성과 예산은 각각 4명, 2명 모집에 응시자가 1명도 없었음. 응시자가 없는 원인은 2010년 이후 시·구제역 발생에 따른 8개월간의 연간 비상근무와 홍성·예산은 축산농가가 많은 반면에 수의직공무원 결원이 많아서 임용 시 격무에 시달릴 것이라는 인식이 팽배하여 지원을 기피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이와 관련 인력충원 및 사기진작 방안으로는 수의직 신규공무원 임용 시 우리 도에서 소요 인원을 일괄 공개 채용한 후에 시·군에 배정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음. 그리고 현행 수의직공무원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의료업무수당이 지방공무원 수당이 9월 5일 부로 개정이 되었음. 따라서 이와 관련해서 시·군 수의직공무원의 경우에는 현지출장 등 현업업무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시·군과 협의해서 수의직공무원 1인당 의료업무수당을 25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림. 또한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시·군 수의직의 결원이 현재 22명이 있음. 조기에 충원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음. 또한 축산 수의직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으로 해외연수와 방역기간이 끝나게 되면 2~3명씩 순회 휴가제 도입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서 축산·수의직 공무원들의 자긍심을 점진적으로 높여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림.

Q² 6·25 참전전쟁은 한 민족이 겪어야 했던 전쟁 중 가장 치열했고 처절했던 우리 국민 모두가 잊어서는 안 되는 전쟁이었음. 전 국토의 98%가 적에게 점령당하고 초토화됨으로써 대한민국이 역사 속으로 사라질 지극히 비극적이고 참혹했던 전쟁이었음. 이토록 처절했던 구국전쟁에서 나가 싸운 사람은 오직 6·25 참전노병들이었음. 이러한 6·25 참전의 특수성에서 2013년 승전 60주년을 맞이해서 대한민국 정부는 건국 이래 참전유공자 중 유일하게 6·25 참전유공자에게 호국영웅의 명예를 수여하였으며 오늘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참 주역은 6·25 참전노병임을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였던 것임. 그러나 이분들 앞에 생이 얼마 남지 않았음. 현재 대부분 80세 이상 고령으로 2014년 이후 지난 3년간 2014년 1월부터 2016년 12월 전국적으로 약 3만 8,000여 명이 세상을 떠신 것으로 추정이 됨. 우리 도의 경우 2013년 국가보훈처 등록 6·25 참전유공자가 1만 457명에서 2017년 1월 기준 7,531명으로 약 2,926명이 돌아가신 것으로 추정이 되며, 이는 2013년도 대비 약 28% 즉, 매년 오백팔십분의 유공자분들께서 세상을 뜨시는 것임. 2017년 10월 기준으로 보면 7,531명 중에 6,917명으로 9월 말 현재 614

명이 돌아가신 것을 비추어 볼 때 현재 생존해 계신 분들의 삶조차도 몇 년을 사실 줄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는 시급한 상황에서 어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됨. 이보다 시급한 상황이 있으리라고 생각해 보셨는지? 우리에게 밝은 빛을 보게 해 주신 분들에게 우리도에서는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됨. 우리 도에서도 예산 일부를 부담하여 일괄적으로 20만원씩 명예수당을 지급해 드릴 것을 대안으로 다시 한 번 부탁 드림. 만약 그리 못 한다면 본 의원이 매월 수령하고 있는 400여만원 전액을 유공자분들께 전할 수 있다면 매월 전해 주시기 바람. 본 의원이 이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이유는 호국영웅 노병들이 고령이므로 이 세상에 머물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임. 주저하고 기다릴 여유가 없음. 우리 노병들을 더 이상 비참하게 해서는 안 됨. 아무리 우리 노병님들께 더 없는 예우를 한다 해도 불과 몇 년 후면 역사 속으로 사라질 한시법에 불과함.

A² 금년 10월 말 현재 우리 도에 계신 참전유공자는 6·25 참전유공자 6,917명 그리고 월남전 참전유공자 7,551명 등 모두 1만 4,468명으로 이분들께 국가보훈처에서 매월 22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고 각 시·군별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에 의거해서 8개 시·군은 월 10만원씩, 6개 시·군은 월 15만원씩 그리고 1개 시·군은 월 20만원씩 수당을 추가로 지급하고 있음. 이 추가 지원 사항을 의원님께서 도와 시·군이 함께 20만원씩 일괄로 지급하자는 제안 말씀을 주셨음.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도에서 30% 정도를 부담하는 것을 감안해서 계산해 보면 연간 104억원 정도의 추가예산이 소요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시·군에서도 추가예산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일부 시·군에서 반대의를 표명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도에서 앞으로 이 의제를 가지고 시·군과 함께 지원방향을 심층적으로 논의해서 우선 공감대를 형성하고 통일적인 조례 개정 등의 제도적인 기반부터 마련해 보도록 하겠음. 보훈의 핵심 이슈는 보상수준과 보훈영역이 어디까지인가에 대한 문제로 귀결이 되고 이에 대해

국가에서 주도적으로 제일 책임을 지는 준거지표를 마련한 다음에 형평성 있는 보상기준을 찾아야 한다는 생각임. 아울러서 우리 도에서도 나름의 예우를 해 드리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임.

Q³ 환경부는 자연발생석면 관련 광역지질도를 작성해 놓고도 석면 분포지역의 발생 등으로 발표를 미루어 오다가 금년 여름에야 공개하였는데 석면함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초염기성암 분포를 보면 전국 207km² 중에서 충남이 157km²로 4분의 3을 차지할 정도로 많은 지역이고 석면광산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전국 38개 중에서 25개나 위치했던 지역으로 전국 어느 곳보다도 자연발생석면과 석면광산지역으로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지사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람 또 하나는 슬레이트 건축물 철거 관련으로 충남의 슬레이트 건축물 13만여 동 중에서 창고, 축사 등을 제외하고 7만여 동이 주택을 대상으로 슬레이트 철거사업을 하고 있는데 2011년부터 2016년 도까지 8,000여 동만 철거되었고 금년도에 1,600여 동을 철거할 예정이라고 할 때 충남도내 4,000여 리·통 단위에 1개소 만이라도 슬레이트 건축물 철거가 된다면 남은 6만여 동의 슬레이트 건축물이 다 정리될 때까지는 몇 십 년이 걸릴 지도 모름. 예산 부담을 보면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 인데, 도비 부담을 늘려서라도 사업량을 늘리는 방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람.

A³ 옳은 지적이라고 생각을 함. 그리고 우리 도 충남 지역은 국가 전체적으로 자연발생석면 분포지역 대비해서 보면 전국 4위에 해당됨. 다만 석면함유 가능성이 큰 초염기성암석으로 인한 가능성이 큰 지역을 비교해 보면 전국 대비 70% 정도 차지할 정도로 매우 부담을 갖고 있다고 생각됨. 또 지역적으로 보면 보령 지역, 홍성 광천 지역, 서산 고북면 지역, 청양 비봉면 지역이 주로 해당됨. 정부에서는 의원님

께서 말씀하신 대로 광역 또는 정밀 지질도를 금년 중에 제작 배부했는데 지질도라는 게 그 지역만 대략 표시한 것임. 소위 말해서 지번 등이 상세하게 들어간 것은 아니어서 우리 도 차원에서 그걸 조금 더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환경부 장관은 자연발생석면 지역에 대해서 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거기에 대한 관리대책을 강구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은 중앙정부에서 아직 이 단계에 이르지 못했음. 그렇다 보니 우려지역 외 지역 중에도 충남도 차원에서 관리할 지역이 있고 정부가 못한다면 광역지방정부 차원에서도 석면 관련 영향조사·안전관리대책 이런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다행스럽게 금년도에 추경을 조금 마련해 주셔서 청양지역을 먼저 시범적으로 우선 추진하고자 함. 아울러서 이런 지역 주민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3~4년 단위로 건강영향조사를 해서 석면질환 여부를 판정하고 만약에 질환자로 판정이 되면 요양급여·생활수당 이런 부분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역시 방문간호 서비스에 대해서 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음. 보다 더 적극적으로 석면 관련 대책을 추진하고 또 한 가지 다행스러운 것은 석면 관련 분석하는 장비가 내년도에 보건 환경연구원에서 구입이 되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기 중 석면이라든가 토양 중 석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분석도 하고 대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함. 슬레이트 건축물 철거와 관련해서는 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바와 같이 국비 비율이 30, 40, 50% 늘어나는 것 역시 사실임. 금년도에는 전체적으로 54억을 투입했고 내년에는 60억을 투입하게 되는데 다만 이 투입 절대액도 늘리고 국비지원 비율도 늘려서 한 해에 1,600동 정도를 해 왔는데 매년 사업량을 조금 더 늘려서 조금이라도 철거를 통해서 정비할 수 있는 기한을 단축하는 데 더 노력을 해 나가겠음.

Q⁴ 11월 23일 치러진 수능 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A⁴ 먼저 고등학교 3학년 졸업예정자는 2만 3,496명이고 그중 대입수능을 응시하는 예정인원은 1만 8,596명인 바 1교시 결시생이 2,944명으로 응시자는 1만 5,652명, 결시율이 15.8%임. 그 다음 3교시에 영어교과 시간에는 결시율이 좀 늘어서 결시생 3,016명, 응시생이 1만 5,424명으로 16.4%가 결시하였음. 이 내용은 전년도 결시율인 12.7%보다 조금 올라간 수치로 대부분 고3 학생들이 수시모집에 의해서 합격한 학생들이 결시를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음. 아울러 학생들 중에 수능시험을 봐야 되는데 아침 등교시간 사고에 의해서 시험을 응시하지 못한 학생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음. 다만 수능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감독교사 쓰러진 사안이 2건, 학생이 졸도한 사건이 1건, 또 천정에 있는 온풍기에 소음이 있어서 시험실을 옮긴 사안이 1건, 작은 사안들은 다소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방송상태나 우리 아이들의 건강상태, 진행된 상태 모두가 무결점인 수능진행이었다 함을 보고 드림. 다만 애석하게도 그렇게 수험생에 대한 지도도 하고 감독교사에 의한 주의사항이며 연수과정을 다 했습니다만 부정행위자가 약 10여 명 정도 발생했다는 안타까운 이야기도 있음. 매년 진행되는 수능에 무결점 수능을 완수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고 수능이 끝나면 우리 고3 학생들의 능력과 적성에 의해서 올바른 대학을 선택하도록 대학입시 지도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수능이 끝난 이후에 생활지도, 교육과정 운영 등 학교운영 내실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원태 의원

Q¹ 지난 2014년 정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제3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에 따라 발표한 자료를 보면 학교폭력은 크게 감소하고 있음. 그 이유는 수년간 학교와 학부모,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 많은 기관이 함께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보도된 여중생 집단폭행 사건처럼 학교폭력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그 수위는 높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임. 이에 정부에서도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난 2008년 3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학교폭력 피해학생들은 늘 불안해하고 있음. 학교폭력은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고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A¹ 사회 전반의 관심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음. 학교나 가정이나 지역사회 또 우리 도나 교육청 이런 관련기관들 모두가 다 관심을 가지고 총력적인 힘을 모아서 대처할 때 그 대응이 가능하다고 보고 어떤 형태로든 사회에서 폭력은 용납될 수 없고 특히 자라나는 학생들에 대한 폭력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함.

Q² 본 의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음. 관심이 제일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을 갖고 있음. 관심과 예방이 너무나도 중요하지 않나 생각함.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하는

옛날 속담처럼 우리가 이미 발생한 것을 수습하는 것보다는 미리 관심을 가지고 예방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해 봄. 학교폭력 예방활동의 일환으로서 청소년 관련 단체 등에서 건의한 것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A² 지난 시·군 수련시설 지도자대회가 있었는데 그때 제안이 들어온 것이 청소년어울림마당 및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위원회를 전 시·군으로 확대해 달라는 건의가 있어서 전 시·군으로 확대를 한 바가 있고, 따라서 후에 청소년 참여대회를 개최한 바가 있음. 또 도내 청소년 중의 한 학생이 제안을 해 오며 따라서 청소년참여 예산제를 저희 도가 전국 최초로 운영을 해 오고 있고 지난번 한국청소년리더십센터 전문가대회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청소년 리더 양성 프로젝트를 좀 개발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그 프로젝트를 개발해서 시행 중에 있는 사례가 있음.

Q³ 우리 도에서도 학교폭력예방 또래상담 사업으로 학교폭력 조기발굴과 학교폭력 신고 및 도움 요청 시 학교폭력 가·피해자 상담, 시·군 청소년상담 복지센터 종사자 및 전문인력 역량 강화 등이 주요 시책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그러나 그동안 충남도에서 추진한 학교폭력 예방활동 및 가해학생 선도과 교육활동 등은 지역의 학교폭력 예방 역할과 책무성을 높이는 데 효과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데 도의 자치역량 측면에서 학교폭력 예방활동에는 미흡하다고 보여짐. 여기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하시겠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A³ 올해 5월부터 5개 부문에 39개 과제를 설정해서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아직도 많이 미흡한 상태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음.

Q⁴ 지금 우리 도에 학교폭력대책 지역위원회가 구성되고 있고 주요기능은 기본계획에 따라 지역의 학교폭력

예방대책의 수립, 피해학생의 보호나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재심청구에 대한 심사가 주요 역할인 것 같은데 올해 2017년도 지역위원회 운영 및 활동에 관하여 이 문제에 대해서 도청뿐 아니라 교육청하고도 상의해 보신 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A⁴ 이 업무는 교육청과 긴밀하게 상의해 가면서 운영하고 있음. 지역위원회에서 지난 5월에 시행계획 수립할 때도 교육청하고 도가 함께 수립한 것이고, 또 지역위원회에도 교육청 관계 과장님이 지역위원회 위원으로 들어와서 활동 중에 있음. 지난번에는 교육청 주관으로 학교폭력 예방 지역 사회 합동 워크숍이 있었는데 도에서 참여하여 실행을 한 바 있음.

Q⁵ 잘하시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 지역위원회는 학교폭력에 대한 재심청구권의 심의를 하는 기능이 많은 것 같은데 폭력 건수는 데이터상으로 보면 해마다 줄고 있는데 접수 건수를 보면 증가하고 있음. 지역위원회에서 공정하고 신뢰성 있는 심의가 잘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A⁵ 그렇다기보다는 제가 판단할 때는 그만큼 사회적인 인식도가 높아지면서 신청 건수가 많아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음. 특히 지역위원회에서는 피해자들의 불만이 있을 때 재심청구를 하는데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그런 인식도가 좀 더 높아지면서 신청 건수가 많아진다고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 심도 있게 심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명확히 인식하고 있어서 학폭위 지역위원회 할 때는 밤 10시, 11까지 하는 경우도 허다함. 굉장히 심도 있게 충분히 얘기를 듣고 판단하고 있음.

Q⁶ 지난해 11월, 제29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시 5분 발언을 통하여 제안한 도, 시·군 기능재정립에 따라 시·군으로 위임한 농기계 공급 및 농기계 임대사업 지원 사무 재검토에 관한 것으로 농기계 환원사업은 데이터상으로도 보면 2015년도에 90억 2,200만원이 소요됐음. 그런데 올해는 65억 4,500만원밖에 안 됐음. 그렇다면 이 조례가 너무나 성급하고 부분적으로는 잘못됐기 때문에 환원하는 것이 맞고 현장에 답이 있기 때문에 현장에 계신 모든 분들이 지금 보면 60세 이상이 많음. 29만 6,800명 정도에서 20만 2,000명 68%가 고령인구임. 이 정도라고 하면 이분들에 대한 애로 사항 같은 것도 누구보다 지사님께서 잘 아시리라고 생각하는데 어렵고 힘들고 한 농민들을 위해서 무엇인가 가볍게 일하게 하고 소득은 높이는 쪽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3농 혁신이지 않은지? 그렇다면 이 농기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데이터상으로 나오니까 전에는 어떻게 됐든 간에 빨리 환원해서 도에서 관장하는 게 좋다는 것을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A⁶ 농기계 보급사업에 대한 의원님의 애정과 필요성에 대해서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음. 그래서 시·군에서 그 업무가 조금 더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림. 다만 지금 현재 국가와 도와 시·군 간에 역할분담을 해서 잘못하면 시장·군수님이 혼나든지 도지사가 혼나야 함. 그런 측면에서 역할분담을 지금 현재 시·군에 그 업무를 맡겼으므로 해당 시·군의 주민들이 해당 시·군을 혼낼 수 있도록 해 보겠음.

Q⁷ 본 의원이 자그마한 관리기를 작동해 봤는데 그전에는 삽으로 파고 저도 텃밭을 만드는 데 세 사람이 파고 했지만 관리기를 해 보니까 너무나 편하고 그렇게 힘도 안 들이고 할 수 있었음. 그래서 큰 기계를 구입하는 분들은

자기 몫을 다 차지해 감. 그러나 작은 것 즉, 분무기 이런 거 하는 분들은 힘들어도 자기가 자기 돈으로 하는 걸로 아는 순수한 농민들이 많음. 그러면 그분들을 우리가 찾아가서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한번 이렇게 구해서 제도를 이용해 보세요 하는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지사님께서 이런 정도는 빨리 해결하고 가시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음.

A⁷ 시·군이랑 총 100여 개의 업무역할을 나눴고 그에 따라서 예산 배분까지 나눠버렸고 거기에 따라서 도는 160 억이라는 돈을 더 주면서까지 역할분담을 나눴음. 그래서 이 업무에 대해서 시장·군수님들이 정치적 부담을 갖든 주민들한테 혼을 나더라도 시장·군수님이 혼나야 함. 그런데 의원님께서 현장 농민들의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다시 도지사한테 그 업무를 환원해서라도 보급사업을 늘리자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임. 그래서 저는 분명히 답을 드렸음. 보급사업에 대해서 저도 동의를 하고 있고 의원님의 문제의식에 동의하므로 결과가 그렇게 나오도록 하겠습니 다라고 제가 답을 드린 것임.

Q⁸ 그 말씀도 존중하고 사실은 간단함. 포괄적으로 주는 것을 농기계 사업은 그전 대비해서 이만큼은 농기계로 해라 하는 식으로 얘기가 되어도 사실 이거나 그거나 똑같은 것임. 왜냐하면 2년 전 조례를 할 때에는 12개 시·군에서 좋습니다 해가지고 받은 것 같은데 지금은 13개 시·군에서 환원을 다시 해 갔으면 좋겠다는 데이터가 나오고 있음. 그래서 본 의원이 얘기하는 것이니까 좌우지간 농기계만큼 은 별도로 구분해서 내려 주시는 걸로 알아도 되겠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람.

A⁸ 그렇게 하겠음.

Q⁹ 최근 2년간 우리 도내 학교폭력 발생현황에 대해서 도교육청에서 자료를 받아봤는데 연도별 발생 건수로는 2015년도에 925건, 2016년도에 1,048건으로 13.3%가 증가 되어 있음. 그러나 2년간 데이터 가지고 잘했다 못했다 얘기 하기에는 어렵다고 생각이 들고 여기에서 초등학교보다는 중·고등학교에서 학교폭력이 더 많이 증가하고 있음. 초등학교보다 중·고등학교가 학교폭력이 증가하고 있는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람.

A⁹ 통계 전체 숫자로는 그렇습니다만 실제로 신체적인 폭력들은 초등학교로 내려가고 있는 추세임. 중·고등학교 신체적 폭력은 오히려 줄고 있음. 다만 의원님께서 자료로 보셨듯이 사이버폭력이나 언어폭력이 중·고등학교에서 늘고 있는데 이것이 어른들 눈으로 볼 때는 사소한 것인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신고가 되는 것임. 그래서 건수로는 증가가 됐음. 그러나 폭력의 내용으로 볼 때 학생들이 외적으로 다칠 수 있는 학교폭력 건수는 전체적으로 줄고 있음. 아까 의원님께서 보여주신 전국 통계하고 비슷하게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림.

Q¹⁰ 학교폭력이 언어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 옛날에 있지 않았던 것까지 하다 보니까 상당히 지도하기도 어렵고 힘들다고 생각됨. 그렇다고 해서 내팽개쳐 둘 수 없는 문제고 교육청에서도 물론 열심히 해야겠지만 우리 모두가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음. 그전에 징계처리는 중징계가 3명, 경고가 4명, 주의가 8명, 기관경고가 2개교 나타나고 있음. 그런데 어제 교육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 충청남도가 학교폭력 학생 위험제로 환경조성 분야에서 우수평가를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음. 지역위원회 활동하는 걸 학교에서 봤는데 담당교사가 책무가 너무 많고 실질적으로 학생들과 상담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것 같음. 그렇다면 이것에 대해서 정말로 이 학생들하고 폭력상담이나 여러 가지 상담을 할 수 있는 대안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대안을 세우려면 돈이 문제가 되고 예산이 문제가 되는데 그래도 이대로보다는 뭔가를 한번 바꿔서 조금이라도 충남도교육청이 앞으로 나갔으면 좋겠다는 본 의원의 생각임.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람.

A¹⁰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전국 최초로 학교폭력 예방지원 대책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주셔서 찾아가는 법률 지원단을 운영할 수 있도록 되었음.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현재 학교폭력담당 변호사 1명인데 2명을 더 증원하는 것으로 예산을 올렸음. 그 부분에 관해서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음. 특히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얼굴을 마주대 하고 상담할 수 있도록 업무를 줄여야 되기 때문에 교무 행정사라고 하는 업무 지원할 수 있는 인력 150명을 내년도 예산에 올렸음. 그래서 전문상담사를 더 채용 못 한다고 하면 담임 선생님들이라도 아이들을 더 쳐다볼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전문상담사나 교무행정사를 더 늘려 달라고 하는 것이 일주일에 두세 군데 다니는 지역의 초· 중· 고 교장선생님들의 한결같은 요청사항임.



김명선 의원

Q¹ 전반기뿐만 아니라 후반기에도 농업경제환경위원회에서 나름대로 열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하면서 3농혁신 정책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활동을 해 왔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3농혁신 사업에 대한 평가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양극단으로 갈라져 있는 것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함. ‘실패다’, ‘성공이다’ 저렇게 정반대의 논리들이 난무하고 있음. 실패와 성공을 규정하는 근거가 또한 서로 다름. 그러면 그 실패와 성공을 따지기 전에 왜 3농혁신을 입안하게 되었는지 3농혁신 정책이 우리 충남에 왜 꼭 필요한지 좀 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음. 그래야 그 결과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다툼이 가능할 것이기 때문임. 우리 충남이 왜 3농혁신 정책이 필요했고 그 목적이 무엇이고 이를 통해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었는지에 대해 구체적인 데이터가 있으면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람.

A¹ 3농혁신이 왜 우리 충청남도의 주요 도정인가? 가장 핵심적으로 지난 8년 동안 추진해 왔는가라는 문제에 대해서 2010년으로 먼저 돌아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음. 우리 충청남도는 농도라고들 이야기를 하고 있음. 2010년도에 우리 충청남도의 여러 지표들 또한 그러했음. 200만 정도의 인구, 충청남도민들 중에서 농어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대략 20% 정도인 39만~40만 정도 되었음. 그리고 그때 당시에 충청남도 전체의 지역내총생산 다시 말해서 충청남도라는 상점이 올리고 있는 총 매출이 대략 86조 정도가

되었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86조 그리고 20%의 농어업인이 올리고 있는 총 매출액은 비율로 치면 대략 4.4% 정도인 3조 6,000억 정도밖에 되지 못했음. 20%나 되는 종업원이 고작 5%도 안 되는 매출을 올리고 있는 구조 속에 충청남도의 농어업이 위치해 있었음. 이는 충청남도의 농업이 산업적으로 매우 열악하다는 이유와 함께 당시에 도시와 농촌 간의 소득격차 문제 그리고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농어업 소득의 문제, 농업 내에서도 경지면적의 차이에 비롯한 어떤 양극화 문제 등등의 많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었음. 그렇다고 하면 도정이 지향해야 될 가장 중요한 가치적 목표는 무엇이어야 하겠는가와 충청남도가 왜 3농혁신이라는 정책에 주목했는가라는 점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GRDP 86조 중에서 당시에 천안·아산·서산·당진 이쪽 서북부 지역의 GRDP가 거의 75%를 차지하고 있었음. 그럼 나머지 25% 정도의 GRDP가 11개 시·군, 부여·서천·청양을 비롯한 시·군에 집중되어져 있었는데 11개 지역의 GRDP 중에서도 농어업이 차지하고 있는 GRDP 비중이 굉장히 높았음. 다시 말해서 15개 시·군 중에서 11개 시·군에 있어서는 농어업이 당시에 가장 중요한 발전 동력이었고 앞으로 지역균형 발전에 있어서도 농업을 얼마만큼 성장시키느냐가 충청남도 균형발전의 가장 핵심적인 관건적 요소다 그런 문제의식들이 그 당시에 있었음. 그래서 그야말로 농업에 대한 충청남도의 기본·근본 철학은 농업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더불어 우리 충청남도의 균형발전 정책들을 달성할 수 있다. 농업이 힘들어져서 농업을 돕겠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농업을 좀 더 강화하고 그리고 경쟁력의 중심으로 삼음으로써 충청남도가 한번 이 위기를 극복해 보자 이것이 3농혁신의 출발점이었다고 문제의식이었음.

Q² 어떤 사업이든지 ‘왜’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됨. 지금 말씀하신 대로 왜 해야 하고 무엇 때문에 해야 하고 하는 것이 왜 중요하고 그것이 결정되면 어떻게 할 것인지

문제가 중요할 것임. 그리고 더욱이 중요한 것은 각각의 목표를 얼마나 달성했는지 하는 문제일 것임. 구체적인 목표가 없는 정책은 있을 수 없음. 그러면 3농혁신의 정책이 목표를 얼마나 달성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계신지와 가장 핵심적인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통계가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A² 2010년도부터 시작해서 2011년도 상반기에 이르기까지 각계 전문가들과 여기 계신 여러 의원님들 그리고 농업지도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3농혁신 실행계획을 만들었음. 그래서 2011년 8월 말에 저희가 공표를 했었는데 크게 3농혁신의 다섯가지 방향을 잡았음. 첫째, 아무리 뭐니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에서 아니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나고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것이라라는 측면에서 생산혁신을 이룩하자는 것이었음.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많이 겪어왔던 것처럼 아무리 좋은 것을 생산해 놔도 이것이 팔리지 않으면 말짱 도루묵이었음.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잘 유통할 것인가라는 측면의 유통혁신, 유통이라는 것은 반드시 생산자들뿐만이 아니라 소비자들과 같이 해야 함. 그래서 소비혁신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가 살고 있는 마을과 지역의 소비자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정주환경을 만들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측면에서 마을 만들기, 마을혁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은 농업인들·어업인들 중심으로 이끌어 나갈 때만이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우리 스스로 역량을 강화합시다라는 차원에서의 역량혁신, 크게 이렇게 다섯 가지 방향으로 추진을 했음. 여러 가지 성과들이 있습니다만 작지만 큰 성과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함. 첫 번째는 충청남도가 지난 6년 동안 전국에서 친환경농업 면적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였음에도 불구하고 충청남도는 6년 동안 친환경농업 인증면적 비율을 매년 1등으로 유지를 해 왔음. 이것은 가장 안전하고 더불어서 가장 친자연적인 물과 땅과 환경을 같이 보전할 수 있는 농업형태야말로 지속가능한 농업이라라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매우 자랑할 만한 수치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음. 더불어서 유통과 관련해서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노력을 해 왔음. 무엇보다도 생산과 공급 측면이기 때문에 생산 측면에서는 생산자 조직이 탄탄해져야 됨. 그래서 생산자 조직을 탄탄하게 하기 위해서 ‘오감’이라는 브랜드 그리고 이를 통해서 생산자 조직화에 주력해 왔음. 그래서 이런 우리의 브랜드들 ‘토바우’를 비롯한 ‘청풍명월’, ‘농사랑’, ‘오감’과 같은 브랜드들이 단순히 브랜드의 가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생산자 조직의 이름표로서 그리고 생산자 조직을 좀 더 강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런 브랜드들을 만들어서 추진을 해 왔음. 더불어서 광역 시장의 유통망들을 정비하는 데 노력을 다했음. 안희정 지사를 비롯해서 농정국이 혼연일치가 되어서 대형 5개 마트의 판로를 개척하였고 공영 홈쇼핑, 더불어서 ‘농사랑’과 같은 온라인 쇼핑몰에도 주력을 했음. 그래서 거의 2010년 대비 2015년 외형적인 수치는 2배 내지 5배 정도의 성장을 거듭 이루고 있다는 말씀을 드림. 더불어서 이외에도 농촌마을만들기 운동을 통한 그리고 고향마실을 통한 그리고 학교 텃논을 통한 어린이들의 건강한 농업에 대한 가치 인식의 문제라든지 그리고 매달 1박 2일씩 54개 과정을 ‘3농혁신대학’이라는 이름으로 진행을 하면서 농어촌현장의 이야기들을 듣고 정책에 반영해 왔음.

Q³ 농업에 대한 다섯 가지 방향은 생산혁신, 유통혁신, 소비혁신, 마을혁신, 역량혁신을 통해서 충남의 대표 브랜드인 ‘청풍명월’이라든지 ‘토바우’라든지 ‘오감’ 해서 여러 가지 친환경 산업 쪽으로 다른 타 광역 시·도는 면적이 줄지만 우리는 친환경재배하는 면적이 많이 늘고 있는 수치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음. 우리가 어떤 사업을 평가함에 있어서 정성평가와 정량평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하게 됨. 사업의 결과를 모두 계량화한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성평가도 중요하지만 결국 사업의 결과는 정량평가가 사업의 평가에 있어서 더 관심을 가지게 됨. 2016년도 농가

경제지표에 충남이 8위를 기록한 것을 가지고 3농혁신은 실패했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충청남도에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와 인정하지 않는다면 왜 그런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람.

A³ 2010년부터 충청남도에서 3농혁신 일을 해 오면서 2010년부터 2013년까지만 해도 농가소득으로 많은 비판을 받았던 것 같지는 않음. 비판이 나왔던 것이 2014년부터 농가소득이 충청남도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 현격히 낮다는 많은 비판과 문제 제기를 받았던 것 같음. 그래서 저희가 지난 연도에 통계청의 농가소득 통계 결과를 봤더니 2008년도에는 3위, 2009년도에는 3위, 2010년부터 2012년까지는 줄곧 4위, 3위 기록을 했었고 통계청의 통계조사 결과가 표본농가가 바뀌게 되는데 표본농가가 바뀐 2013년~2015년까지 7등, 그리고 지난해에는 8위를 기록하였음. 그래서 이 지표가 틀렸다고 절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님. 다만 이 농가소득통계 조사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꼭 말씀을 드리고자 함. 제가 지금 충청남도의 2016년 통계가 나와 있는 통계청에서 발표한 농가경제통계라는 자료집을 가지고 왔는데 이 자료집의 조사목적에도 이 내용을 분명히 하고 있음. 이 자료의 조사목적은 농가경제 동향 그리고 농업경제 실태를 파악하는 데 있음. 더 나아가서 여러 가지 이런 조사자료를 통해서 농업 문제 연구를 위한 실증적 자료로 제시하는 데 있음. 그래서 이 통계자료는 통계의 목적대로 그리고 다른 통계는 통계 목적대로 적용이 되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음.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충청남도 광역지방정부의 정책에 투입과 산출의 결과로서 통계청의 농가소득통계만을 적용하는 것은 상당히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음.

Q⁴ 농가소득의 부분적인 통계에 집착하지 말고 거시적인 GRDP 기준으로 평가해야 된다고 보며 3농혁신 정책

으로 인해서 파생된 농업 부분의 전반에 있어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구조적 변화에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 판단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A⁴ 의원님의 지적에 100배 공감을 하고 있음. 충청남도 농업생산의 구조적 전환 문제는 3농혁신의 향후 성패를 가로 짓는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하고 있음. 간단하게 말씀드리어서 우리도는 수도작에 의존하고 있는 비중이 매우 높음. 정확한 통계로 보면 경지면적의 54% 이상이 논임. 그리고 경작하는 농가 기준으로 60% 가까이가 논 농업을 주로 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현재로서 상당히 어려운 한계로 인식하고 있는 것은 논 농업을 하고 있는 농가들이 대부분 고령 농가들로 단보당 생산 투입시간을 봤더니 논 농업은 10a당 11시간인데 고구마 같은 경우는 거의 100시간임. 그리고 축성오이 같은 경우는 거의 10배에 달하는 1,000시간임.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오이라든지 고구마 농업으로 쉽게 전환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들을 안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정광섭 의원님께서 제안하셨던 것처럼 논에 타 작물을 재배하는 것은 반드시 논을의 형상을 유지하는 형태로서 식량안보 차원에서 그러한 것임. 그리고 타 작물을 재배하고 논이 실질적으로 고소득 작목으로 전환될 수 있는 구조적인 노력들은 향후 민선 7기·8기에 이어서 충청남도 농업이 지속해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음.

Q⁵ 그러면 농업구조가 수도작 중심에서 특용작물로 가야 하고 고령농에 대한 대책이 더욱 강화돼야 된다는 쪽으로 생각하면 되겠는지?

A⁵ 중소고령농에 대한 정책들을 집중적으로 추진함과 동시에 오감·농사랑·직판장 그리고 광역직거래장터까지

포함하는 것이 모두 중소고령농들을 유통망으로 묶어내는 일들에 집중을 하고 있음. 더불어서 농촌에 청년들을 유입할 수 있는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펼치고자 함. 올해에 충청남도의 4H가 지난 2010년도에 200여 명 정도에 불과하던 규모에서 600여 명 이상으로 대폭 증가하였고 올해도 큰 상이랑 상은 받았음. 그리고 롯데와 같이 협력을 해서 50억원 규모의 청년농부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 청년농부들에 대해서 매달 8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을 통해서 청년농부들에게 여러 가지 길을 열고 있음. 그래서 중소고령농가의 어르신들에 대해서는 어르신들의 정책대로 그리고 새로운 성장 동력은 끊임없이 유입하는 노력들을 다하도록 하겠음.



이공휘 의원

Q¹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소재한 ASM이라는 회사의 자회사인 ASM Korea가 2006년 충남테크노파크에 입주하였고 충청남도에서는 10년 동안 임대료를 지원해 주기로 약속을 했음. 20억원이 넘는 어마어마한 금액임. ASMK가 10년 동안 충남테크노파크라는 동지에서 무럭무럭 성장하여 2006년 매출 85억에서 2014년에는 2,000억원 매출을 올리며 24배를 성장하여 중견기업이 됨. 그런데 점차 매출을 줄이더니 ASMK는 지금 와서 충남에서 금전적·제도적 혜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충남을 떠나 경기도 동탄으로 이전

을 한다고 함. 오목눈이 등지에 낳은 빠꾸기 알처럼 충남의 기업을 고사시키고 충남의 일자리를 줄여들게 하는 덩치가 큰 경쟁자로 돌변하였음. 이런 것을 볼 때 과연 어느 도의 도민을 위한 정책이고 어느 도의 기업을 위해 존재하는 기관 인지 묻지 않을 수 없음. 투자양해각서 3항에 “충청남도는 최초 10년간 해당 블록에 대한 임대료를 부담하며 ASMK는 입주계약이 갱신되는 경우 그 갱신되는 기간에 대한 임대료를 부담한다” 이렇게 되어 있음. 그리고 충남테크노파크와의 입주계약서를 보면 6조 제1항 “갑에게 입주신청 및 입주기간 동안 임대보증금 및 임차료, 관리비 등을 충남도와 을의 투자 양해각서에 따라 충청남도가 부담한다” 이렇게 되어 있음.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충남TP에 입주했다가 충남이 아닌 타 시·도로 옮겨간 기업이 ASMK뿐이 아니었음. 7년 이상 입주기업 중에서는 1개, 7년 이내 입주기업 중에서는 16개나 됨. 충남TP의 창업보육센터 운영규칙 제8조 제1항에는 “창업 보육센터에서 입주할 수 있는 기간은 3년으로 하며 2년 이내로 연장할 수 있으며 입주기간은 최대 7년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음. 7년 이상 현재 입주하고 있는 기업이 18개 사, 7년 이상 입주했다가 퇴소한 기업도 7개 사나 됨. 도대체 지키지도 않는 규칙은 왜 만들었는지? 충남TP 입주기업에 주어지는 각종 혜택을 좀 살펴보기 바람. 입주기업에 대한 표준임대차계약서를 강화할 것과 법리적인 검토를 통해 다음의 내용도 계약서에 추가할 것을 요청함. 최소한 충남TP에서 혜택을 받은 기간 동안 이상은 충남에서 기업을 운영할 것과 충남의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전문직이 아닌 일반직의 일정 비율을 충남 출신으로 고용할 것, 충남의 기업을 위한 펀드나 기업조성에 기여할 것 그리고 충남의 소기업이나 창업기업의 멘토 역할을 할 것을 필수 항목으로 기재할 것을 요청함. 이에 대한 대책을 언제까지 만들어 의회에 보고할 것인지 답변도 제시해 주시기 바라며 충남을 떠나는 기업에 대해 언제까지 윤리적인 비난만을 할 수는 없을 것임. 타 시·도에서 행하는 제도와 정책을 잘 살펴 충남에 적용해야 할 것임. 일자리가 복지임. 우량기업

과 신생기업들이 충남에 정착하고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할 것임. 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람.

A¹ 의원님께서 오목눈이와 빠꾸기 사례를 들면서 충남 테크노파크에 입주한 기업이 타 지역으로 이전하면서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음. ASM 지니텍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임대료를 지원했던 특히 예외적인 경우였는데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것도 이공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음. 산업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공무원들은 앵커기업들이 어떤 지역에 위치하고 그 앵커기업을 대기업 중심으로 산업클러스터가 형성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에서 창업을 하고 그 기업들이 지역에서 성장을 하고 중견기업으로 자리 잡아서 지역산업의 만형 역할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희들의 소망이고 또 그렇게 일을 하려고 함.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충남테크노파크에 창업보육시설을 설치했음. 그래서 지역의 대학에 있는 창업보육센터 또 우리 경제진흥원에서 출발하는 스타트업들이 일정한 보육기간이 경과된 후 창업 후 포스트 B에서 보육을 할 수 있는 약 1,840㎡의 공간을 가지고 있음. 그래서 이곳에 입주를 할 경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문요원의 종합적인 경영자문 및 컨설팅,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공용장비의 무상 이용, 그리고 테크노파크가 가지고 있는 후생복지시설을 공동으로 이용하도록 하는 편의를 지원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음. 특히 충청남도테크노파크가 1999년 설립 이후 지금까지 약 253개 기업이 입주를 했음. 그중의 약 186개 기업이 졸업하고 현재 67개 기업이 입주를 하고 있음. 여기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186개 기업 중에는 약 158개, 85% 정도가 지역에 정착을 했음. 이 중 5개 기업이 코스닥에 상장하였거나 연말까지 1개가 또 추가로 상장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 또한 창업기업들이 소망하는 자가공장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45개, 연매출 100억 이상 달성 기업도 20개이고 거기에서 배출한 기업들이 고용하고 있는 인원은 약 1,840명에 달하고 있음. 부득이 저희들이 입주한 기업

들이 졸업하면서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경영관계상 일부 기업은 타 지역으로 이전하는 사례도 있었음. 그것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만들겠음. 앞으로 보육기업들이 졸업 후에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좀 더 제도적으로 저희들이 좋은 정책을 만들어 보겠음. 결국은 기업들에게 우리가 자금을 주고 낮은 비용으로 충청남도에서 기업할 수 있다는 것보다는 충청남도에서 기업하는 지역 산업생태계가 어떻게 타 지역보다 경쟁력이 있는가가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음. 그래서 지역대학과 연계해서 고급인력을 양성하고 대학과 연계해서 R&D도 하고 지역기업들이 연계해서 서로 구매하고 도와주는 멘토 역할까지 포함하는 생태계를 그리면서 일을 하겠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문제점을 분석해서 연말까지 지사님께 보고 드리고 정책을 만들어서 의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음.

Q² 2016년 제2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통해 생계형 삶의 터 매각 사업을 추진하였음. 1차 매각하는 대상지로 193세대 233필지가 선정되었음. 본 의원은 292회 정례회의 도정질문을 통해서 생계형 삶의 터 매각에 대해 대부계약서, 감정평가금액, 감정평가업자 등에 대한 우려 등을 지적한 바 있음. 특히 매각으로 소유권 이전이 완료된 토지는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충청남도의 손을 떠난 것으로 개발이나 투기 등에 대해서 제재를 가할 수 없음을 지적하며 본래의 목적에 부합하는 정책이 되기를 바랐음. 현실적으로 환매조건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신중을 기할 것도 주문하였음. 2017년도 제1차 매각가능 토지 172세대 208필지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였음. 토지매각 현황을 보면 충청남도가 매수자로서의 소유권 이전이 106세대 127필지로 61.6%가 해당됨. 소유권 이전 후 재차 소유권이 변동된 현황을 살펴보면 13세대 15필지가 소유권 변동이 있었음. 본 의원이 작년에 우려했던 부분 중 한 가지가 생계형 삶의 터 매각이 태안의 또 다른 부동산 열기의 단초가 되지 않을

까 하는 것이었음. 소유권 이전이 된 필지들의 등기부등본의 매매금액과 주소를 잘 살펴보면 매매예약, 증여, 매매 등을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음. 심지어 1차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는 날에 2차 소유권 이전도 같이 완료되는 것을 볼 수 있음. 과연 생계형 삶의 터 매각 정책이 정말로 힘겹게 생활하는 도민을 위한 것인지, 충청남도 공유재산이 개인의 부를 축적하는 수단으로 오용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우려와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라며 3,393건의 토지와 48건의 건물을 태안사무소 인원이 감당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조적인 답변도 바라겠음. 공유재산사용 위반자에 대한 고발현황은 토지 1건에 대하여 불구속 기소, 벌금 100만원이 전부임. 본 의원이 작년에 포털지도로 확인한 것도 몇 건이 있었는데 이에 대한 조치는 1건도 없었음. 이에 대한 실태조사에 대해서도 답변해주시기 바람. 충청남도의 공유재산에 설치하는 주택이나 건물의 경우 한전과 업무협조 등을 통해 매월 전기계량기 신규설치 현황 파악 등의 방법으로 실태조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임. 충청남도의 공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하여 사용하거나 대부계약서의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하겠음. 그리고 공간정보데이터를 활용하여 안면도 관광지 개발지역 지번과 생계형 삶의 터 매각토지를 적층하여 중복성·접근성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할 것임. 이에 대한 답변도 주시기 바람.

A² 공유재산 처분대상은 재산의 규모라든가 형상 등으로 보아 활용가치가 없거나 생계형 삶의 터 매각의 경우임. 또한 재산처분 시에는 재산관리 부서 검토와 일정규모 이상일 경우에는 공유재산 심의와 도의회 의결을 거치는 등 처분여건에 맞게 행정적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림. 생계형 삶의 터 매각은 공유재산 관련 법령에 따라서 증·개축 등을 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주민 불편 해소 등을 위해 도유재산을 매각하는 것이나 이번처럼 도유재산 취득 후에 일부 세대가 증여와 상속, 매매 등의 사유로

인해서 소유권이 재이전되어 당초 취지와 어긋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도 현실임.

다만 개인 건축물이 있는 도유지를 처분할 때 취득자의 재처분을 제한하는 조건은 현행 법령상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소유권 재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과 함께 좀 더 논의를 거쳐서 제도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논의 체제를 만들겠다는 말씀을 드림. 또 도유재산 관리 처분 시에도 도민의 삶 개선뿐만 아니라 그 지역의 장래발전개발계획이라든가 여러 상황들을 종합 분석해서 사업부서와 공조하여 실태조사를 철저히 하는 등 문제발생 요인을 사전에 개선하겠다는 말씀을 드림. 그래서 제도의 취지에 맞게 삶의 터 매각이 운영될 수 있도록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림. 작년 이맘때쯤도 사실 유형별 여러 가지 영상자료를 통해서 생계형 삶의 터 매각과 관련해서 우려를 해 주셨는데, 또 1년이 지나서 일정부분 매각매수 절차가 중간 정도 마무리된 시점에서 또 의원님의 지적을 받게 되어서 조금 아쉽게 생각함.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차분·2차분 나눠서 했는데 1차분 172세대 중에 106세대가 완료되었고, 금년도 3월 24일 날 매매계약서가 체결되었고 소유권 이전 등이 5월 31일까지 완료가 된 상태인데 그중에서 한 13개 가구에 다시 소유권 변동이 있었다 이 점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나름대로 구체적인 분석현황을 말씀드리면 실제로 고령이다 보니까 가족분들한테 증여한 사례가 7~8건 있었음. 그리고 실제 순수매매가 3건인데 그것도 같은 자매 혹은 부인 이렇게 매매를 한 건이 3건, 그다음에 소위 말해서 차후에 매매예약을 해 놓은 경우가 있었음. 그런데 공공기관으로부터 공유재산을 사유재산으로 매입을 하고 바로 재이전 형태가 있어서 어떻게 보면 작년도 걱정은 그런 연장선상이 아닌가 우려를 주셨는데 어쨌든 법령상에 제한기간이 없는 입장에서 그 부분을 관리 못한 것은 맞음. 다만 생계형 삶의 터 매각기준 혹은 매각대상자 이런 틀에서는 저희가 위반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챙겨보도록 하겠음. 당초에 이게 특혜성으로

비춰지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특별히 더 걱정을 해주신 거고 과거에 공유재산 관리가 잘 안 이루어졌던 행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해주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음. 지금 같은 경우는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하자 있는 행정이 된 다라고는 생각하지는 않고 있음. 아직도 2차분 매매절차가 남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각별히 주의를 시키고 본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고 또 마무리가 된 후에는 성과평가를 통해서 부족한 부분이 메워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음.

Q³ 현재 충남의 경우 천안에 유일하게 경매 장외발매소가 있음. 전국 31개 장외발매소가 총 마권 매출액의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외발매소 소재 기초단체들은 교통 혼잡, 교육 및 주거환경 훼손과 같은 사회적 비용을 혼자 떠안고 있음. 최근 5년간 레저세의 징수현황을 보면 2016년도에도 189억원이 징수되었음. 징수된 레저세는 시·군 일반조정교부금으로 47%를 교부하고 레저세 징수교부금으로 3% 지원, 50%는 도 세입으로 조치되었음. 또한, 최근 5년간 천안시에 교부된 레저세의 징수교부금 현황을 보면 2016년도에 5억 6,700만원이 교부되었음. 그리고 최근 5년간 연도별 레저세 징수에 따른 천안시에 교부한 일반조정교부금 현황을 보면 2016년도 천안시는 43억원을 교부받았음. 결과적으로 천안시는 레저세 부분에서 189억원을 징수하고 징수교부금과 일반조정교부금을 합쳐 49억원만을 교부받고 있음. 도에서 제도적인 해결방법을 진행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음. 그리고 지난 국감에서 안희정 도지사님도 박완주 국회의원의 질의에 긍정적인 답변을 하셨음. 그리고 레저세의 합리적인 배분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번 공론화되었기에 천안시와 천안시민은 충청남도에 커다란 기대를 하고 있음. 이에 향후 레저세 배분에 대한 충청남도의

법률적인 개선과 법률적인 개선 전까지 천안시민의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실질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A³ 현재 경정, 경륜, 경마 등 레저 관련된 세금을 부과해서 그중의 10%를 자치단체에 교부하는데 그 10% 액수의 절반을 경기도에다가 떼어주고 있음. 본 장이 소재하고 있는 자치단체 그리고 나머지 50%를 가지고 장외발매를 하고 있는 곳의 자치단체에 주는 데 자치단체에 줬을 때 그것을 또 해당 기초단체와 광역에 나누는 비율이 생기는 것임.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제안은, 가장 큰 구조로는 본 경기장이 있는 경기도에 50%가 가는 구조가 맞는 것이냐 이 문제 제기가 첫 번째로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림. 그리고 현재 발매장이 소재하고 있는 자치단체의 광역과 기초의 배분비율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에 관한 문제는 천안시의 주장을 존중하고 실질적인 발매권을 행사하고 있는 해당 도시에 좀 더 많은 비중의 재원이 배분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큰 원칙인 이 말씀을 드림. 다만 우리가 각종 제도에서 레저세 등 세금을 거뒀을 때 그 세금이 그 지역의 교통 혼잡 이런 반대급부에 대한 돈으로서 다 쓰일 수는 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음. 예를 들면 화력발전소가 소재하고 있는 해당 군에서 지역자원시설세를 몇 % 가져가는 게 좋은가 그리고 그 재원은 우리 충청남도 전체의 공익을 위해서 어느 정도 쓰여져야 되는 것이 좋을까 이 배분비율이 항상 배분비율을 고민할 때마다 제가 하고 있는 그래고 원칙은 현재의 배분 비율은 천안시 및 소재하는 해당 기초단체에 배분 비율이 너무 적음. 이것에 대해서는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림. 앞으로도 국회에서 관련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국회의 원님들하고 이 문제는 계속해서 논의를 할 것이고 지방재정으로 넘겨진 부분에 있어서 도는 적극적으로 기초단체의 지분을 높이기 위해서 도가 그냥 쉽게 표현하면 양보인데 사실상 양보라는 표현이 적합하지 않은 것 같아서 기초단체의 배분비율이 좀 더 높은 쪽으로 올라가도록 의견을 내겠

다는 말씀을 드림.

Q⁴ 학령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학교는 교육현장의 주 역할이고 미래세대인 학생들이 생활하는 공간일 것임. 하지만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추세이고 기대수명의 증가로 인해 학교와 학교시설들은 교육가족의 전유물이 아닌 지역주민들의 공유물로서 인식전환이 필요할 것임. 아울러 훌륭한 학교시설들이 지역주민들의 문화공간으로의 역할도 증대되어야 할 것임. 본 의원은 학교와 지역 간의 상호보완관계를 알아보고자 자료를 조사해 보았음. 먼저 최근 3년간 도·시·군별 교육지원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총 993개 사업에 국비 114억원, 도비 1조 654억, 시·군비 2,995억원, 도 교육청비 810억원으로 총 1조 4,660억원이 지원되고 있음. 최근 3년간 시·군별 학교시설 임대료 징수내역을 보면 15개 시·군에서 32억원이 징수되었는데 도, 시·군별 교육지원 사업 금액의 0.2%밖에 되지 않고 있음. 두 수치를 단순 비교할 때 도 및 시·군별 지원체계에서 지원하는 것에 비해 학교 및 학교시설들의 활용도는 턱없이 낮다고 볼 수 있음. 학교와 학교시설물의 활용은 학생들의 교육과 안전 등 기본목적에 충실하는 데서 오는 제한도 있을 것임. 그리고 모든 권한과 책임이 교장선생님께 있는 것이 문제점이 될 수 있을 것임. 학교와 학교의 시설물들이 지역의 문화중심체 역할을 하기 위해서 다음 몇 가지 현장의 소리를 추가하는 것을 고민하기를 바라겠음. 첫 번째, 신설학교가 아닌 오래된 학교에서의 교실과 체육관의 분리 방법, 두 번째, 이용자와 학교 간의 책임 의무 사항 명확화, 세 번째, 교장선생님들의 총체적 책임에 대한 부담 등 완화, 네 번째, 학교나 학교장을 상대로 한 소송 발생 시 교장선생님을 대신 대리할 수 있는 법률자문단을 도 교육청에서 구성할 것, 다섯 번째, 학교시설물들의 이용현황을 각 학교홈페이지에 의무적으로 공고하여 주민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조례 등을 제정하는 것, 여섯 번째, 야간 임대

시 외부용역업체와 보안 및 시건장치 처리 등 위탁계약 시 추가 문구를 명문화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A⁴ 첫 번째로 신설학교가 아닌 학교에서 교실과 체육관의 분리 방법과 관련한 질문을 주셨음. 신설학교는 교실과 강당을 분리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기존학교는 교실과 강당이 같은 건물 내에 있는 경우가 많음. 따라서 안전 및 보안사고 등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안전보안 차단장치를 설치하고 있으며 출입구를 별도로 설치하여서 교실과 분리하는 방안 등을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림. 두 번째로 이용자와 학교 간의 책임과 의무사항을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일과 후에는 유인용역경비 등을 현재 활용해서 시설관리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안전사고 발생 시에 이용자의 책임관계를 계약서상에 명시하고 있습니다만 이를 더욱 명확히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음. 세 번째로 교장선생님들의 책임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일부 학교에서 학교시설 개방에 따른 안전사고 사후처리 등의 어려움으로 다소 소극적으로 개방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현재 학교장의 책임하에 교육과정 운영이나 안전관리에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적극 개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음. 그렇지만 방과 후 시설개방에 따른 학교장의 책임부담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경비용역업체와의 계약 시 책임의 한계를 명확히 해 나가도록 하겠음. 네 번째로 학교시설 개방 시에 학교나 학교장을 상대로 한 소송 등이 제기될 경우 대리할 수 있는 법률자문단 확보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음. 학교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고로 인한 법적 분쟁이 발생되면 우리 교육청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자문변호사 3명 그리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채용 운영하고 있는 자체채용 변호사 2명을 활용해서 소송을 수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림. 아무튼 법적 분쟁으로 인한 학교장의 부담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림. 다섯 번째로 학교나 학교시설물의 이용현황을

각 학교 홈페이지에 의무적으로 공고하여 주민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 제정 등의 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셨음. 우선 현재 각 학교에서 운영 중인 학교시설 예약 시스템을 개선해서 이용자가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보완하고 조례 제정 등 발전적 방안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이 좋을는지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음. 마지막으로 야간임대 시 외부용역업체와 보안 및 시건장치 처리 등 위탁계약 시 추가문구 명문화 등에 대해서는 학교장으로 하여금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문화하도록 하는 방안을 안내하도록 하겠음.

Q⁵ 교육부와 전문가들에 따르면 2015년 개정교육과정이 적용되는 내년부터 중학교에서 소프트웨어 교육이 의무화되는 가운데 정보교과서 내 코딩 관련한 내용이 현 교육과정보다 교과 편제의 64%에 달할 정도로 강화된다고 함. 현재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소프트웨어 학원은 전국적으로 217개임. 이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104개 학원이 서울·경기지역에 밀집되어 있음. 코딩 교육은 내년 중학교를 시작으로 2019년 초등학교 5·6학년 단계에 도입된다고 함. 교육부는 그 이전부터 사교육으로 가르치는 것이 선행학습에 해당된다고 하여 제재를 가하고 있음. 하지만 코딩 사교육업체들은 코딩을 미리 배워야 내신에서 앞서갈 수 있는 것 아니냐는 학부모의 불안심리를 파고들어 비싼 교습비를 책기고 있는 실정임.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국장은 소프트웨어 교육은 논리력, 창의력, 문제해결 능력을 높이기 위한 것인데 사교육업체는 학생들에게 코딩기술만 주입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하고 있음. 이런 상황에서 우리 충남의 군 지역 아이들이 시의 아이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코딩을 접할 기회가 적은 것으로 생각되어 본 의원은 충남의 전산 관련 현황을 살펴보았는데 2017학년도 기준으로 충남도내 중등교사 중 정보컴퓨터 교과 지도가 가능한 교사는 정보컴퓨터 교과의 현재 임용교사 68명과 복수전공 및 부전공 교사 자격증 소지자 122명으로 총 190명뿐임. 190명으로는 충남의

해당 학생들을 가르치는 데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됨. 충청남도 대학 중 시군별 전산 관련 학과 현황을 보면 7개 시·군, 19개 대학에 37개 과가 존재하고 있음. 충남에 산재해 있는 소프트웨어 인력을 활용하는 방안을 통해 시·군 학생들의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람.

A⁵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서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정보교육이 내년부터 선택교과에서 필수교과로 변경되면서 초·중·고등학교의 정보교육을 더욱 더 강화하고 있음. 초등학교는 5·6학년 실과교과에서 17시간 이상, 중학교는 정보교과서에서 34시간 이상, 고등학교는 일반선택교과로 교육하게 됨. 이에 따른 정보교과 운영 관련 준비사항을 말씀드리다면 고등학교는 여전히 선택교과로 운영되고, 초등학교는 2019년도 즉 후년부터 필수교과로 되고, 중학교는 내년도 즉 2018년도부터 정보교육이 필수교과로 되는 바 우선 중학교에 정보교과 교육여건을 마련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먼저 전체 중학교에 컴퓨터실이 확보되도록 노력하였음. 그리고 중학교의 학생용 컴퓨터 중에서 약 33%가 노후 컴퓨터로 운영되었는데 내년도에는 모두 교체될 수 있도록 하였음. 또한 중학교 정보교과 편성은 내년도에는 38%, 2019학년도에는 96%, 3학년이 되는 2020학년도에는 100% 필수교과로 편성 운영되는 바 학교별 정보교과 교육 총 시간은 34시간 이상으로 운영할 계획임. 그리고 이러한 정보교육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보교사의 확충, 교원들이 학생을 잘 가르칠 수 있도록 교수역량을 강화 이런 것들이 중요한 바 내년도부터 교사의 채용을 확대할 계획이며 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가 초청 특강, 또 충남교육연구정보원과 14개 교육지원청을 통한 코딩교육 직무연수, 학교로 찾아가는 코딩연수, 학교단위 학부모 대상으로 하는 연수 등을 실시한 바 있음. 그리고 우리 교육청에서는 정보교육 강화를 위해 금년 5월 포스텍과 업무협약을 맺고 원격연수시스템을 구축하여 우리 도의 초·중등 교원

들이 참여하는 코딩교육 연수, 코딩교육 역량강화 연수를 12월 11일부터 시작하는 시스템으로 되었음. 특히 금년도에는 소프트웨어 교육이 학교현장에서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어 이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연구선도학교를 62개 학교 운영, 학생들의 코딩교육 분야 진로교육을 위해 약 30개 학교에서의 코딩 학생동아리 운영, 또 교사들의 수업력 향상을 위한 코딩교육 학습공동체 6개 팀을 운영하였음. 그리고 가족과 함께하는 소프트웨어 코딩 캠프를 2회 실시하였고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들에게도 코딩교육의 필요성을 알리는 행사를 가졌음. 다음은 시·군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소프트웨어 교육인력 활용방안을 말씀드리겠음. 우리 교육청에서는 시·군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소프트웨어 교육인력 활용방안의 최우선은 교원들의 코딩교육 지도력을 높일 수 있는 것이 중요한 바 이를 전체적으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센터 설치가 무엇보다도 필요함. 이를 위해서 2018년도 2월까지 충남 홍성지역에 충남소프트웨어교육체험센터를 설치할 예정으로 있음. 체험센터가 설치되면 연구사 1명, 파견교사 2명, 주무관 1명 등이 배치되어 전담하게 되고 소프트웨어 체험교육, 기자재 대여, 학교 컨설팅, 자료 개발, 교원 연수 등의 중심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군별 교육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되겠음. 또한 2018학년도에는 한 학교당 운영비 500만원, 소프트웨어 기자재 구입비 500만원으로 총 1,000만원씩 지원하는 소프트웨어교육 희망학교 200개 교를 운영하는 데 이 200개 학교 중 대부분을 시·군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면 단위 지역에 많이 배정하도록 하겠음. 학교 정보교육의 구축에서 눈높이에 맞추는 맞춤형 코딩교육까지 최선을 다함으로써 선생님들의 역량이 키워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아울러 학원교육 없이도 우리 학생들이 학교교육만으로도 방과후학교 교육까지 포함해서 충분히 그 역량을 키워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보겠음.



김종필 의원

Q¹ 2016년도 안희정 도지사님께서 발표한 시정연설 내용 중에 도정여건과 추진방향으로 도정여건과 과제에 있어서 정치적·경제적·사회적·지역적 네 가지 과제로 분류하였음. 진정 도정운영 방향에 대해서는 이와는 무관한 도정 전반에 여성과 소수자의 인권을 보장하고 성인지 정책을 더욱 전진이라는 내용을 첫 번째 사항으로 내세웠음. 우리도가 타 시·도 광역단체들과 비교해 볼 때 충청남도 인권이 어떤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A¹ 꼭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 타 시·도하고 지금 현재의 상태에서는 인권 지표로 비교하기 어려움. 여성도 하나의 인권에 들어가는 것임. 거기에 보면 지표는 하위에 있는 게 현실임.

Q² 우리 충남기독교연합회가 중심인 충남바른인권범도민 연합회가 집회와 서명활동을 통해서 충남도에 요구하는 사항들이 있는 것 같음.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A² 조례 폐지를 요구하고 있음.

Q³ 이렇게 충남 소재 아닌 종교단체들이 반대표명을 하고 그러면 폐지 청구하신 분들, 우리 도에 계신 기독교회 목회자를 중심으로 한 성도들인데 어떻게 보면 큰일임. 할 말을 잃을 지경임. 인권을 지키겠다고 인권조례를 펴면서 도리어 다른 쪽 권리와 주장, 이게 인권 아닌지?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7조에 공무원을 포함한 산하단체 직원에 대해 인권교육을 하고 있음. 2015년도에 1,215명, 2016년도에 2,081명, 2017년도 2,279명 실시했음. 그리고 우리 도 출연기관까지 포함해서 한 2만 명이라고 볼 적에 20% 정도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보여짐. 그러나 나머지 80%는 하지 않았음. 그런데 인권조례에 보면 다른 조례하고 다르게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시해야만 된다.’ 인권조례는 실은 사용법이 없는 걸로 알고 있음. 물론 이것이 의원님 발의로 해서 제정된 조례로는 알고 있습니다만 교육을 이렇게 못하고 있음. 개선할 필요가 있음. 교육 내용들도 질문서를 보냈는데 교육을 4시간씩 실시해야 한다고 나와 있음. 그러다 보니까 인권교육만이 아니라 성인지교육 또 민·관 협치 교육까지 같이 섞어서 냈음. 또 교육장소를 보면 공무원들 교육인데 공무원교육원이 있음. 우리 공무원들 교육원에서 교육시켜야 하는데 별도의 민간기관에 해서 돈을 들여서 실시한 거로 나타남. 충남 인권 관련 조직을 봤는데 인권팀이 3명 있음. 그리고 인권센터가 3명, 총 6명이 있고 도민인권지킴이 153명이 활동하고 있음. 그리고 인권 관련 사업비만 3억 8,000 정도 올해 잡혀 있고 사용하는 걸로 되어 있음. 금년 10월까지 한 일들을 보면 인권상담 건수와 조사현황이 나타났는데 상담건수가 34건이고 조사결과가 권고 1, 각하 5, 조사 1, 상담 22, 종결 5건임. 그러면 도민들께서 이 내용을 보고 인권정책에 대하여 평가한다면 과연 어떻게 평가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A³ 그건 일부분에 속하는 것이고 인권센터나 인권팀에서 이것만 일하는 것은 아님.

Q⁴ 물론 그런 것은 알고 있음. 그러나 우리 도민들이 볼 적에 정말 충청남도에서 인권 관련 대단한 일을 하고 있음. 꼭 필요한 일들을 하고 있다라고 평가는 받을 수 없는 내용 들임. 조치결과가 시정권고 1건에 정책검토의견서 3건이 전부임. 이 사건들이 우리 도민들에게 피부로 와 닿지는 않을 것임. 이 결과에서 말해 주듯이 충청남도 인권 정책은 참으로 한가하기 그지없고 알맹이 없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음.

A⁴ 인권교육을 올해만 해도 1만 2800여 명을 했음.

Q⁵ 질병관리본부의 자료에 따르면 에이즈 환자 발생 수가 최근 매년 증가하고 있고 절대 다수인 92.8%가 남자라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 같음. 또 미국과 일본에서는 남성과의 성접촉이 에이즈 확산의 주 경로임을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있음. 우리나라 에이즈 신고현황을 통해서도 동성 간 성접촉에 의한 감염이 많은 것으로 자료를 주셨음. 에이즈 환자들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문제도 있음. 사회적인 비용이 국고로 다 치료가 되는 그런 사항들이 있음. 우리 충청남도에 2017년도 도민인권 증진시책 시행계획이 있는데 여기 시행계획 내에 분야별 중점 추진과제가 있는데 에이즈 예방과 관련한 진료를 지원해 주고 도에서 에이즈 척결을 위한 특별 대책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A⁵ 감염 환자들을 발견해서 그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도와주는데 문제는 에이즈 환자를 일반사회에서 거의 범죄인 취급을 하기 때문에 에이즈 의심 환자들이 자발적으로 검사를 기피하고 또 에이즈에 감염자들이 진료를 기피하기 때문에 에이즈 환자의 감소에 또 에이즈 발생률을 줄이는 데 큰 문제가 되고 있음.

Q⁶ 지사님은 지난주에 아주 큰 상을 수상하셨음. 대한민국 소통 대상. 축하드림. 그런데 조금 아쉬운 부분은 이번 도정질문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우리 도민들과 지사님께서 소통을 조금 더 하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점임. 도지사님께서 언론을 통해서 ‘동성애 등 성소수자들도 인간으로서 권리를 존중받아야 하고 목회자들이 제기하는 도덕과 윤리적인 문제를 떠나 성소수자들의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 소신’이라 하였고 동성애에 대해서 철저히 ‘리버럴’이 하다. ‘리버럴’이라는 얘기는 ‘관용적이다’, ‘더 개방적이다.’ 그런 표현으로 말씀하셨음. 하여간 강조도 하셨는데 현재도 그 생각에는 변화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A⁶ 물론임.

Q⁷ 또 소방서에 119안전센터를 95개소 뒀서 구급대원 440명 지금 배치 중이고 또 부족해서 내년도에 288명 중의 274명이 구급대원 쪽으로 증원 배치된다는 것임. 인명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이런 정책을 펴는 것임. 단 1명의 인명도 살리고 부상을 더 줄이기 위해서 이런 인력도 배치하는데 그렇다면 한쪽에서는 무지하거나 한때 성욕을 자제하지 못해서 고귀한 생명을 담보하는 사람들이 있음. 이러다 보니까 에이즈에 걸리게 되는데 우리도에는 특별한 대책이 없고 지사님께서 공인 중의 공인이고 차기 대한민국을 이끌 준비도 나름대로 하고 계시고 충청남도의 행정 수장으로 계신데 도지사님 말씀이 우리 도민이라든가 젊은 층이 받아들일 적에 이런 표현들이 또 충청남도 인권정책에 있어서 성 정체성 그런 사항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임. 기독교 연합회를 중심으로 한 많은 도민들께서 걱정을 하기 때문에 질문하는 것임.

A⁷ 제가 현재까지 표방한 것은 어떤 입장이냐면 “성적 지향과 정체성과는 상관없이 사람의 인격권이 차별받으면 안 됩니다.” 저는 그걸 주장하고 있는 것임.

Q⁸ 그러면 밖의 일반인들이 도지사님의 생각과 말씀하시는 사항들을 오해하고 있다? 왜냐하면 여기 인권선언서 내용을 보면 차별금지가 있음. 그리고 두 번째에 충남도는 모든 차별을 없애기 위해 노력한다 이렇게 되어 있음. 그러면 결국 우려하는 것은 동성애하는 분들도 옹호할 수 있다고 표현이 될 수 있다는 것임. 왜냐하면 지사님이라든가 이런 인권선언문으로 인해서 일반인들에게 혼선이 올 수 있다는 것임.

A⁸ 그러니까 우리가 대화를 통해 확인하자는 것임.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그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서로 간에 예방하거나 방지할 것인가에 대해서 장차로 좀 더 그 권리는 권리대로 인간의 권리는 보장하더라도 그 권리가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적인 다른 우려와 질병과 다른 문제와 연동되어 있다면 그런 우려가 현실적으로 있다면 어떻게 제도적으로 막을 것이냐를 논의해야 되는 것임.

Q⁹ 그 얘기가 아님. 우리는 단 1명의 인명을 지키기 위해서 소방대를 운영하고 자살예방사이트 프로그램도 시행하고 있음. 예를 들어 누군가가 젊은 층이 한때 성적욕구라든가 등등 해서 요즘 보면 10대들이 성매매를 앱을 통해서 많이 하고 있다 이것임. 실은 동성 간에 어른들을 상대로 하고 있다는 신문이 10월 21일 자 조선일보의 why 뒤에도 게재가 많이 되고 보시면 다 알 수 있을 것임.

Q¹⁰ 도지사님께서서는 우리 충남도민들 중심으로 해서 어느 정도 의견을 들었는지? 반대이견은 어떤 식으로 범기독교계 분들과 어느 정도 대화를 나누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A¹⁰ 앞으로도 더 나누도록 하겠음.

Q¹¹ 그분들이 도청 앞까지 와서 집회도 했고 지난 11월 6일 날인가 본회의장 앞까지 오셨음. 그런데 도지사님 만나기 쉽지 않다고 함. 그리고 한 가지 참 유감스러운 것은 그쪽에서 폐지반대 청구를 한다고 해서 과연 전국에 있는 인권주의자 되시는 분들을 모아서 도지사 면담하시고 나름대로 반대표명을 하도록 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람.

A¹¹ 그분들이 와서 도지사 면담을 요청했고 도내의 종교지도자들이 면담을 요청해서 인권관에 대해서 제가 면담을 한 것임.

Q¹² 논의되어야 될 주제인데 논의되기도 전에 인권선언에 넣고서 지금 정책을 펼치고 있으니까 문제인 것임. 젊은 사람들이 커가는 미래 세대들의 가치관에 충분한 혼선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 또 한 가지는 에이즈에 대한 대책 관련이 없다고 하지만 모든 보고서 보면 에이즈와 관련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음.

A¹² 에이즈는 기본적으로 인간의 모든 성행위 남용 속에서 나오는 것임. 그리고 안전하지 못한 성행위를 통해서 나오는 것이지 동성애 때문에 나오는 게 아님.

Q¹³ 아직까지 논쟁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인권선언문에서 아까 그런 조항들을 일단 빼고 수정하고 앞으로 전체적으로 공감대를 이룬 다음 인권선언에 그 내용을 다시 넣든가 하면 어떻겠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A¹³ 인권 업무에 대해서 좀 더 토론이 필요함. 그리고 인권선언을 한 취지에 대해서 의원님하고 우리가 좀 더 깊은 토론이 필요함.

Q 14 토론도 필요하지만 에이즈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세계 문헌 이런 데에서 연관성이 있다고 하는데 에이즈가 줄지 않고 있는 이런 가운데 이런 정책을 펴고 자꾸 말씀하신다는 것 자체는 젊은이들에게 상당히 위험요소가 있다고 보고 있음. 하여간 저는 이 흠결 있는 인권선언문은 수정되거나 폐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A 14 알겠음. 하여튼 의원님이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존중함. 그러나 의원님 말씀 중에서 에이즈라거나 기타의 부도덕한 성행위가 그들의 욕망의 결과라고 동성애를 얘기하는 것은 객관적 사실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림.



전낙운 의원

Q 1 대둔산도립공원 관광 활성화계획 추진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람.

A 1 대둔산도립공원 관광 활성화계획 추진은 대둔산도립공원 계획변경과 연관되며 공원구역 해제·편입, 용도지구조정, 공원시설 재배치, 보전관리방안수립으로 구성되며 현재 본안 금강유역청 최종 협의 중으로 금년 12월

마무리하여 체계적인 도립공원관리가 이뤄지도록 노력하겠음. 주요 내용은 논산지구 생태탐방연수원, 글램핑장, 동물학습체험장, 클라이밍장 조성, 짜개봉 교량설치와 금산지구 탐방로 신설, 현실에 맞는 개발계획 변경 등으로 계획하였음. 그동안 대둔산도립공원은 1980년부터 시군에 사무위임하여 관리하여 왔으나 2018년 1월 도의 직접관리로 전환하여 국립공원수준에 근접하도록 관리할 계획임. 내년에 도립공원팀을 5명 증원하여 도립공원관리사무소에 현장에 배치하고 편의시설 보강 및 지역협의체를 구성하여 민관이 함께 대둔산도립공원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음. 앞으로 대둔산도립공원 관광활성화를 위해 대둔산도립공원 방문객 증대와 다양한 생태탐방교육의 중부권 수요를 반영하기 위한 「대둔산도립공원 생태탐방연수원」이 추진되도록 환경부와 기재부 등 중앙정부와 지역국회의원에 적극 건의하겠음.

Q 2 대전MBC와 협업하여 추진 중인 충청남도 광역직거래센터 건립이 지연되는 이유와 향후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A 2 충청남도 광역직거래센터 건립은 로컬푸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영세, 고령농의 농산물 유통혁신을 위해 직매장과 직거래 장터를 중점 추진하는 것으로 입점을 희망하고 있는 230여 농가가 있음. 대전MBC 직거래 장터는 대전지역의 소비자들에게 충남의 우수 농산물을 연중 공급하면서 큰 호응을 받아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건립이 지연되고 있는 사유는 우선, 국내 최초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참여기관 선정, 협약 체결, 참여기관별 상급기관의 승인 등 절차 이행하는데 11개월이 소요되고 당초 사업비 18억 3천만원에 400평 규모의 직매장, 식당, 회의장을 조성하는 계획에서 사업비가 21억 6천만에 570평의 주차장과 카페가 추가되는 사업계획 확대 변경에 따른 건축 인허가 보완과 설계변경을 이유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음. 앞으로

올해 12월중으로 시공업체 계약과 공사 착공을 하고 2018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음. 광역직거래센터 건립 준공시 지속 가능한 농수산물 직매장이 될 수 있도록 세부 운영 시스템 구축 등 기관간 협업을 강화하고 민관 거버넌스 체제 구축을 위하여 협약기관별 역할에 충실하고 참여 농업인과 대전 지역의 소비자들 간 교류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광역직거래센터 건립 및 운영체제 구축할 계획이며 대도시 소비지역 내 충청남도 로컬푸드 외연 확대로 논산시 농산물을 중심으로 도내 농수축산물 공급기반을 구축하고 국내 최초의 광역직거래센터 건립으로 상징성과 대표성 확보하며 유통비용 절감에 따른 생산자와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 대도시 지역 내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한 교두보를 마련할 계획임.



김홍열 의원

Q¹ 2007년 기관유치 내용보고 시 계획된 40여개 기관이 유치 여부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A¹ 40여개의 기관 유치는 40개의 기관유치 중 이전완료 11개소, 인근이전 1개소, 추진 중 28개소임. 추진 28개소 중 부지매입 및 착공 6개소, 지속적으로 유치 노력해야 할 기관

이 13개소, 특성 및 경제상황, 기관의 이전 의지부족 등으로 유치에 어려움이 있는 9개소(대학, 은행, 언론사 등)가 있음. 앞으로 내포 신도시 활성화를 위해 대학, 병원, 공공기관(정부 투자기관) 등 유치에 총력을 다 하겠음.

Q² 출자, 출연기관, 산하단체 등의 내포신도시 이전 계획 미수립 이유와 향후 추진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A² 2007년도 최초 이전계획 수립 당시에는 대전 소재 공공기관 중심으로 이전계획을 수립하였고 충남도내에 있는 공공 및 유관기관에 대해서는 충남도내 소재하고 있어 이전 계획에 반영하지 않았으며 이후 2013년도에 여건변화, 이전효과, 이전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분석하여 내포 신도시 기관유치 계획을 128개 기관으로 재조정하여 유치에 총력을 기울여 왔음. 현재 128개소 중 이전완료 92개소, 부지확보 및 착공 등 13개소, 나머지 이전독려 및 전략적 유치대상 기관이 23개소임. 앞으로 출자·출연기관·산하단체 등의 이전필요성,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완 추진토록 하겠음.



김응규 의원

Q¹ 국도 21호 아산시 배방역 앞 모산사거리 입체교차로 개선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A¹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배방역 앞 모산사거리는 지역간 간선기능을 갖는 국도 21호와 아산산단 교통량 해소를 위해 개설한 아산시 도시계획도로(배방로, 한내로)가 교차하는 구간으로 국도 21호와 배방로가 왕복 8차로 및 왕복 6차로 규모로 교차됨에도 출퇴근 시간대에는 교통량 급증으로 상습정체가 되는 구간임. 그동안 배방역 앞 교차로는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국도 21호선 8차로 확포장공사('13년)시 배방역으로는 진출입이 불가능한 평면 3지 교차로로 준공된 이후에 아산시에서 아산디스플레이시티 1, 2단지 조성에 따른 진입로 개설공사('15년) 시 배방역 앞 교차로를 평면4지 교차로로 개선하였음. 앞으로 배방역 앞 교차로의 상습정체 해소를 위해 국도 21호의 교통수요 및 용량분석 등 지속적 검토를 통해 국가 계획인 「국도 병목 지점 6단계 개선사업('18~'22)」에 반영·추진 되도록 국토부와 기재부 등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Q² 아산시의 경우 10년 이상 장기미집행시설 중 도로가 417개소, 178만 7,000㎡에 이르고 이 중 217개소(85만㎡)가 2020년 7월 자동 실효되어 이로 인해 교통 불편과

도시 난개발 등 많은 혼란이 예측되는데 이에 대한 도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A² 도시계획시설 중 도로는 지역간 연결 등 도시기능 유지에 필요한 시설이나 도로 개설에 필요한 예산 확보는 시장·군수의 열악한 재정형편으로 인해 막대한 비용 총당은 불가한 실정임. 따라서 국가차원에서 주민 피해 등을 최소화하고자 의회 해제권고, 주민 해제신청 등 여러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 이는 근시적 대안일 뿐 장기적 대안이 될 수 없어 주민이 느끼는 장기미집행 해소 대책 체감은 그리 크지 않은 실정임. 주민 재산권 침해 최소화 등을 위하여 집행이 불가능한 도로, 공원 등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하여는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금년 12월까지 마무리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할 예정임. 아울러 장기미집행 문제에 대해 국가차원의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대책 회의(5회)를 개최하는 등 국비 지원과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 중에 있음.

5분 발언

1차 본회의 2017. 11. 6. ①

이종화 의원

내포신도시 열병합발전소 “충남도 재정적 책임을 감수해 특단의 대책” 촉구 나서

충남도의회 내포문화권발전특위 위원장 이종화의원 5분발언 통해 제기



내포신도시는 충남도청 이전을 계기로 지역 균형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 기반을 구축하고, 도민 통합과 지역발전의 계기를 마련하며, 지속가능한 도시 형성의 패러다임 구축 및 역사·문화의 전통을 계승한 자족적이고 균형 있는 환황해권 중심도시 건설을 목표로 추진하여 왔다. 하지만 기관이전이 속속 이루어지고 주택 및 상업지구 건설, 산업지구 용지 개발 등 신도시 건설의 기반시설이 완료되는 시점에 이르러, 냉·난방 및 온수 등 집단에너지공급을 할 열공급시설 설치 문제로 주민들의 갈등과 우려를 낳고 있다는 것은 충남도를 믿고 이곳에 터를 마련한 주민들에게는 분명 배신감과 상실감을 안겨주는 것이라 하겠다. 충남은 전국에서 최대의 미세먼지 발생시설인 석탄화력발전 시설과 철강 및 화학 산업단지가 산재해 있다. 더욱이 내포신도시에 입주한 주민들은 내 집근처에 쓰레기를 원료로 하는 발전시설이 들어서는 것을 반가워할까? 거기다가 이곳 주민의 생활쓰레기도 아니고 출처도 불분명한 산업쓰레기를 들여와 하루 수백 톤씩 내 집 옆에서 태우고 있다면 이해할 수가 있을까? 충남에는 자족시설을 넘어서 전국 최대의 전력생산기지가 내포신도시 주변에 산재해 있다. 여기에 더 보태서 내포신도시에 전국 산업쓰레기를 태우는 발전 시설을 유지할 필요가 있을까? 답은 간단명료하다. 충남도에서는 사업자의 이익보다 우리 지역주민들의 생활권과 건강우선권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 내포문화권발전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8월 부산 및 대구의 열병합 발전소 가동 시설을 방문하였다. 두 곳 모두 쓰레기 매립장 주변인

시 외각에 설치돼 있었음에도 끊임없이 민원이 발생되고 있었다. 이 두 곳 역시 산업쓰레기가 아닌 생활 쓰레기를 연료로 하고, 국비 및 사업자가 공동 투자한 시설 이었다. 이와 같이 내포신도시 역시 집단에너지설치승인 당시에는 산업쓰레기(SRF)연료가 아닌 내포신도시에서 생산되는 생활쓰레기(RDF) 연료에 한정되었다는 것과 재원도 정부 보조금 등 공적자금과 사업자가 공동 투자하는 공공시설을 설치하고 자 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상기하길 바란다. 사업자의 수익이 안 맞다고 하여, 당초 RDF로 연간 일만 칠천톤에서 SRF 이십 육만 일천톤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해 엄청난 양의 산업쓰레기를 태워 만들겠다는 데 누가 인정하겠는가? 내포신도시는 SRF발전소를 위해 만든 도시가 아니다. 이제는 사업타당성 문제로 민간사업자가 사업 추진이 어렵다면 개발주체인 충남도 및 개발공사 나아가 LH 등 개발이익을 얻은 주체들이 나서서 이 문제를 풀어 나가야 한다고 본다. 이제 더 이상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발전시설 중에 친환경적인 시설은 없다는 것을 우리 주민들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다만, 내포신도시의 경우 집단에너지시설을 설치해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가장 안전한 LNG를 사용한 열공급 시설에 한해 설치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다. 끝으로, 당초 산업통상자원부 허가 직권 변경으로 발생하는 부분에 대하여 재정적 책임을 감수하더라도 SRF 열병합 발전소 건설을 반대하면서 하루빨리 특단의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1차 본회의 2017. 11. 6. ②

전낙운 의원

도시계획시설사업 지역 간 ‘빈익빈 부익부’ 조장



**지난 7년간 연평균 도비 58억원 투입, 시군 도로와 공원 등 도시 계획시설사업에 보조
대부분 도 보조 예산 재정자립도 탄탄한 시군이 독차지... 청양군 지난 7년간 1건에 불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시장·군수는 인구증가에 따른 도시발전을 예상하여 도로와 공원을 포함한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추진한다. 이런 일련의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 도시계획 대상지로 묶인 사유재산들은 건물의 증·개축이나 토지의 형질변경 등 사유재산권 행사를 일체 하지 못하면서 오직 도시계획시설사업에 의한 개발행위가 이루어지거나 도시계획에서 해제될 날을 기다리며 재산세만 납부하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보다 못한 헌법재판소가 지난 1999년에 자본주의 이념과 가치에 손을 들어주었다. 도시계획으로 묶여 있는 토지가 향후 20년이 경과되는 2020년 6월 30일까지 도시계획시설사업을 하지 않을 경우 이튿날 일괄 해제하고 여타 도시계획시설 대상지도 지정이 된 지 20년이 경과되도록 사업을 집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동 해제하라고 판시하였다. 6~70년대 인구와 도시가 급팽창하던 시대에 도시계획으로 확정되어 개발되거나 해제될 날을 기다리며 50여년간 사유재산권 행사는 중지되고 재산세만 납부해온 국민은 그 잘난 정부와 법의 피해자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구체적인 개발계획도 없이 사유재산을 묶어놓고 매년 세금만 걷어 갔다면 이게 과연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할 짓이냐고 따져 묻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 충남도 경우는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 왔는지도 되짚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우리도의 도시계획시설 결정면적은 2016년말 기준 총 436km²이며 현재의 결정에 의거 오는 2020년 7월 1일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되는 실효대상 면적은 39km²(12백만평)이며 이 토지를

매입하여 계획된 사업을 추진하는데 5조 8천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반해 안희정 지방정부 7년 동안 연평균 도비 58억원에 시·군 예산을 합친 지방비 158억원 규모로 사업을 추진해 왔다. 시·군 자체사업까지 포함한다하더라도 연간 300여억원에 불과한 실정이라 2020년에 해제될 지역만 우선 해소하는데도 족히 200여년이 걸린다고 할 수 있다. 더 큰 문제는 도시계획시설업무가 국토교통국의 고유 기능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사유재산이 담보된 도시계획시설사업을 하면서 그것도 턱없는 풍돈을 가지고 예산편성은 예산담당 부서가 제 지갑의 쌈짓돈 만지듯 해왔다는 사실이다. 부서별 업무분장에 따라 일을 하면서 가용예산을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을 편성하여 추진하고 정책과 예산으로 피드백을 하는 게 정석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는 예산부서가 특정 시·군에 편중되게 선심성 예산을 남발하고 사업부서는 예산부서가 편성해준 예산과 사업의 집행을 대행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을 충남도 수립이후 70년 동안 해온 것이다. 그렇다면 다른 예산인들 이처럼 잘못된 관행이 없다고 장담할 수 있겠는가? 안희정 지사가 이를 몰랐다면 7년간 허수아비 노릇을 한 것이고 알고 있음에도 방치했다면 무능한 것이라 할 것이다. 이런 행정행위야말로 적폐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2018년도 예산에는 이런 폐단이 없기를 바란다. 아울러 국토교통국은 도시계획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이로 인해 고통 받는 국민의 불만을 해소할 접점을 찾아 정부에 건의하는 등 정책과 예산의 효율성을 제고해주시기 바란다.

1차 본회의 2017. 11. 6. ③

유병국 의원

화장품 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 조성해야



**경기도 등 9개 광역 시도 관련 산업 발전 가능성 인지, 육성 지원에 적극적
지난해 화장품 산업 전년대비 19.6% 증가... 미래 먹거리 창출 유망 산업 떠올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2016년 화장품산업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국내 화장품 총 생산규모는 10조 7,329억원으로 전년대비 19.6%가 증가하였고 화장품 수출은 2조 9,280억으로 전년대비 54.4%가 증가하였다. 향후 화장품산업은 의료·제약산업 등 바이오산업과의 융복합을 통한 첨단산업화로 중국 수출 이외에 유럽·중남미 등으로 시장 확대를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런 새로운 미래 글로벌산업으로의 발전가능성에 주목하여 중앙정부 및 타 지자체에서는 육성·지원정책을 입안·시행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보건산업 종합발전전략의 주요정책으로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통한 K-뷰티 세계화」 정책방향을 제시하였고 경기도 등 9개 광역지자체에는 화장품(뷰티)산업 육성을 위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다. 우리도에서도 화장품산업의 육성을 위한 조례 제정이 시급하다고 생각된다. 충남도가 화장품산업에 주목해야 하는 다른 이유는 첫째, 충남도의 풍부한 농업·산림·해양의 생명자원·천연자원을 활용하는 바이오산업과 접목 시 고부가가치를 극대화 할 수 있다는 점과 둘째, 웰에이징 소재개발 지원센터, 프로바이오틱스 거점센터,

K-뷰티테마파크 등과 네트워크형 산업구조를 형성할 수 있다는 점이며 셋째, 고용친화형 신성장산업이며, 제조업 중심의 충남 산업생태계의 다양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미래먹거리 산업이 될 수 있다는 점이 있다. 따라서, 충남도가 미래성장산업으로 주목하고 있는 바이오산업을 동물식의약, 웰니스·웰에이징산업 중심에 화장품산업을 추가하여 정책을 확장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새로운 신성장 동력을 발굴해야하는 충남도 상황에서 첨단산업으로 진화하고 있는 화장품산업의 중장기 발전 전략을 수립하여 미래 산업 변화에 대응할 것을 촉구한다.

1차 본회의 2017. 11. 6. ④

윤지상 의원

민관협치 활성화 조례 제정 서둘러야



**충남도 119개 민관협치 관련 사업 시행하고 있지만, 전국적 모범되지 못해
관련 위원회 참여위원 편중화와 도민 참여 부족, 관련 제도 인식 부족 등**

현대사회는 점점 복잡해지고 다양해지면서 기존 행정체제에 대한 새로운 변화를 요구 받게 되었다. 정부 위주의 수직적이고 일방적인 행정체제에서 민과 관이 함께 사회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수평적이고 협력적인 체제로 점차 전환되고 있다. 민관협치(거버넌스)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다. 충남도는 민선 5·6기 동안 민관협치를 도정의 핵심가치로 설정하고, 다양한 정책분야에서 민관협치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충남도는 민관협치와 관련된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대내외적으로 전파하기 위하여 시·군, 시민사회단체, 기업 등으로부터 민관협치 사례를 발굴·추천 받아 2015년부터 민관협치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개최하고 선정된 우수사례를 발표해 오고 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민관협치 제도와 관련하여, 법적 근거, 정보제공, 정책협업 등 총 119개의 민관협치 관련 사업이 시행 중으로 민관협치 관련 각종 위원회, 센터 등을 설치·운영 중에 있다. 본 의원은 지난 3월 제294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도내 각종 센터와 민간위탁 그리고 위원회의 현황과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효율적인 관리 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지금까지의 집행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민관협치 관련 위원회에 참여위원의 편중화, 도민참여 부족, 민관협치제도에 대한 민·관의 인식 및 홍보 부족 등으로 인해 민관협치가 실질적으로 활성화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여진다. 지난 10월 행정안전부는 민관협치(행정서비스 공동생산) 우수 사례를 발표하였다. 지방자치단체 민관협치 151건의 사례를 공모

하여, 총 12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하고 발표하였다. 충남도는 3건 신청하였지만 포함되지 못한 것은 다양한 정책분야에서 비교적 활발한 민관협치제도를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모범이 될 만한 사례를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도정의 다양한 영역에서 이뤄지고 있는 민관협치 정책의 수준을 진단하고 체계적인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이를 안정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본 의원은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조례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바이다. 조례제정을 통해 민관협치에 관한 종합적인 제도개선 뿐만 아니라 민관협치형 각종 위원회와 센터의 진단과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민관협치를 더욱 활성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제는 도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어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모색되어야 한다. 지역현안에 대한 실질적이고 다양한 정보를 도민들에게 제공하고 시민배심원제나 공론조사 등을 통한 의사결정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 앞으로도 충남도의 민관협치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집행부는 다각적인 노력을 해주시길 당부드린다.

1차 본회의 2017. 11. 6. ⑤

정정희 의원

가칭 “복지정책 연구원” 설립 검토해야



**여전히 복지 사각지대 많아… 복지서비스 총체적 관리 및 현장형 시스템 구축해야
복지재단의 경우 설립과 운영에 예산과 인력 소요… 일부 단체와 갈등 야기**

우리 도는 전체 인구의 33.2%를 점유하는 복지 수혜자에게 예산의 31.4%에 해당하는 1조 6,223억원을 투자하고 있다. 재정과 인구 규모로 볼 때 복지사업비의 비중은 적절해 보이고 각종 사회보험을 비롯한 사회보장제도의 기본 틀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과연 이 예산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적기에 누수 없이 맞춤형으로 집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왜냐하면 송파 세 모녀 사례와 같은 안타까운 소식을 접할 때마다 우리가 500개가 넘는 사업을 펼치고 있고 예산의 3분의 1을 투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사각지대까지 그 효과가 도달하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면 복지 혜택이 꼭 필요한 사람에게 정확하게 전달되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1) 복지혜택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웃과 단절되어 어떤 경로로 복지혜택의 수혜자가 되는지조차 모르는 경우, 2) 복지 수혜자 선정기준이 엄격해 수혜를 받지 못할 것이라 판단하여 복지 신청은커녕 상담조차 기피하는 경우, 3) 자신의 불우한 사정이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해서 복지신청을 꺼리는 경우, 4) 알코올 의존증이나 정신장애와 같이 수혜 대상자의 특별한 조건에 적합한 사회안전망 보호체계가 미처 구축되지 않은 경우 등 복지시스템의 도움이 미치지 못하는 여건에서 질병, 실직 등 예기치 못한 어려움이 가중되어 연속적으로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하는 것이다. 우리 도에 서는 이와 같은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읍면동에

복지전담부서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사회에 밝은 주민들로 하여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행복키움지원단과 복지반장제도를 운영하는 등 언뜻 보면 복지 사각지대가 있을 수 없도록 촘촘한 복지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이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복지사각지대는 여전히 존재하고 만족도 또한 향상되지 않고 있는 등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본의원은 우리 도의 복지사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당위성에서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수요자 중심의 충남형 복지전달체계 연구 및 모형개발, 각종 복지제도를 연구 평가하여 대안을 제시하고,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 찾기라는 현장이 원하는 답을 제공할 수 있도록 “가칭 충남 복지정책 연구원” 설립을 적극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 이는 중앙정부의 획일화된 시스템으로 500여개의 복지사업을 시행하고는 있지만, 삶의 현장에서 제대로 된 효과를 만들어 내지 못하는 복지서비스를 총체적으로 들여다보고, 충남형으로 고도화시켜 현장에 맞는 복지시스템을 구축하자는 취지로 복지예산에서 우리 도의 사업비 점유율은 미미하지만,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담보로 하는 충남도형 복지정책이 펼쳐질 수 있도록 집행부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린다.

1차 본회의 2017. 11. 6. ㉞

정광섭 의원

안면도 대지 매각 분할 납부로 개선해야



**충남도 안면도 도유지 내 생계형주거용 480여 세대 대상 대지 매각 추진
2002년 이후 안면도 땅값 천정부지로 치솟아… 최대 90배 등 주민들 분할 납부 원해**

본 의원이 살고 있는 안면도에는 현재 도유지내 생계형 주거용 480여 세대 대지의 매각을 진행하고 있다. 2002년 안면도 국제 꽃박람회 개최 이전과 지금 현재 공시지가를 확인해 보면 많이 차이 난 토지는 거의 90여배 정도가 난다. 두 개 회사 감정사들이 토지감정을 하고 있는데 최 하위급 토지가 몇 십만원으로 주로 농촌에 노인들만 살고 계시는데 무슨 여유자금이 있어 한번에 그 큰 금액을 낼 수 있겠는가? 이번에 살고 있는 도유지 매입은 해야 되는데 한 번에 매각대금을 내기가 쉽지 않아 많은 주민들이 분할 납부를 원하고 있다. 참고로 지금 기초수급자는 5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번에 분할 납부가 안 된다면 계속 충남도에 높은 임대료를 내고 살아야 되고 살고 있는 토지가 도유지이기 때문에 지붕에 비가 새도 제대로 고치지도 못하고 벽이 허물어져도 벽돌 한 장 놓지 못하고 불편하게 살아야 한다. 480여 세대가 다 매입을 하여 자기땅 자기집에서 불편함이 없이 살 수 있게 분할납부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간곡히 말씀드린다. 그리고 조직개편을 통해 산림자원연구소 태안사무소를 산림자원연구소에서 분리하여 독단적인 운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현재 태안사무소는 안면도내 도유지 자산을 관리하고 수목원 운영, 꽃지 해수욕장의 주차장 그리고 꽃지공원을 관리하고 있다. 그런데

이 모든 사업과 관리를 보면 태안사무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모든 회의와 업무지침도 세종시에 있는 산림자원 연구소에서 해야 되고, 도유지 자산관리는 세무회계과에서 꽃지공원과 주차장 도로도 관광마케팅과 안면도 개발팀의 지시를 받아야 되는 실정이다. 본 의원이 군의원 과 도의원을 하면서 민원 또는 긴급하게 해야 되는 상황이 생겨도 태안 사무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세종시에 있는 산림자원연구소와 세무회계과 그리고 관광마케팅과 안면도개발팀과의 협의를 통해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산림자원연구소 태안사무소 직원들만 많은 고생을 하고 있다. 안면도 도유지 자산관리와 수목원, 꽃지공원 그리고 꽃지해수욕장 주차장을 통합관리 할 수 있는 가칭 안면도 자원자산관리사업소로 승격하여 모든 일들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란다. 통합을 해서 업무의 효율을 높일 수 있는가 하면 분리 운영을 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것이 있다고 본다. 멀리 세종시에 있는 산림자원연구소에 속해 있는 태안사무소인(안면도 휴양림사업소)는 이리 저리 봐도 잘 안 맞는 비효율적 구조라고 생각되는 바 충남도의 직속사업소로 승격하여 지역에 걸맞은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란다.

3차 본회의 2017. 12. 15. ①

김용필 의원

민선 6기 도정과 교육행정 정책 방향 공유



**당진 땅 수호, 안면도 개발, 열병합 발전소 폐기 등 풀어야 할 숙제 산적
도민의 목소리 귀 기울이고, 민선 6기 도정과 교육행정 유종의 미 거둬야**

지금 충남도는 평화가 있는가? 끝없이 이어지고 있는 충남도계 및 당진 땅 수호 문제 25년간 뜬 구름만 띄우고 삽조차 뜨지 못한 안면도 개발, 미세먼지 배출과 SRF 고형 연료방식에 불안을 느끼는 내포주민들의 열병합 발전소 폐기를 희망하며 매주 금요일마다 찬바람 가운데 촛불을 들고 외치는 집회, 서부내륙고속도로 노선에 포함된 1400년 전의 대백제 문화와 문물을 지키고자 노선변경 투쟁하는 도민들과 어떠한 성적차별을 단호히 배격한다는 충남도의 인권선언문으로 인한 기독교계와의 갈등 등을 분명 안희정 지사가 추진해온 도정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어제 오늘 1박 2일 250여명의 3농혁신위원 토론이 보령 비체펠리스에서 진행된 것을 알고 있다. 어떤 분은 3농혁신은 농업단체 사람들을 위로하는 혁신이라고 한다. 그것 때문에 정무부지사는 정무기능인지 행정인지 최장수 정무부지사로 남아 있는 것이라고 말을 한다. 이제 충남도의 정책은 떠벌리는 추상적인 정책을 접어 던지고 많은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란다. 다수의 충남도민들은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도청을 찾지 않는다. 도시사의 지지층에는 도정의 지지세력으로 사람 숫자를 증가해

보이기 위해서 피켓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많아 보인다. 피켓시위를 하지 않던 20.8%의 기독교인들이 왜 피켓을 들었는지 의미를 알아야 한다. 교육행정은 어떠한가? 민주주의는 절차가 중요하며 소크라테스의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을 새겨들어야 한다. 도의회에서 조례가 의결조차 되지 않았는데 민간기관 위탁에 관련되는 예산을 편성하고 밀어 붙이는 도지사와 교육감의 행위가 과연 민주주의에 의해 선출된 자치단체장이란 말인가? 민주주의는 다수의 국민에게 평화를 주자는 것인데 이것은 파괴하는 행위 아닌가? 의회와 의원이 맘에 들던 들지 않던 민주적 절차에 의하여 직접 투표로 당선되어 의정활동을 하는 것이다. 해괴망측한 포스터를 제작하여 배포하는 저 배후에는 예산을 잘못 편성한 도청과 도교육청이 있다고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 더 이상 오이 밭에서 갓을 매지 마시기 바라며 도민들을 이간시키고 평화를 깨는 행위가 없기를 바란다.

3차 본회의 2017. 12. 15. ②

전낙운 의원

충남도 인구정책관실 신설해야



**충남도 소멸위기 기초단체 8개 예상… 인구절벽 해결 위한 컨트롤 타워 구축 시급
농산 어촌 면 단위 연간 출생아수 5~40명에 불과… 인구 유입 정책 마련해야**

사람이 최고의 자원인 나라에서 함께 출산율 2.1, 연간 신생아수가 80만은 되어야 5천만 국가로서 제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데 그 절반인 40만 명도 태어나지 않아 전 세계에서 가장 빨리 소멸될 국가로 예고된 안타까운 현실이다. 한편 노동부 산하 한국고용정보원은 30년 후 소멸위기에 봉착할 기초자치단체를 전체의 30%에 해당하는 77곳으로 예상하였고 그중 우리 충청도는 논산을 비롯하여 8개 시·군이 지목되었다. 논산시의 경우 2017년 현재 11개 면지역 초등학교 학생 수가 적게는 61명에서 많게는 250여명에 이르고 있다. 이들이 대학 진학, 구직, 결혼, 자녀교육을 위해 도시로 나갈 것이다. 절반 이상이 수도권이나 광역도시, 대규모 산업단지가 있는 천안·아산·당진으로 유출되기 때문에 농산어촌과 충남 남부지역 붕괴는 필연적인 현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면지역 초등학교 학년별 학생 수가 6명에서 40여명에 불과한데 이중 몇 명이나 고향에 뿌리를 내리고 살겠는가? 이와 같은 인구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우리는 농촌에 기업을 유치하며 특혜를 주어왔다. 3농 혁신을 추진하고 3.0 지방정부를 선도하는 한편 안전충남과 평생교육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을 해왔다. 다문화 가정을 보듬고 여성친화도시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천안·아산·당진지역에 일할 사람이 모자라 공장이 서고 다행히 인공 지능로봇 - 시로 인력을 대체하여 제품을 만들어도 소비할 사람이 없고 2천만원도 안되는 강통아파트가 속출한다면 이것이 국가붕괴의 핵폭탄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물론 중앙정부가 국가적 역량을 모아야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가 제 역할을 충실히 하지 않는다고 지방정부마저 역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홀히 하거나 방관하는 것은 역사에 죄를 짓는 일일 것이다. 우리 충남이 인구문제 해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자는 것이다. 인구정책관실을 설치하여 분산된 노력을 통합하고 체계화하는 컨트롤 타워를 구축하자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 10여년 동안 152조원을 투자하였음에도 오히려 출산율이 더 떨어졌다고 변명하면서 부처마다 단편적인 정책과 예산으로 해결하려 하고 있다. 이것이 우리 충청도가 분연히 떨치고 일어나야 하는 이유이다. 출산율의 급격한 감소는 시골학교의 생존에도 심각한 도전이 되고 있다. 출생아가 연간 5명도 못되는 면이 속출하고 있다. 소규모 학교들이(규모의 학교를 만들기 위한) 통폐합 대상으로 도마에 오르기 전에 마을과 교육공동체의 중심으로 뿌리를 내려야 한다. 학생인권도 중요하다. 그러나 교육의 가치를 망각하고 학생인권의 불모가 되거나 매몰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충남의 학교들이 '학생이 적고 학교가 작아서 오히려 교육이 강하고, 행복하다.'라는 가치를 성취할 때 학생 인권은 저절로 꽃을 피울 것이다. 인권을 위한 인권이나 구호적이고 선언적이며 보여 주기식 교육정책은 바뀌어야 한다. 그리고 이런 제안들은 가감 없이 교육공동체에 전달되고 소통되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교육위원을 따로 선출한 바도 없는데 교육위가 아닌 다른 상임위 소속 의원들의 교육관련 질의나 제안은 전혀 교육신문에 보도되지 않는 것 또한 잘못된 관행이고 적폐일 것이다. 교육감님부터 열린 마음, 열린 시각에서 충남교육을 고민해 달라고 부탁드린다.

3차 본회의 2017. 12. 15. ③

서형달 의원

유아 자연체험시설 확충 주문



자연체험활동 프로그램 구체화와 지역사회 연계한 시설 확충 등 정책 제안 인성 교육 필요성 날로 커져… 자연으로부터 안정감과 긍정적인 사고 함양 제기

그동안의 학교 교육은 주입식 지식교육과 암기식 입시교육, 이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러한 주입식, 암기식 교육은 우리 학생들의 사고를 획일화 시키고 다양한 관계 속에서 다름을 인정할 줄 모르는 인격체로 만들고 있으며 자신의 목표를 이루고, 지식과 잠재력을 발전시킬 수 있는 “문해력”에서는 OECD 국가 중 꼴찌를 기록하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 더구나 최근 학교폭력이 커다란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인성교육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인성은 일시적, 단기적 교육에 의해 형성되는 것이 아니다. 유아기부터 반복적,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충남교육청의 2017년도 인성교육 시행계획을 잠시 살펴보면 “충남 참학력” 신장을 위한 실천적 인성교육, 학교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교육활동 전반의 체계적·통합적 실행, 가정·학교·사회 등 교육공동체 간 참여와 협력으로 인성교육을 강화한다는 3가지 기본방향에 미래 인성 역량을 갖춘 민주시민 육성이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유치원 인성교육에 관해서는 이 인성교육 시행계획 안에 “누리과정을 통한 유치원 인성교육 내실화”라는 막연한 문구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저는 올해 도의원과 관련기관, 교수 등 전문가와 함께 참여하여 충남형 유아교육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유아교육 발전방안 연구모임”을 운영하였다. 이 연구모임을 운영하면서 유아기는 인성 형성의 기초가 되는 시기일 뿐 아니라 교육의 효과도 매우 크고 이 시기에 형성된 태도와 습관은 평생 동안 지속된다는 것을 알았다. 따라서 저는 자연체험활동을 통한 유아 인성교육 발전방안을 집중적으로 연구하게 되었으며 그 결과와 함께 유아 인성교육 활성화 방안

대하여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한다. 자연은 유아들에게 안정감과 긍정적인 사고를 발달시켜 주기 때문에 자연과 함께 스스로 배려를 경험할 때 바른 인성이 자연스럽게 갖추어진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자연체험활동은 유아들의 인성형성에 좋은 교육방식이라고 생각하며 주변의 자연현상을 다양하게 체험하게 함으로써 자연을 느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기를 수 있도록 교육공동체가 지혜를 모아 자연을 닮아가는 행복한 마음을 유아들에게 키워줘야 하겠다. 아울러, 충남교육청에서는 자연체험활동 프로그램을 구체적이고 다양하게 개발·연구하여 증진시킬 필요가 있고 유아들에게 자연스럽게 자연과 교감할 수 있도록 유치원 실내·외에 자연체험 환경조성이 필요하며 소규모 3~4개 유치원이 참여하는 자연체험 거점유치원 운영으로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일반화하여 유아의 전인적 성장 발달을 도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를 연계한 유아 인성교육 활성화 방안으로 각 시·군에 설치되어 있는 자연체험 활동 장소에 유아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체험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설과 설비를 확충하고 자연체험활동과 더불어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유아교육 체험센터 건립 및 확대를 위한 예산 확보가 적극 추진되어야 하며 거점유치원 확대 및 연구 경비 지원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유아기는 각 생애단계를 비교할 때 투자대비 가장 높은 수익률을 거두는 시기라는 최근 연구 결과가 있다. OECD 국가를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에서 생애교육의 출발점인 유아기 교육에 투자를 아끼지 않는 이유이다. 교육감님께서는 이러한 유아교육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으로 충남 유아교육이 한걸음 더 발전되어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의회 운영위원회

2018년도 충청남도의회 운영기본계획 협회의 건 등 심사



김종문 운영위원장은 11월 6일부터 12월 15일까지 40일간 열린 정례회에서 2018년도 충청남도의회 운영기본계획 협회의 건과 제301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회의 건을 가결했다.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사

신규사업 증가 및 관례적인 예산편성 행태 집중적으로 점검



충청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1월 6일부터 12월 15일까지 열린 기획조정실·자치행정국·미래성장본부·감사위원회·공보관·공무원교육원 소관 내년도 예산안심사에서 신규사업 증가 및 관례적인 예산편성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김동욱 위원장은 “행안부에서 재단에 출연금을 지급하라는 공문을 받고 도에서 그대로 따라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지원조례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하지 않은 것은 업무처리에 소홀했다”고 질책했다.

김종필 위원은 “적십자 기능보강 사업 등 전년도에 비해 신규사업이 많이 증가했다”며 “도민의 세금부담이 어려운데, 사업계획을 꼼꼼히 따져 필요한 예산만 편성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신재원 위원은 “출연기관의 출연금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출연기관의 예산을 더 절감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 부서에서도 보다 세심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김석곤 위원은 “민간위탁사업이 매년 증가하면서 도 재정

부담이 늘고 있다”며 “용역을 의뢰할 때 전수조사 및 민간 위탁 필요성 등을 고려해 효율적인 관리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익환 위원은 “공직자의 인성교육 과정 개설이 시급하다”며 “사회 모범이 돼야 할 공직자들의 인성을 바로 세워 역량 있는 공직자를 배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종문 위원은 “추경에서 50% 이상 집행하지도 못한 예산을 본예산에 추가 증액해 편성하는 행태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종화 위원은 “디자인단 과제 운영 사업비로 400만원을 편성했다가 추경에 300만원을 삭감하고 100만원만 집행했다”며 “이러한 예산편성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공휘 위원은 “뉴미디어 콘텐츠 제작 사업은 무조건 외부 업체에 맡길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각각의 뉴미디어들의 특성들을 파악, 기획 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문화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사

출연기관 출연금중 운영비 최대 35% 증가, 총인건비 인상을 기준초과
취약계층을 위한 예산을 증가하는 만큼 행사·선심·중복 예산 줄여야



충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11월 6일부터 12월 15일까지 열린 도 문화체육국·복지보건국 소관 예산안 심사에서 출연기관 인건비 과다 계상 문제 및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예산 편성을 집중 추궁했다.

정정희 위원장은 “맞춤형 복지 등 국민생활 안정을 뒷받침하는 기본적인 복지 투자가 지속되고 있다”며 “저출산 극복 및 양극화 완화를 위한 취약계층을 위한 예산이 증가하는 만큼, 행사·선심·중복 예산은 줄여야 한다”고 했다.

윤지상 위원은 “일부 출연기관의 출연금 등에 대한 예산 편성·집행 등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기영 위원은 “천안의료원의 임금 체불 문제가 심각하다”며 “경영이 어려워지면서 2013년 24억원까지 늘어났고 경영정상화를 통해 일부 지급했지만,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한 숙제로 남았다”고 지적했다.

이기철 위원은 “근로능력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비가 3억 3735만원 증액됐다”며 “탈빈곤 자립·자활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많은 대상자를 발굴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홍열 위원은 “충남청소년진흥원의 내포신도시 이전을 촉구한다”며 “낮은 접근성과 협소한 공간 문제 등으로 이용자들의 불편을 야기하고 있다. 진흥원이 내포신도시로 이전해 지역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조길행 위원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비가 173억 5015만원 증액됐다”며 “어르신들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업실적 확인 등을 철저히 해 불용처리 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연 위원은 “자연놀이돌 건립을 위해 부지매입비 74억원(도비), 건립비 26억원(국비 20억, 도비 6억)을 신규로 계상했다”며 “향후 사업추진계획 및 활용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말했다.

김원태 위원은 “역사문화원의 경우 인건비 인상을 적용 기준이 3.5%임에도 무려 35.4%를 증액했다”고 주장했다.

농업경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사

농기계 등 농업관련 보조사업 중 일부 관리 소홀 등 농기계 재판매 문제 지적
 대기오염 측정 차량 대부분 서북부 지역에 편중... 동남부 지역 측정 강화해야



충청남도의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는 11월 6일부터 12월 15일 까지 열린 농정·경제·기후환경국 소관 내년도 예산심사에서 논에 타작물 재배와 생산장비 지원 및 귀농인의 체험 관련 지원사업과 충남 동남부 지역의 대기오염 측정 강화를 주문했다.

강웅일 위원장은 “특정 벼 종자 예산 지원과 관련, 추후 도복피해 및 이상기후에 따른 피해를 입는다면 그 종자에 대한 피해관련 예산이 대규모로 투입되어야 하는 위험이 따른다”고 강조했다.

김명선 위원은 “귀농인 지원사업에 이론 교육보다는 실제 체험교육의 중요도가 높다”며 “특히 청년 귀농인 지원사업에는 체험교육 비중을 더욱 높여 청년 귀농인의 실패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문규 위원은 “천안지역 산업단지 분양 용지가 부족해 기업 유치에 난항이 예상된다”며 “12개 산단의 분양률이 99.9%에 달하면서 기업 유치 활동이 멈춘 상태다. 장기적인 관전과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송덕빈 위원은 “이동식 대기오염 측정 차량 구입 등이 화력발전소가 밀집한 서북부지역에 집중돼 있다”고 지적했다.

유병국 위원은 “현재 쌀 소비량이 매년 감소되는 추세”라며 “쌀은 우리 농업의 대표적인 상징성이 큰 만큼, 쌀 소비 진작을 위해 쌀 가공식품 개발 사업에 노력하고 신제품 개발 및 보급 사업을 더욱 육성해 농가소득이 증대되도록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복만 위원은 “도 차원에서의 물 관리 컨트롤 타워 구성 등 주민 불안 해소를 위한 체계화된 시스템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며 “장기적으로 댐 건설 등 극심한 가뭄으로 공장 가동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에 용수를 확보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응규 위원은 “대기종합상황실 시스템관리 예산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위탁업체 경쟁 입찰 등 예산을 절감할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홍재표 위원은 “현행 미세먼지 환경기준과 경보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해야 한다”며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유지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사

도 국토교통국 내년도 예산안 심사... 도민 편의 도모 예산 집행해야
도 소방본부 내년도 예산안심사... 소방공무원 근무환경 개선 및 장비 보강 등 주문



충남도의회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는 11월 6일부터 12월 15일까지 열린 재난안전·국토교통·해양수산·소방본부 소관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도민의 실생활과 수산 산업발전을 위한 예산 집중 점검과 소방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 및 장비보강 등을 주문했다.

맹정호 위원장은 “수산업과는 96억 9000만원이 증액 편성된 반면, 수산자원과는 123억 8000만원 감액 편성됐다”며 “수산업인의 소득증대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예산 확보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정광섭 위원은 “노후 차량과 개인안전장비 교체 예산이 전년대비 49억 4400만원 감액 편성됐다”며 “앞으로 현장 활동 소방장비 현대화에 주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조치연 위원은 “신유·정죽지구의 위험사면 정비사업과 당정·산성도로의 배수로 정비 등 공사가 명시 이월됐다”며 “동절기 폭설, 결빙 등으로 인한 2차 위험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책을 세워 달라”고 당부했다.

조이환 위원은 “소방복합시설 조성 사업은 2021년까지 476억 9000만원이 투입되는 계속비 사업으로 올해 첫 50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며 “소방공무원뿐만 아니라 지역민의 관심이 집중된 만큼 철저한 사업 추진을 이행해 달라”고 했다.

홍성현 위원은 “의용소방대 개인안전장구 보급 등 예산이 전년대비 1억 9800만원 감액됐다”며 “의용소방대원의 안전과 관련한 장비인 만큼 예산확보에 철저를 기해 달라”고 말했다.

유찬중 위원은 “지난해부터 이어지는 경북지역 지진으로 내진설계와 보강 사업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지진 피해 예방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전낙운 위원은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사업과 공동주택 공용시설 개선 사업 등을 통해 서민 주거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사

학교 공기질 개선과 학교 통폐합 기금 활용방안 등 문제 지적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1월 6일부터 12월 15일까지 열린 제300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및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학교 공기질 개선과 학교 통폐합 기금 활용방안, 명예퇴직자 기간제교사 재취업 문제 등을 지적했다.

장기승 위원장은 “학습부진 학생들이 매년 증가 추세”라며 “기본적인 소양과 역량을 갖춘 학생들을 육성할 지원 체계 마련과 기초학력 부진자 감소를 위한 당국의 전반적인 각성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용호 위원은 “문화·체험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학교별 차량 임대료가 A 학교 50만원, B 학교 140만원으로 제각각이다”라며 “도교육청에서 적정 기준을 마련해 통일된 기금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진환 위원은 “도내 일선 초중고 68개 학교에 총 867대의 공기 청정기를 설치할 예정”이라며 “이 사업이 자칫 공기청정기 설치에만 치중, 관리가 미흡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김용필 위원은 “해마다 늘어나는 수상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생존수영을 할 때 현장에서 실제 응급상황에 사용할 수영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며 “학생수영장 확충, 전문강사 확보 등 인프라 구축에도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백낙구 위원은 “기금 사용 계획에 학교마다 기간, 단가, 인원이 제각각이다”라며 “도교육청이 학교 간 균형이 맞을 수 있도록 조정 역할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형달 위원은 “A 초교에서 학교발전기금을 심의·의결 절차 없이 집행해 감사에 지적된 사례가 있었다”며 “학교발전기금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적법한 심의를 거쳐 학생들의 교육 활동을 위해 쓰여야 한다.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오배근 위원은 “다문화 학생이 증가 추세로, 이들의 생활과 밀접한 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하다”며 “획일적인 체험위주 보다는 감성 위주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오인철 위원은 “도내 학교에 보급된 스마트 교실에 대한 전수조사와 점검으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수시로 교육현황을 점검해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알맞은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도교육청 예산 122억 9272만원 삭감

불요불급한 사업이나 낭비성 사업에 대해 과감히 삭감... 효율적인 교육 여건 주문



충청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1일 충남교육청 소관 2018년도 예산안을 심의한 결과, 122억 9272만원을 삭감했다고 12월 12일 밝혔다.

이는 교육위원회에서 심의·삭감해 예결특위에 제출한 157억 800만원보다 약 34억 1600만원이 부활한 수치다.

앞서 도교육청은 2018년도 예산안을 올해 본예산 대비 2342억원(7.7%)이 증액된 3조 2637억원 규모로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응하는 미래인재 양성과 참 학력 신장을 위한 교육정책,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개선 등에 초점을 뒀다는 게 교육청의 설명이다.

하지만 예결특위는 이날 상임위에서 삭감한 예산안이 불요불급하거나 과다 계상했는지 여부에 대해 꼼꼼히 심의했다.

주요 삭감내용을 보면 ▲교무행정사 운영 21억 9595만원

▲스마트교육추진 21억 2380만원 ▲충남형마을교육공동체 구축 5억 6932만원 ▲학교홈페이지 관리 17억 9686만원 ▲청소년노동인권센터운영 3억원 등이다.

유찬중 예결특위 위원장은 “예결특위는 상임위에서 예비 심사를 거친 조정안에 대해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벌였다”며 “불요불급한 사업이나 낭비성 사업에 대해서는 과감히 삭감을,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안을 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학생들과 교사 등이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육여건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예결특위에서 최종 심의된 예산안은 오는 15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금산인삼엑스포지원특별위원회

지속 가능한 발전 가능성 점검

엑스포 조직위로부터 결과 보고 받고, 향후 잔존시설물, 광장 등 활용방안 논의
 문화와 예술, 교류의 공간으로 활용돼야... 고려인삼 종주국으로 위상 제고 당부



충남도의회 금산세계인삼엑스포지원특위는 12월 13일 특위 회의실에서 엑스포조직위로부터 개최결과 보고를 받고, 지속 가능한 발전 가능성 등을 점검했다.

인삼엑스포조직위는 이날 인삼세계인삼엑스포 운영 성과와 엑스포 잔존시설물 및 광장에 대한 사후 활용방안 등을 보고했다.

엑스포조직위에 따르면 9월 22일부터 10월 23일까지 개최된 금산세계인삼엑스포에는 총 283만 8935명(유료 39만 2000명)이 다녀갔다.

1억 2432만불(약 1491억원)의 수출 상담 실적을 올렸으며, 3190만불(약 382억원)에 대한 수출 계약도 체결했다. 고용 유발 효과 역시 6230명에 달하면서 약 1829억원의 부가가치 유발 효과를 이끈 것으로 확인됐다.

김석곤 위원장은 “고려인삼의 가치와 우수성을 재조명하고 종주지로서의 명예 회복과 재배·가공·유통 등 관련

업계 간 협력 계기가 마련됐다”며 “지속가능한 인삼 산업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산업박람회로서 의미있는 성과를 창출했다”고 격려했다.

이어 “민·관·경이 하나가 되어 자발적인 참여와 전방위적인 지원·협력을 통한 하모니 엑스포, 무사고 엑스포로 승화됐다”며 “엑스포가 열렸던 공간을 보다 내실있게 운영하기 위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복만 의원은 “엑스포에 대한 인식개선 및 인삼산업의 발전 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었다”며 “인삼산업의 재도약과 글로벌화, 역량 강화 도모를 통한 고려인삼 종주국으로서의 위상을 공고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금산인삼관과 상징조형물 등 잔존시설물에 대해서는 세계중요농업유산 홍보관으로 활용해야 한다”며 “광장은 인삼축제 장소로서 금산지역 문화와 예술, 교류의 공간으로 이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내포문화권발전특별위원회

신도시 조성 우수사례 벤치마킹

원주혁신신도시와 단양군 찾아 도시기반과 경관 조성 우수한 사례 살펴
공공기관 이전한 원주, 산학연관 협력 혁신 창출·확산하는 등 지역 발전 견인



충남도의회 내포문화권발전특별위원회는 11월 2일과 11월 3일 양일간 원주혁신신도시와 단양군을 찾아 도시기반 시설과 경관 조성 등을 벤치마킹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방문은 특정지역 개발사업 추진 사례 중 우수 사례를 보고, 도시기반 시설 건설에 따른 문제점 발굴 및 해소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됐다.

첫날 원주혁신신도시 개발사업지구와 뮤지엄산 등을 찾은 특위 위원들은 자연과 사람이 어우러진 건강한 도시의 기반 시설을 살폈다.

특위에 따르면 원주혁신신도시에는 한국관광공사와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건강보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13개 공공기관이 이전했다.

이종화 위원장은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함으로써 지역 발전과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등 수준 높은 생활

환경을 갖추고 있다”며 “산학연관이 서로 협력, 혁신을 창출·확산하는 등 지역발전을 견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기영 의원은 뮤지엄산을 찾은 자리에서 “산속에 감춰진 뮤지엄산은 도시의 번잡함에서 벗어나 삶의 여유와 자연과 예술 속에서의 휴식을 선물하고 있다”며 “내포신도시에도 이러한 건축물이 접목돼 시너지 효과를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위 위원들은 둘째 날 충북 단양다누리센터와 만천스카이워크 등을 찾은 자리에서도 도시개발 및 시가지 공간 조성 등 도시경관 조성 현황을 청취했다.

유병국 의원은 “단양군은 충북으로부터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 계획을 승인, 관광종합타운 조성계획을 수립했다”며 “정부지원 등을 통해 도시 기반이 구축된 만큼, 내포에도 이 같은 전략을 배울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제 300 회

정례회 주요안건 처리현황

총 49건 조례안 32, 동의안 8, 예산안 7, 건의안 1, 기타 1 / 원안가결 44, 수정가결 5

안건	의안명	발의자	처리결과	주요내용
기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각 상임위원회위원장	원안가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충남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대해 종합적이고 심층적인 감사 실시 - 감사기간 : 2017. 11. 7. ~ 11. 20.(14일간)
조례안	충청남도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유익환 의원 (김동욱, 김석곤, 김종문, 김종필, 이공휘, 이종화)	원안가결	•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을 갖춘 충남도민 육성을 위한 인성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함 - 인성교육에 관한 체계적인 정책수립 시행 노력 등 도지사의 책무 규정(안 제4조) - 전문법인 및 관련단체에 위탁 시행 가능(안 제6조) - 인성교육 진흥에 필요한비용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안 제8조)
조례안	충청남도 데이터기반행정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이공휘 의원 (김동욱, 김 연, 김종문, 유익환, 유찬중, 조길행, 홍재표 의원)	원안가결	• 제4차 산업혁명 시대 데이터기반행정 빅데이터의 활용과 기반구축을 통한 지역경제발전을 도모하기 위함 - 기본계획수립·시행(매년) 및 실태조사(안 제6조~제7조) - 충청남도 빅데이터위원회 설치·운영 (안 제9조~제12조) ·위원 11명 이내 구성, 임기 2년 - 빅데이터분석센터 설치·운영(안 제17조) - 사무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 가능(안 제18조)
조례안	충청남도도정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도지사	원안가결	• 통합·조정 및 지방자치 기능을 강화하고 위원회의 심의 조정과 기능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규정을 개정하는 등 행정환경변화에 맞게 전반적인 사항을 재정비하려는 것임 - 조례 제명 변경(충청남도 도정조정회의의 조례) - 현행 심의 조정사항을 정비(안 제3조) - 도정상황관리회의 구성 및 운영 규정 신설(안 제9조) - 운영상황 점검 및 보고 규정 신설(안 제11조)

안건	의안명	발의자	처리결과	주요내용
조례안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원안가결	• 국정과제 및 도정 주요 현안사업을 반영한 행정기구 및 정원 개편사항을 반영하는 것임 - 공동체정책관 업무, 주요 공공시설물 등의 디자인 품질에 관한 업무, 인구청년정책팀 업무, 동물방역위생과 업무, 보건환경연구원 대기평가관 업무, 충남도서관 업무 신설 및 조정(안 제4조~제65조의 2) - 정원 조정내역 반영(안 제70조) ·4,362명 ⇒ 4,705명 (증 343명)
조례안	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원안가결	• 충청남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가 제정 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것임 - 화물자동차 신고포상금 지급 등 신설 (도로교통과)
조례안	충청남도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원안가결	• 공무원 임용시험 주관이 변경됨에 따라 내용을 반영하기 위함 - ‘중앙인사위원회 위원장’⇒‘인사혁신처장’으로 정정
조례안	충청남도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도지사	원안가결	• 상위법령에서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조건 임용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관련 사항을 대통령령,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이 시행되고 있어 중복으로 규정 하고 있는 현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동의안	2018년도 미래성장본부 출연계획안	도지사	원안가결	•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 71,500천 원 - 지자체 홍보 지원 · (TV방송) KBS 1TV ‘6시 내고향’ 기획홍보 · (전광판) 정부서울청사 및 지자체 전광판을 활용 · (온라인) 재단 블로그 네이버 플레이스판 활용 홍보 · ‘지역홍보센터’ 및 ‘지역특산품판매장’ 상시운영 - 지역발전전략 수립 및 지원 · 정책개발, 인재양성, 정책자료제공 등
조례안	충청남도 도립 치매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김기영 의원 (김 연, 김원태, 김홍열, 윤지상, 이기철, 정정희, 조길행 의원)	원안가결	• 도립 치매요양병원의 효율적인 운영과 사업목적에 맞는 용어 및 법령 등으로 내용을 정비하기 위함 - 병원 위탁기간(5년 이내)을 1회에 한하여 갱신가능(안 제4조) (당초 : 경영능력 등을 감안하여 기간 연장, 단축 가능) - 퇴원요구 환자가족의 동의를 얻어 퇴원 결정 가능(안 제7조) - 충청남도 도립 치매요양병원 명칭 및 위치 (별표) · 도립 서산노인전문병원, 도립 홍성노인전문병원
조례안	충청남도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조길행 의원 (김기영, 김 연, 김원태, 김홍열, 유익환, 이기철, 장기승 의원)	원안가결	•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관한 사항을 근거법령에 포함하여 수혜자의 편의성과 행정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관련 서류 확인이 가능하도록 규정 개정(안 제4조 3항 신설)

안건	의안명	발의자	처리결과	주요내용
조례안	충청남도 장기요양요원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이기철 의원 (김기영, 김 연, 김원태, 김홍열, 윤지상, 정정희, 조길행 의원)	원안가결	-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장기요양요원들의 처우 및 지위 향상 등에 필요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과 복지 증진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도지사의 책무규정(안 제3조) -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사항 규정(안 제7조~제9조)
조례안	충청남도 한국수화언어 사용 촉진 및 청각장애인 의사소통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김 연 의원 (김기영, 김원태, 김중문, 맹정호, 윤지상, 이기철, 정정희, 조길행, 홍재표 의원)	원안가결	- 한국수화언어 사용자와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 지원으로 청각장애인의 사회참여 증진과 자립생활에 기여하기 위함 - 한국수어 사용 및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 지원에 관한 실태조사(3년마다) 실시 규정(안 제5조) - 한국수어교육센터 각 행정시군에 설치·운영 규정(안 제6조) - 충청남도수어통역센터 설치·운영 규정(안 제7조) - 한국수어의 날 기념행사 추진 규정(안 제12조)
조례안	충청남도 문학진흥 조례안	도지사	원안가결	충청남도의 문학진흥과 도민의 문학 향유 증진에 기여하기 위함
조례안	충청남도 무궁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이공희 의원 (김동욱, 김문규, 김 연, 김중문, 유병국, 유익환, 유찬종 의원)	수정가결	무궁화동산 조성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나라꽃 무궁화의 위상 제고에 기여하기 위함
조례안	충청남도 국내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원안가결	- 도내 기업유치의 탄력성을 제고하기 위함 - ‘이전 및 투자기업’의 정의를 국내 1년 이상 기업으로 변경(당초: 3년 이상 기업)(안 제2조) - 우리 도로 이전한 수도권 소재기업 근로자에 대한 이주지원 보조금 신설(안 제6조의 2)
조례안	충청남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안	도지사	원안가결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인공조명을 우리 도 여건에 맞게 환경 친화적으로 관리하기 위함 - 빛공해방지위원회 구성·운영(안 제2조~제8조) · 위원 5~10명 이내 구성 (위촉위원 임기: 2년, 공무원 위원 임기: 재직기간) - 조명기구 정비·개선 사업비 예산 지원 규정(안 제11조)
조례안	충청남도 걷는 길 조성 및 관리·운영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도지사	원안가결	- 지역의 자연환경과 역사·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고 도민이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에서 걷는 길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10년 단위로 걷는 길 종합계획 수립·시행 규정(안 제3조) - 걷는 길 정보망 구축·운영 규정(안 제6조) - ‘충청남도 명품길’ 지정 운영(안 제8조)

안건	의안명	발의자	처리결과	주요내용
조례안	충청남도 도시림 등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조례안	도지사	원안가결	-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도내 도시림, 생활림, 가로수 등을 체계적으로 조성 및 관리하기 위함 - 도시림 등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구성 - 구성인원 : 15명 이하 - 임기 : 3년 (당연직은 해당직위 재직기간) - 기능 : 도시림 등 조성·관리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심의 등
조례안	충청남도 악취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과 악취방지시설 및 개선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도지사	원안가결	- 사업활동 등으로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함으로써 도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악취 배출시설에 대한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 복합악취의 경우, 배출구에서는 공업지역은 1000 이하에서 500 이하, 기타지역은 500 이하에서 300 이하로, 부지경계선에서는 공업지역은 20 이하에서 15 이하, 기타지역은 15 이하에서 10 이하로 강화 - 암모니아 등 22개 지정악취물질에 대해 50% 이상 강화 -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 시 보조금 지원 규정(안 제4조)
조례안	충청남도 경제위기대응 시스템 구축·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도지사	원안가결	- 충남의 경제상황을 상시적으로 점검하고, 경제위기상황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지역차원의 경제위기대응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자 함 - 경제상황관리회의의 설치 및 기능, 구성, 운영 등(안 제16조 ~ 제20조) - 경제위기대응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실무적 사항과 경제상황점검회의의 안건 등을 사전에 검토·협의하기 위하여 경제상황관리회의를 두고, 행정부지사를 의장으로 하고 도의원 2명을 포함한 50명 이내로 구성하며, 매 분기마다 개최함
조례안	충청남도 공동주택관리 감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오인철 의원 (장기승, 이용호, 이진환, 김용필, 백낙구, 서형달, 오배근 의원)	수정가결	- 공동주택에 관한 법률이 새로 제정되어, 공동주택관리 감사의 근거법이 「주택법」에서 「공동주택관리법」으로 수정되어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 - 관리규약 제·개정 및 어린이집 임대료 등의 산정과 관련하여 「충청남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서 정하는 바와 다르게 규정되어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 충청남도지사가 감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함
조례안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백낙구 의원 (김용필, 서형달, 오배근, 오인철, 이용호, 이진환, 장기승 의원)	원안가결	-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내용을 정비하고 관내 폐교재산의 건전한 활용을 촉진하기 위함 - 폐교재산 관련 조문을 별도의 장으로 신설(제8장) - 폐교재산 활용세부계획 수립 시 기초자치단체 의견 수렴 규정(안 제59조) -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에 대한 교육장 위임사항과 대부·매각 허용할 수 있는 사업 범위 규정(안 제60조)

안건	의안명	발의자	처리결과	주요내용
조례안	충청남도교육청 학습부진 학생에 대한 교육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백낙구 의원 (김용필, 서형달, 오배근, 오인철, 이용호, 이진환, 장기승 의원)	원안가결	• 학습부진 학생들의 학습능력 향상 지원을 통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여하기 위함 - 학습부진 학생관련 교육시책 마련 등 교육감책무 규정 (안 제3조) - 학습부진 학생 지원계획 수립 및 실행조치(안 제4조~제5조) - 충청남도 학습부진 학생 지원협의회 운영(안 제7조~제11조) · 위원 구성: 13명 이내 · 위원 임기: 공무원-재임기간, 위촉직-2년(1회 연임 가능)
조례안	충청남도교육청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서형달 의원 (김용필, 백낙구, 오배근, 오인철, 이용호, 이진환, 장기승 의원)	원안가결	• 충청남도교육청의 외국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관련 기관 간의 국제교류협력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국제교류협력위원회 설치·운영 규정(안 제6조~제10조) · 위원 11명 이내, 임기 2년 -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도의회 의결 필요 규정(안 제11조)
조례안	충청남도교육청 공문서 감축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오배근 의원 (김용필, 백낙구, 서형달, 오인철, 이용호, 이진환, 장기승 의원)	원안가결	• 각급 교육기관 교직원의 행정업무 경감과 학생 교육활동의 내실화에 기여하기 위함 - 문서발송 책임관 지정·운영(안 제5조) - 공문서 불편신고센터 설치·운영 규정(안 제9조) - 공문서 총량제 시행 규정(안 제10조)
조례안	충청남도교육청 학교운동부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오배근 의원 (김용필, 백낙구, 서형달, 오인철, 이용호, 이진환, 장기승 의원)	원안가결	• 학생선수의 경기력 및 학업성취 향상 등 학교체육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함 - 학교운동부 운영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등의 교육감 책무 규정(안 제4조) - 학교운동부 학생선수 지원계획 수립·시행(안 제5조) - 학생선수의 기초학력 보장 프로그램 등 교육지원 방안 마련 규정(안 제7조)
조례안	충청남도교육청 효행교육 진흥 조례안	대표발의: 오배근 의원 (김용필, 백낙구, 오인철, 이용호, 이진환, 장기승 의원)	원안가결	• 학생들이 부모와 어른을 존경하고 올바른 인성을 함양하는 데 기여하기 위함 - 효행교육 시행계획 매년 수립·시행 규정(안 제5조) - 각급기관 효행교육실시 및 교사연수, 교육자료 개발 및 교육프로그램 기획 추진 규정(안 제6조)
조례안	충청남도교육청 진로직업체험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오인철 의원 (김용필, 김중문, 백낙구, 서형달, 오배근, 이용호, 이진환, 장기승 의원)	원안가결	• 교육지원청, 지방자치단체, 지역진로 유관기관·단체 등과 연계한 단위학교에 대한 종합적인 진로직업체험을 지원하기 위함 - 진로직업체험 지원 전담기구(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4조~6조) - 시·군별 진로직업체험 협력 협의체 구성 규정(안 제8조)

안건	의안명	발의자	처리결과	주요내용
조례안	충청남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대표발의: 오인철 의원 (김용필, 백낙구, 서형달, 오배근, 이용호, 이진환, 장기승 의원)	원안가결	- 충남교육청 소속 각종 위원회 운영의 전문가와 도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민주성·투명성·효율성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 - 각종 위원회 설치·구성 등 운영사항 규정(안 제4조~제7조) - 위원회 운영 최소기간 설정(5년 초과 금지)(안 제4조) - 공무원이 아닌 위촉직 위원 임기 3년 이내(안 제5조) - 위촉직 위원 3개 위원회 초과 중복 위촉안 제5조) - 회의록 작성 및 공개 규정(안 제15조)
조례안	충청남도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물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대표발의: 오인철 의원 (김용필, 김종문, 백낙구, 서형달, 오배근, 이용호, 이진환, 장기승 의원)	원안가결	-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을 돕고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하기 위함 - 우선구매 촉진계획 매년 수립·시행 규정(안 제6조) - 우선구매 실적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홈페이지 등에 공개(안 제8조) - 우선구매 촉진 기여 기관 및 단체 등에 표창(안 제9조)
조례안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감	원안가결	- 조문을 법규체계에 맞게 정리하고 분장사무를 현재업무에 맞게 조정하여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함 - 부서간 업무조정(교육통계관리, 공무원범죄처분 결과 처분 등) - 신설업무 추가(교권보호, 교육환경보호구역 관리 등) - 직속기관 소멸업무 삭제(학교평가, 수련활동 지도자 연수 등)
조례안	충청남도 독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감	수정가결	- 우리 道가 설치·경영하는 각급학교의 신설, 폐지, 주소변경 등에 따른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임 - 학교신설: 5교 2원(초2, 중1, 특수1, 병유1, 단유1, 방송중1) - 위치변경: 3교 2원(초2, 고1, 병유2) - 학교폐지: 2교(보령 청룡초고대분교, 홍성 결성중) - 주소변경: 6교 6원(홍성 행정구역 면→읍 승격) - 기타신설: 2교(천안중앙고, 홍성고부설방송통신고)
조례안	충청남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교육감	원안가결	-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의 각종 시설 사용 및 사용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함 - 제명변경: 충청남도교육청 각급기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 사용신청 등 절차 규정(안 제8조) - 사용료 및 사용료의 징수, 감면, 반환에 대한 규정(안 제4조~제7조)

안건	의안명	발의자	처리결과	주요내용											
동의안	2018년도 정기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교육감	원안가결	• 계획 총괄 <table border="1"> <thead> <tr> <th>기관명</th><th>소재지</th><th>면적(㎡)</th><th>금액(천원)</th><th>비고</th></tr> </thead> <tbody> <tr> <td rowspan="2">충남학생 임해수련원</td><td>보령시 신흑동 2287-1</td><td rowspan="2">2,000</td><td rowspan="2">3,326,470</td><td rowspan="2"></td></tr> <tr> <td>보령시 신흑동 2287-2</td></tr> </tbody> </table>	기관명	소재지	면적(㎡)	금액(천원)	비고	충남학생 임해수련원	보령시 신흑동 2287-1	2,000	3,326,470		보령시 신흑동 2287-2
기관명	소재지	면적(㎡)	금액(천원)	비고											
충남학생 임해수련원	보령시 신흑동 2287-1	2,000	3,326,470												
	보령시 신흑동 2287-2														
동의안	충청남도 중학교 학교군· 중학구의 설정 및 무시험 입학 추천방법 일부개정 동의안	교육감	원안가결	• 동·읍지역 초·중학생이 희망할 경우 면지역 중학교에 입학, 전·편입학 할 수 있도록 학교군·중학구를 변경하고 공동 학교군·학구 설정 및 신설학교를 추가하며 폐지학교를 삭제처리 하기 위함 - 신설학교 학교군·학구 반영(6교 : 초4, 중2) · 천안한들초, 천안성성초, 서산서남초, 보성초, 덕산중, 모산중 - 폐지학교(3교 : 초2, 중1) · 장곡초반계분교장, 청룡초고대분교장, 결성중 - 학교·학구 신설(배방학교 신설), 폐지(배방학교·결성학구) - 공동학교·학구 설정 · 천안학교(직산초 판정리)과 입장학구 등 6건											
동의안	인성교육지원 민간위탁 동의안	교육감	원안가결	• 학생들의 인성교육을 민간단체들이 보유하고 있는 물리적 인프라를 활용함으로써 다양한 인성 덕목을 기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대상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함 - 위탁기간 : 2018. 1월 ~ 12월 - 사업비 : 자체 150백만원 - 위탁기관선정 방법 : 공모											
동의안	생명존중자살예방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교육감	원안가결	• 사업 중 고위험(자살)군 대상학생 및 가족의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치유를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대상사무 위탁을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 위탁기간 : 2018. 3월 ~ 12월 - 사업비 : 자체 50백만원 - 위탁기관선정 방법 : 공모에 의한 수의계약											
동의안	장애교원 보조공학기기 지원 민간위탁 동의안	교육감	원안가결	• 장애교원의 고용촉진과 직업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보조 공학기기 지원 사업을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로의 사무위탁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 위탁기간 : 2018. 1월 ~ 12월 - 사업비 : 자체 64백만원 - 위탁기관선정 방법 : 기간연장(한국장애인고용공단)											

안건	의안명	발의자	처리결과	주요내용																																																				
동의안	2018 장애학생 가족지원 프로그램 민간위탁 동의안	교육감	원안가결	- 장애학생 가족지원 프로그램을 지역 특성을 고려하고 체계적인 프로그램 운영관리를 위해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대상사무를 위탁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 위탁기간 : 2018. 4월 ~ 12월 - 사업비 : 자체 50백만원 - 위탁기관선정 방법 : 공개모집																																																				
동의안	학원의 설립·운영자 및 강사 연수 민간위탁 동의안	교육감	원안가결	- 학원 운영의 투명성 강화와 건전한 학원발전을 위한 학원의 설립·운영자 및 강사 연수의 민간위탁을 위하여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 위탁기간 : 2018. 1월 ~ 12월 - 사업비 : 자체 50백만원 - 위탁 방법 : 한국학원총연합회 및 교육감이 지정·고시하는 연수기관에 위탁																																																				
예산안	2017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도지사	원안가결	2017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아래와 같음 〈단위 : 백만원〉 <table><tr><th>회 계 별</th><th>예 산 안</th><th>기정예산액</th><th>비교증감</th><th>증감률(%)</th></tr><tr><td>합 계</td><td>5,720,050</td><td>5,486,628</td><td>233,422</td><td>4.25</td></tr><tr><td>일반회계</td><td>5,234,400</td><td>5,032,000</td><td>202,400</td><td>4.02</td></tr><tr><td>특별회계(8종)</td><td>485,650</td><td>454,628</td><td>31,022</td><td>6.82</td></tr></table>	회 계 별	예 산 안	기정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합 계	5,720,050	5,486,628	233,422	4.25	일반회계	5,234,400	5,032,000	202,400	4.02	특별회계(8종)	485,650	454,628	31,022	6.82																																
회 계 별	예 산 안	기정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합 계	5,720,050	5,486,628	233,422	4.25																																																				
일반회계	5,234,400	5,032,000	202,400	4.02																																																				
특별회계(8종)	485,650	454,628	31,022	6.82																																																				
예산안	2017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도지사	원안가결	기금운용계획 현황 〈단위 : 천원〉 <table><tr><th>기 금 명</th><th>변 경</th><th>당 초</th><th>증 감</th></tr><tr><td>합 계 (11기금)</td><td>1,261,545,400</td><td>1,069,094,400</td><td>192,451,000</td></tr><tr><td>통합관리기금</td><td>66,078,400</td><td>66,078,400</td><td>0</td></tr><tr><td>지역개발기금</td><td>880,210,000</td><td>694,847,000</td><td>185,363,000</td></tr><tr><td>남북교류협력기금</td><td>2,905,000</td><td>2,905,000</td><td>0</td></tr><tr><td>양성평등기금</td><td>3,890,000</td><td>3,890,000</td><td>0</td></tr><tr><td>청소년육성기금</td><td>2,928,000</td><td>2,928,000</td><td>0</td></tr><tr><td>사회복지기금</td><td>7,132,000</td><td>7,132,000</td><td>0</td></tr><tr><td>재해구호기금</td><td>33,728,000</td><td>26,640,000</td><td>7,088,000</td></tr><tr><td>식품진흥기금</td><td>8,460,000</td><td>8,460,000</td><td>0</td></tr><tr><td>농어촌진흥기금</td><td>24,678,000</td><td>24,678,000</td><td>0</td></tr><tr><td>중소기업육성기금</td><td>179,103,000</td><td>179,103,000</td><td>0</td></tr><tr><td>재난관리기금</td><td>52,433,000</td><td>52,433,000</td><td>0</td></tr></table>	기 금 명	변 경	당 초	증 감	합 계 (11기금)	1,261,545,400	1,069,094,400	192,451,000	통합관리기금	66,078,400	66,078,400	0	지역개발기금	880,210,000	694,847,000	185,363,000	남북교류협력기금	2,905,000	2,905,000	0	양성평등기금	3,890,000	3,890,000	0	청소년육성기금	2,928,000	2,928,000	0	사회복지기금	7,132,000	7,132,000	0	재해구호기금	33,728,000	26,640,000	7,088,000	식품진흥기금	8,460,000	8,460,000	0	농어촌진흥기금	24,678,000	24,678,000	0	중소기업육성기금	179,103,000	179,103,000	0	재난관리기금	52,433,000	52,433,000	0
기 금 명	변 경	당 초	증 감																																																					
합 계 (11기금)	1,261,545,400	1,069,094,400	192,451,000																																																					
통합관리기금	66,078,400	66,078,400	0																																																					
지역개발기금	880,210,000	694,847,000	185,363,000																																																					
남북교류협력기금	2,905,000	2,905,000	0																																																					
양성평등기금	3,890,000	3,890,000	0																																																					
청소년육성기금	2,928,000	2,928,000	0																																																					
사회복지기금	7,132,000	7,132,000	0																																																					
재해구호기금	33,728,000	26,640,000	7,088,000																																																					
식품진흥기금	8,460,000	8,460,000	0																																																					
농어촌진흥기금	24,678,000	24,678,000	0																																																					
중소기업육성기금	179,103,000	179,103,000	0																																																					
재난관리기금	52,433,000	52,433,000	0																																																					

안건	의안명	발의자	처리결과	주요내용																																																								
예산안	2018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도지사	수정가결	• 2018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총규모는 아래와 같음 〈단위 : 백만원〉 <table><tr><th>회계별</th><th>예산안</th><th>전년도예산액</th><th>비교증감</th><th>증감률(%)</th></tr><tr><td>합계</td><td>5,636,528</td><td>5,172,467</td><td>464,061</td><td>8.97</td></tr><tr><td>일반회계</td><td>5,173,500</td><td>4,735,000</td><td>438,500</td><td>9.26</td></tr><tr><td>특별회계(8종)</td><td>463,028</td><td>437,467</td><td>25,561</td><td>5.84</td></tr></table>	회계별	예산안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합계	5,636,528	5,172,467	464,061	8.97	일반회계	5,173,500	4,735,000	438,500	9.26	특별회계(8종)	463,028	437,467	25,561	5.84																																				
회계별	예산안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합계	5,636,528	5,172,467	464,061	8.97																																																								
일반회계	5,173,500	4,735,000	438,500	9.26																																																								
특별회계(8종)	463,028	437,467	25,561	5.84																																																								
예산안	2018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	도지사	원안가결	• 기금 운용계획 현황 〈단위 : 천원〉 <table><tr><th>기금명</th><th>2018년도 계획</th><th>2017년도 계획</th><th>증감</th></tr><tr><td>합계(12기금)</td><td>1,011,189,000</td><td>1,069,094,400</td><td>△57,905,400</td></tr><tr><td>통합관리기금</td><td>66,183,400</td><td>66,078,400</td><td>105,000</td></tr><tr><td>지역개발기금</td><td>625,819,000</td><td>694,847,000</td><td>△69,028,000</td></tr><tr><td>재정안정화기금</td><td>2,015,000</td><td>0</td><td>2,015,000</td></tr><tr><td>남북교류협력기금</td><td>3,450,000</td><td>2,905,000</td><td>545,000</td></tr><tr><td>양성평등기금</td><td>3,901,000</td><td>3,890,000</td><td>11,000</td></tr><tr><td>청소년육성기금</td><td>2,920,000</td><td>2,928,000</td><td>△8,000</td></tr><tr><td>사회복지기금</td><td>7,076,000</td><td>7,132,000</td><td>△56,000</td></tr><tr><td>재해구호기금</td><td>29,923,000</td><td>26,640,000</td><td>3,283,000</td></tr><tr><td>식품진흥기금</td><td>7,463,000</td><td>8,460,000</td><td>△997,000</td></tr><tr><td>농어촌진흥기금</td><td>25,286,000</td><td>24,678,000</td><td>608,000</td></tr><tr><td>중소기업육성기금</td><td>179,830,600</td><td>179,103,000</td><td>727,600</td></tr><tr><td>재난관리기금</td><td>57,322,000</td><td>52,433,000</td><td>4,889,000</td></tr></table>	기금명	2018년도 계획	2017년도 계획	증감	합계(12기금)	1,011,189,000	1,069,094,400	△57,905,400	통합관리기금	66,183,400	66,078,400	105,000	지역개발기금	625,819,000	694,847,000	△69,028,000	재정안정화기금	2,015,000	0	2,015,000	남북교류협력기금	3,450,000	2,905,000	545,000	양성평등기금	3,901,000	3,890,000	11,000	청소년육성기금	2,920,000	2,928,000	△8,000	사회복지기금	7,076,000	7,132,000	△56,000	재해구호기금	29,923,000	26,640,000	3,283,000	식품진흥기금	7,463,000	8,460,000	△997,000	농어촌진흥기금	25,286,000	24,678,000	608,000	중소기업육성기금	179,830,600	179,103,000	727,600	재난관리기금	57,322,000	52,433,000	4,889,000
기금명	2018년도 계획	2017년도 계획	증감																																																									
합계(12기금)	1,011,189,000	1,069,094,400	△57,905,400																																																									
통합관리기금	66,183,400	66,078,400	105,000																																																									
지역개발기금	625,819,000	694,847,000	△69,028,000																																																									
재정안정화기금	2,015,000	0	2,015,000																																																									
남북교류협력기금	3,450,000	2,905,000	545,000																																																									
양성평등기금	3,901,000	3,890,000	11,000																																																									
청소년육성기금	2,920,000	2,928,000	△8,000																																																									
사회복지기금	7,076,000	7,132,000	△56,000																																																									
재해구호기금	29,923,000	26,640,000	3,283,000																																																									
식품진흥기금	7,463,000	8,460,000	△997,000																																																									
농어촌진흥기금	25,286,000	24,678,000	608,000																																																									
중소기업육성기금	179,830,600	179,103,000	727,600																																																									
재난관리기금	57,322,000	52,433,000	4,889,000																																																									
예산안	2017년도 제3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교육감	원안가결	• 2017년도 제3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아래와 같음 〈단위 : 백만원〉 <table><tr><th>구분</th><th>추경예산안</th><th>기정예산액</th><th>비교증감</th><th>증감률</th></tr><tr><td>세입·세출</td><td>3,369,137</td><td>3,360,076</td><td>9,061</td><td>0.3%</td></tr></table>	구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세입·세출	3,369,137	3,360,076	9,061	0.3%																																														
구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세입·세출	3,369,137	3,360,076	9,061	0.3%																																																								
예산안	2018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교육감	수정가결	• 2018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총규모는 아래와 같음 〈단위 : 백만원〉 <table><tr><th>구분</th><th>예산안</th><th>전년도예산액</th><th>비교증감</th><th>증감률</th></tr><tr><td>세입·세출</td><td>3,263,711</td><td>3,029,476</td><td>234,235</td><td>7.7%</td></tr></table>	구분	예산안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세입·세출	3,263,711	3,029,476	234,235	7.7%																																														
구분	예산안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세입·세출	3,263,711	3,029,476	234,235	7.7%																																																								

안건	의안명	발의자	처리결과	주요내용																																												
예산안	2018년도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운용계획안	교육감	원안가결	2018년도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운용 계획안 - 기금 운용계획 대상교 : 총 17교 (신규) 대상교(3교) : 신리초(아산), 갈산중(홍성), 금마중(홍성) - 기금 운용액 : 금5,011,143천원 - 자금운용 계획 <table> <tr><th colspan="4">수입 계획</th></tr> <tr> <th>수입항목</th> <th>'18년 수입액</th> <th>'17년 수입액</th> <th>증감</th> </tr> <tr> <td>합 계</td> <td>47,530,341</td> <td>38,485,463</td> <td>9,044,878</td> </tr> <tr> <td>전입금</td> <td>11,900,929</td> <td>10,411,095</td> <td>1,489,834</td> </tr> <tr> <td>예치금회수</td> <td>35,070,399</td> <td>27,568,339</td> <td>7,502,060</td> </tr> <tr> <td>이자수입</td> <td>559,013</td> <td>506,029</td> <td>52,984</td> </tr> </table> <table> <tr><th colspan="4">지출 계획</th></tr> <tr> <th>지출항목</th> <th>'18년 지출액</th> <th>'17년 지출액</th> <th>증감</th> </tr> <tr> <td>합 계</td> <td>47,530,341</td> <td>38,485,463</td> <td>9,044,878</td> </tr> <tr> <td>통폐합학교지원</td> <td>5,011,143</td> <td>3,415,064</td> <td>1,596,079</td> </tr> <tr> <td>예치금</td> <td>42,519,198</td> <td>35,070,399</td> <td>7,448,799</td> </tr> </table>	수입 계획				수입항목	'18년 수입액	'17년 수입액	증감	합 계	47,530,341	38,485,463	9,044,878	전입금	11,900,929	10,411,095	1,489,834	예치금회수	35,070,399	27,568,339	7,502,060	이자수입	559,013	506,029	52,984	지출 계획				지출항목	'18년 지출액	'17년 지출액	증감	합 계	47,530,341	38,485,463	9,044,878	통폐합학교지원	5,011,143	3,415,064	1,596,079	예치금	42,519,198	35,070,399	7,448,799
수입 계획																																																
수입항목	'18년 수입액	'17년 수입액	증감																																													
합 계	47,530,341	38,485,463	9,044,878																																													
전입금	11,900,929	10,411,095	1,489,834																																													
예치금회수	35,070,399	27,568,339	7,502,060																																													
이자수입	559,013	506,029	52,984																																													
지출 계획																																																
지출항목	'18년 지출액	'17년 지출액	증감																																													
합 계	47,530,341	38,485,463	9,044,878																																													
통폐합학교지원	5,011,143	3,415,064	1,596,079																																													
예치금	42,519,198	35,070,399	7,448,799																																													
건의안	중앙정부 권한의 지방 이양과 입법공백상태 해소 및 조례 위임을 위한 지방계약법령 개정 건의안	대표발의 : 김종문 의원 (김동욱, 김석곤, 김종필, 이공휘, 조길행, 김 연, 김원태 의원)	원안가결	4차 산업혁명의 뿌리인 소프트웨어산업의 생태계 조성 및 벤처 기업 육성의 걸림돌인 지방계약법 시행령과 위임행정규칙의 입법공백을 해소하고, - 벤처기업 진입장벽 및 승자독식, 기득권 보장수단인 ‘평가항목 및 평가배점’을 혁신하고, 기술개발 및 최우수 제품의 판로 보장 및 촉진을 위하여, 구시대적인 정성적 평가를 최소화하고, 품질성능 평가시험을 통한 객관적인 정량평가의 최대화를 도입하고, - 대통령의 중앙정부 권한의 지방 이양 공약에 따라 평가기준 제정 등을 조례로 위임하도록 관계 법령 개정을 건의함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민간단체 활용방안

09. 13. 이종화 의원

안전한 네트워크 구성 위한 지원 방안 논의

민간단체의 체계적인 지원과 유기적인 협력관계 구축으로 안전한 사회 만들어야



충남지역에서 발생하는 자연재난 및 각종 사고 등을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선 민간단체의 체계적인 지원과 유기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각종 사건사고에 있어 경찰이나 소방력에만 의지할 것이 아니라 민간단체와 지역민이 함께 안전 네트워크를 구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충남도의회는 9월 13일 홍성문예회관에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민간단체 활용방안'을 주제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종화 의원의 요청으로 진행된 이번 의정토론회는 안전한 지역사회 구축을 위해 다양한 네트워크

구축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의원은 이 자리에서 "지금까지 재난 및 사고발생에 따른 책임은 중앙 및 지방정부의 책임으로 인식됐던 게 사실"이라며 "모두의 책임이라는 인식을 공유하여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 속에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도민과 자원봉사단체 간의 민관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며 "지역사회 안전을 확보할 방안에 관해 조례 제정 등 근거를 확립하겠다"고 덧붙였다.

소방공무원 보건복지 향상 위한 의정토론회

10. 25. 홍성현 의원

소방공무원 복건복지 향상 위한 의정토론회 개최

홍성현 의원, 소방공무원 열악한 보건복지 처우 개선 주장… 소방전문병원 서둘러야



충남도의회는 10월 25일 천안교육지원청에서 소방공무원 보건복지 향상 방안 마련을 위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

홍성현 의원의 요청으로 진행된 이번 의정토론회는 소방공무원들의 열악한 보건복지 처우를 도민에게 알리고, 대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홍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소방공무원의 공사상자는 450명으로, 최근 5년간 54.1% 증가했다. 2015년 특수건강검진을 받은 전체 소방관 3만7638명 중 62%인 2만 3203명이 건강이상 판정을 받는 등 소방관의 건강관리 문제에 경고등이 커진 상태다.

문제는 소방공무원의 업무특수성을 고려, 이를 치료하기 위한 소방전문병원 설립 계획이 지체되고 있다는 점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업무수행 중 화상이나 정신적 피해를 입은 소방공무원들은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홍 의원의 주장이다.

홍 의원은 “국내 소방공무원에 대한 전문병원은 별도로 없고, 공상 및 질병치료에 대해서는 일반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라며 “일각에서는 국군병원, 경찰병원은 있지만, 소방병원은 없는 대한민국의 부정적인 단면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소방업무의 특성을 고려할 때 화상 환자 응급치료의 기능을 갖춘 센터와 근골격계질환 센터, PTSD 센터 등이 설치돼야 한다”며 “소방업무에 대한 공익적 가치를 수익성만을 기준으로 비교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아산지역 마한·백제 문화재 활용방안

10. 27. 윤지상 의원

마한·백제 문화재 활용방안 모색 의정토론회 개최

마한·백제 유적과 유물에 대한 현황 파악 등 문화발전 위한 공립박물관 건립 시급



충남도의회가 마한과 백제 유적 및 유물에 대한 활용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의 장을 마련했다.

충남도의회는 27일 아산시 탕정온샘도서관에서 관련 전문가, 관계 공무원 등을 초청, ‘아산지역 마한·백제 문화재 활용 방안 구상을 위한 의정토론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윤지상 의원의 요청으로 진행된 이번 의정토론회는 아산의 특화된 문화 자원을 개발하고, 도민 역사·문화 향유를 위한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 됐다.

윤 의원은 이 자리에서 “아산지역은 1976년 남성리 석관묘 유적이 수습조사되면서 고고학적으로 주목을 받게 됐다”며 “학계에서는 아산지역을 마한의 맹주국인 목지국이 위치한 지역으로 비정하는 견해가 설득력을 높여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충남도는 능동적으로 마한 유적과 유물에 대한 활용 정책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며 “마한·백제 유적과 유물에 대한 현황 파악 및 자료집 발간 등에 대한 사업과 역사와 문화 발전을 위한 공립박물관 건립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기지사줄다리기 세계화 마케팅 전략 수립

10. 30. 김명선 의원

기지사줄다리기 세계화 추진 위한 토론회 마련

화합과 번영의 메시지 통해 국민 대화합 길 열 수 있도록 전략 등 수립해야



충남도의회는 10월 30일 당진시 박물관 공연장에서 기지사줄다리기 세계화 마케팅 전략 수립을 위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

김명선 의원의 요청으로 진행된 이번 의정토론회에는 정병웅 순천향대 교수가 축제의 발전 방향을 주제로 기초발제를 했다.

또 안본환 기지사줄다리기 보존회장과 조성춘 축제위원장, 정연창 도 문화유산과장, 설기호 관광마케팅 과장, 김경태 충남연구원, 박종희 당진시 문화관광 과장 등이 토론자로 나섰다.

좌장을 맡은 김 의원은 “기지사줄다리가 세계적인 무형문화유산으로 인정받은 만큼 민속축제도 세계적인 축제로 발전해야 할 것”이라며 “이 자리가 그 위대한 시작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지사줄다리기와 관련된 상품개발과 특화된 프로그램을 통해 국내 관광객뿐만 아니라 해외 관광객을 적극 유치해야 한다”며 “기지사줄다리가 가진 화합과 번영의 메시지를 통해 국민 대화합의 길을 열어갈 수 있도록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맞춤형 진로 교육 활성화 방안

11. 1. 장기승 의원

개인 맞춤형 진로교육 활성화 방안 모색

진로교육 관점에서 4차 산업혁명 파악... 향후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논의



충남도의회가 4차 산업혁명시대에 발맞춰 개인 맞춤형 진로교육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의 장을 마련했다.

충남도의회는 11월 1일 아산교육지원청 대강당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맞춤형 진로교육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

장기승 의원의 요청으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에는 서우석 경인교육대 교수가 좌장을, 고미영 도교육청 장학관이 주제발표를 맡았다. 이어 장 의원과 구성완 충남외고 진로진학상담부장, 나미애 온양여고 학부모, 서혁준 온양고 학생, 정인황 청주교대 학생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장 의원은 이 자리에서 "4차산업혁명이라는 혁신적인 기술은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사용하는지가 매우 중요하다"며 "더 나아가 진로교육의 관점에서 4차 산업혁명을 파악하고 어떻게 대응할지 준비하는 자세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전세계 0.2%에 불과한 이스라엘 민족이 노벨상 22%를 독차지할 만큼 뛰어난 업적을 보였다"며 "아일랜드의 전환학년제, 미국의 직업 워크숍(career Workshop), 일본의 케토 커리어(Ceto career) 등 사례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충남형 유아교육 발전방안 연구모임

11.2. 서형달 의원

유아교육 발전방안 연구모임 토론회 ‘성황’

자연체험활동을 통한 유아 인성교육 발전방안 모색... 다양한 의견 제시



충남도의회 충남형 유아교육 발전방안 연구모임은 11월 2일 서천 국립생태원 제1강의실에서 미래 유아교육의 발전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토론회는 자연체험활동을 통해 도내 유아들의 인성교육을 강화하고 이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서형달 의원이 좌장으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는 장성호 평택대일유치원 원장과 정재근 내포생태교육지원센터 소장이 주제발표를 맡았다.

토론 과정에서 누리과정 및 가정과 연계한 자연체

험활동, 전문 인력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 등에 대한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이날 참석한 유치원 교사 및 학부모들도 자연체험 활동 활성화와 인성교육 강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했다.

서 의원은 “유아기에 갖게 되는 자연과의 놀이 경험은 인성과 창의성까지 자극하는 유익한 활동이다”라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도출된 결과를 유아교육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며 의회차원에서도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연구모임

11. 21. 유병국 의원

충남도의회, 국제교류 활성화 위한 현장방문 길 올라

국제교류 활성화 연구모임...

서산 대산항과 당진 한국어 말하기 대회 등 국제교류 우수사례 확인



충남도의회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연구모임은 11월 21일 서산 대산항 국제여객터미널과 당진시 한국어 말하기대회 국제교류 사례를 찾아 추진 상황을 청취했다.

이날 현장방문은 지자체에서 시행중인 우수한 국제교류 사례를 벤치마킹해 타 지자체 전파 및 도정에 접목하기 위해 추진됐다.

유 대표는 이날 대산항에서 중국~서산 취항 준비 상황을 청취하고 계획 및 향후 가능성 등을 점검했다.

이어 찾은 당진 한국어 말하기 대회 현장에서는 그동안 추진 실적과 사례, 지역 관광 자원 교류 현황 등을 청취했다.

유 대표는 “지역의 관광자원 교류를 넘어 한국어라는 우리 민족의 우수한 언어를 중국과 교류하고 있다”며 “당진시 문화교류 우수사례가 앞으로 타 시도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전파하겠다”고 강조했다.

청소년 노동인권 현실과 개선방안

11. 22. 김종문 의원

청소년 노동 인권 문제 해결 앞장

설문 참여 청소년 56% 알바 경험 있어… 대부분 업주나 손님에게 갑질 당해



충청남도의회가 청소년 노동 인권에 대한 사회적 문제를 부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토론의 장을 마련했다.

충청남도의회는 11월 22일 충남교육연구정보원에서 ‘충남 청소년 노동인권 현실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

김종문 의원의 요청으로 이뤄진 이번 의정토론회는 노동인권 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 문제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김 의원에게 따르면 설문에 참여한 도내 청소년 1337명 가운데 아르바이트(이하 알바)를 경험해 본 경험이 있거나, 현재 하고 있는 학생은 755명(56%)

에 달했다. 이들이 알바를 하는 이유는 대부분 용돈과 통신비, 여행경비 마련을 위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대부분 학생이 업주나 손님 등으로부터 이른바 ‘갑질’을 당한 경험이 있다는 점이다. 청소년임에도 불구하고 22시 이후에도 노동을 강요받거나,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시급을 받은 것이 바로 ‘갑질’의 예이다.

김 의원은 “청소년의 권리가 침해당하는 부분이 바로 노동권이다”라며 “청소년 노동인권은 밖으로 드러나지 않고 암묵적으로 침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모바일 빅데이터와 지역자료 연계를 통한 공공정책 발굴 연구모임

11.27. 이공휘 의원

충남도의회 빅데이터 연구모임, 최종 보고회 개최

공무원, 전문가, 도의원 간 토론 통해 충남 빅데이터 정책 나아갈 길 마련



충남도의회 모바일 빅데이터와 지역자료 연계를 통한 공공정책 발굴 연구모임은 11월 27일 충남연구원에서 충남미래연구포럼을 겸해 연구활동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공휘 의원이 대표를 맡은 이 연구모임은 지난 3월 창립총회를 열고 해외 및 우수 민간기업에서 활용하는 빅데이터 활용기법을 행정기관에 접목하는 방안을 연구해왔다.

실제 보령머드축제부터 백제문화제 등 축제 현장을 찾아 빅데이터 분석기법을 활용, 무분별하게 측정되는 관광·관광객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또한 충남경찰청 빅데이터를 범죄 예방과 검거율을 높이는 시스템 도입을 제안하기로 하였다.

이날 최종보고회에서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천안·아산 상권 분석사례, 주요 축제 방문객 분석 등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대표는 “매년 관례적으로 증액되는 예산을 보며 과학적인 데이터에 근거한 정책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돼 연구활동을 실시하였다”며 “도가 빅데이터를 활용해 행정업무 혁신에 우수한 성과를 도출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충남도의회 다문화가정 연구모임

12. 8. 김홍열 의원

충남도의회 연구모임, 다문화가정 교육여건과 문화개선 방안 모색

한국적 다문화 특수성과 민족의 주체성 기반으로 외부문화 다양성 수용 필요성 제기



충남도의회 다문화가정 감수성 교육연구모임은 최근 충남도청 문예회관에서 ‘문화 그리고 다양성으로 소통하다’를 주제로 사례 발표회 개최했다.

이번 사례발표회에는 모임 대표인 김홍열 의원이 좌장을, 박동준 연세대 유럽사회문화연구소 교수가 발제자로 나섰다. 이어 이명구 광신중 교사와 김혜진 김스치료 교육상담센터 소장, 노일석 천안 준법지원센터 소장 등이 발제자로 참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16년 국내 체류 외국인인 20만 명이 넘었고, 이는 국내 주민등록 인구의 3.9%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 대다수는 편견과 차별, 인권 침해를 경험하며, 한국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우리 사회는 노동현장, 학교, 지역 공동체에서 다문화적 공존과 상호존중이라는 과제를 풀어나가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충남의 다문화 전문가들이 모인 만큼 다문화 가정에 꼭 필요한 지원정책을 발굴해야 한다”며 “한국사회가 다문화 사회로 진입한 시점에서 나아갈 방향은 한국적 다문화의 특수성과 민족의 주체성을 기반으로 외부 문화의 다양성을 수용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교수는 “다문화 가정뿐만 아니라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문화통합 및 다양성 교육의 절실하다”며 “지침서가 아닌 구체적이고 신뢰성 있는 매뉴얼이자 콘텐츠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 교사는 “각국의 고유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문화 체험의 기회를 상설화시켜야 한다”며 “다양한 외국 음식을 먹을 수 있는 타운 조성하는 동시에 간단한 언어로 소통할 수 있는 글로벌 존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충남 인권 문화 증진 위한 의정토론회

12. 14. 이공희 의원

명품 장재천 살리기 위한 의정토론회 개최

도와 중앙부처 적극적 지원 통해 유기적 협력 관계 구축 강조 ... 명품 하천 발돋움 기대



충남도의회가 기초단체에서 관리하는 지방하천의 관리 문제를 공유하고, 수질 개선 및 자연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한 토론회의 장을 마련했다.

충남도의회는 12월 19일 천안 한울문화센터에서 '명품 장재천 살리기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공희 의원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천안을)의 요청으로 이뤄진 이번 의정토론회에는 유원희 삼한엔지니어링 상무가 '도시하천유역 침수예방 대책'을 주제로 자료를 발표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장재천은 2002년 이후부터 호우발생 시 하천 수위 상승과 내수배제 불량 등으로 최대 30세대 가량이 침수피해를 겪고 있다.

이 의원은 "올해 천안지역은 국지성 집중호우로 533억 원의 피해를 입었다"며 "천안 장재천 주변은 여름철이면 상습적으로 물난리를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장재천 하천정비 사업은 이상기온으로 인해 예상되는 호우에 대비하기 위해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다"며 "주민의 생명과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이 수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충남 인권 문화 증진 위한 의정토론회

12.24. 김 연 의원

도내 인권 향상을 위한 의정토론회 개최

장애인, 다문화, 청소년, 노동 등 사회적 약자 인권 문제 인식하고 해결점 모색



충남도의회는 12월 14일 충남개발공사 대회의실에서 관련 전문가,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충남 인권 문화 증진을 위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

김연 의원의 요청으로 이뤄진 이번 의정토론회에는 김형완 인권정책연구소장이 주제발표를, 홍수아 베트남 통번역사와 황영란 다남길장애인자립센터장 등이 토론자로 나섰다.

좌장을 맡은 김 의원은 이 자리에서 “이번 토론회는 다문화 가정을 비롯한 장애인, 청소년, 노인,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점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됐다”며 “인권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이를 해결하는 초석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인권증진은 당사자의 입장에서 충분히 이해하고 고민하는 과정 속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다”며 “이번 토론의 자리가 우리 충남도 인권 향상을 위한 자양분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소장은 기초발제를 통해 “오늘의 시민권은 자유로운 시민만이 아닌, 모든 사람에 대한 존엄성 보장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권력분립과 자치 강화 방향으로 재편돼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고 강조했다.



- 01 10월 24일 김종문 위원장, 김원태 의원, 정광섭 의원, 이공휘 의원, 윤지상 의원은 제주도 일원에서 열린 의회운영위원회 연찬회에 참석했다.
- 02 10월 25일 이종화 의원은 국회의사당에서 2017 대한민국 탑리더스 대상에 선정돼 우수의정활동부문 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 03 11월 2일 윤석우 의장은 공주시 아트센터 고마에서 열린 제3회 환황해 포럼에 참석해 축사를 했다.
- 04 11월 2일 윤석우 의장, 신재원 제1 부의장, 김석곤 의원, 백낙구 의원은 보령시 문화의 전당에서 열린 2017 충남 건축공공디자인 문화제에 참석했다.





05



06



07



08

- 05 11월 4일 김기영 의원은 덕산스파캐슬에서 열린 동북아 평화를 위한 2017 국제심포지엄에 참석해 지방의회의 역할에 대한 주제발표를 했다.
- 06 11월 20일 윤석우 의장은 충남도 문예회관에서 열린 희망 2018 사랑의 온도탑 제막식에 참석했다.
- 07 11월 20일 김 연 의원은 덕산스파캐슬에서 열린 2017 충남도 의용소방대장 워크숍에 참석했다.
- 08 12월 4일 윤석우 의장, 신재원 제1부위원장, 조치연 제2부위원장은 도청 로비에서 열린 불우이웃돕기 성금 모금 일일 찾집을 찾아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09



10



11



12

- 09** 12월 8일 신재원 제1부위원장, 강용일 농경환위원장, 김종필 의원, 김명선 의원은 예산 윤봉길 체육관에서 열린 2017 충청남도 새마을운동 전진대회에 참석했다.
- 10** 12월 13일 윤석우 의장은 국회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 열린 서해안권 해양수산 공동상생 발전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했다.
- 11** 12월 13일 김연 의원은 서울 영등포아트홀에서 열린 2017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시상식에서 광역의원 공약이행 부분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 12** 12월 15일 윤석우 의장, 신재원 제1부위원장, 이용호 의원, 송덕빈 의원, 이기철 의원, 유찬중 의원이 2017 충남도의회 의정활동 우수의원 시상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우수의정대상 시상식

7년 12월 19일(화) 장소 정부세종컨벤션센터 국제회의장 4층 주최 전국시·도의회



13



14



15

- 13 12월 19일 김종문 의원, 김종필 의원, 이종화 의원, 정광섭 의원, 김홍열 의원, 오배근 의원 등 6명의 의원이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2017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 14 12월 22일 조치연 제2부장과 맹정호 안건해소위원장은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대한민국을 빛낸 21세기 한국인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 15 12월 23일 조길형 의원이 서울 백범김구기념관 컨벤션홀에서 '2017년 위대한 한국인 100인 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2018년도 의회운영 기본계획



회기 : 8회 120일(정례회 2회 49일, 임시회 6회 71일)

※ 예비일수 : 20일 ※ 연간회의 가능 일수 : 140일(정례회 60, 임시회 80)

회기별	기 간	주 요 안 건	비 고
제301회 임시회	1. 23.(화) ~ 2. 2.(금) (11일간) ※ 본회의2, 상임(특)위7, 공휴일2	• 2018 주요업무 보고 (행정사무감사처리상황 포함) • 조례 제 · 개정안 등 처리	• 새해첫날(1. 1.) • 설연휴(2.15.~2.17.)
제302회 임시회	3. 6.(화) ~ 3. 15.(목) (10일간) ※ 본회의4, 상임(특)4, 공휴일2	• 도정 · 교육행정 질문 •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 조례 제 · 개정안 등 처리	• 삼일절(3. 1.)
제303회 임시회	4. 3.(화) ~ 4. 12.(목) (10일간) ※ 본회의2, 상임(특)6, 공휴일2	• 조례 제 · 개정안 등 처리	
결산검사 (4. 13. ~ 5. 2.) : 20일 예정			
제304회 정례회	6. 18.(월)~6. 26.(화) (9일간) ※ 본회의2, 상임(특)위3, 예결위2, 공휴일2	•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 • 조례 제 · 개정안 등 처리	• 현충일(6.6) • 지방선거(6.13) • 제11대 의정설명회(6.26)
제305회 임시회	7. 2.(월)~7. 19.(목) (18일간) ※ 본회의5, 상임(특)위9, 공휴일4	• 제11대 의회 전반기 원구성 • 2018 주요업무추진 상황보고 • 2018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 • 조례 제 · 개정안 등 처리	
제306회 임시회	9. 4.(화) ~ 9. 14.(금) (11일간) ※ 본회의4, 상임(특)위5, 공휴일2	• 도정 · 교육행정 질문 • 2018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 • 조례 제 · 개정안 등 처리	
제307회 임시회	10. 1.(월) ~ 10. 11.(목) (11일간) ※ 본회의2, 상임(특)위5, 공휴일4	• 조례 제 · 개정안 등 처리	
제308회 정례회	11. 5.(월) ~ 12. 14.(금) (40일간) ※ 본회의4, 행감10, 상임(특)위2, 예결위4, 공휴일10	• 2018 행정사무감사 • 도정 · 교육행정 질문 • 2019 본예산, 2018 추경 예산안 처리 • 조례 제 · 개정안 등 처리	

모바일 홈페이지

스마트폰에서 충청남도의회를 실시간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모바일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세요.

접속방법

- ① 스마트폰 브라우저에 URL주소
(council.chungnam.go.kr) 입력
- ② PC버전 홈페이지 하단에 QR코드 스캔

도민과 양방향 소통을 위한 SNS 운영

-  <http://blog.naver.com/cncouncil>
-  <http://www.facebook.com/cncouncilNP>
-  <http://mobile.twitter.com/council>
-  카카오톡에서 Cnc12 검색 후 소식받기

의회 방청 안내

의회홈페이지(<http://council.chungnam.go.kr>)
참여마당에서 방청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 후
팩스(041-635-5009)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방청문의 총무담당관실 041-635-5054

방청시 유의사항 ※ 아래 사항은 금지됩니다.

- 방청석을 이탈하여 회의장 안으로 진입하는 행위
- 회의장 발언에 대한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치는 행위
- 허가없이 녹음, 녹화, 촬영하는 행위 등

의회소식지 구독 신청방법

이메일 | min1229@korea.kr
전 화 | 041-635-5102
팩 스 | 041-635-5009
우 편 | 충청남도 예산군 삼교읍 도청대로 600(충청남도의회)
※ 구독신청서는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도민과 함께하는
충청남도의회



충청남도의회
CHUNGCHEONGNAM-DO COUNCIL

도민과 함께 미래를 열어가는 충청남도의회

도민과 소통하는 **공감의정**

발로 뛰며 찾아가는 **실천의정**

슬기로운 지혜로 변화를 선도하는 **창조의정**



충청남도의회
CHUNGCHONGNAM-DO COUNCIL